

2015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 PAPER

발 | 간 | 사 MESSAGE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북한은 우리와의 대화와 협력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사일 발사, 서해 NLL 침범 등 우리를 향한 거듭된 도발로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동북아에서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남과 북, 주변국간 협력과 갈등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가져올 미래 비전이자,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여 세계적으로도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자력을 모아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가야 합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와 민간의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평화통일 과제를 발굴·연구하였으며,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0월 마지막 주를 통일문화주간으로 설정하여 문화와 통일의 융합을 시도하고,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통일 미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리 온 통일 세대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도 개편하여 통일지향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이 높아졌으며,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 내의 기대감이 상승하였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의연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한 결과 7년 만의 남북고위급 접촉과 3년 만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드레스덴 구상, 환경·민생·문화 통로의 개설 등 남과 북이 서로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협력사업을 북한에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말에 북측에 제안한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의 대화 역시 통일지향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의도한 만큼 진전되지는 못했지만,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하여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고 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북합농촌단지 등 민생인프라 구축의 기초가 다져졌고,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인 나진-하산 물류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다양한 분야의 순수 사회문화 교류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고양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통일준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도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를 통해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감대도 형성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2015 통일백서」의 독자 여러분, 2015년은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화와 실질적 통일준비의 심화를 통해 통일 시대의 문을 열어 가야 합니다. 국민이 참여하고, 북한과 함께하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한 걸음씩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간다면, 통일이라는 미래는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2015년 통일백서」에는 지난 1년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달성을 향한 정부의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이번 백서를 읽는 모든 분들이 한반도 통일의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4월

통일부장관 홍 문 도

발간사

제1장 실질적 통일준비

제1절 _ 통일준비 추진	14
① 통일준비 구상	14
②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및 활동	16
③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 공론화	23
④ 문화를 통한 통일공감대 형성	25
제2절 _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31
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속 추진	31
②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발표	34
③ 광복절 경축사 '3대 통로' 제시	36
제3절 _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38
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38
② 통일외교 활성화	43
③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52

제2장 남북 교류협력

제1절 _ 남북경제협력	60
① 남북 교역	60
② 「남북러 3각협력」 사업 추진(나진-하산 물류사업)	63
③ 「5.24 조치」의 이행과 기업애로 경감 대책 마련	65
제2절 _ 개성공단 사업	68
①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68
② 입주기업과 생산 현황	71
③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75
④ 법·제도 및 사업지원체계	78
⑤ 기업 투자 지원	81
제3절 _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88
① 종교 교류	88
② 문화유산 및 예술 교류	89
③ 체육 교류	91
④ 지방자치단체 교류	93
제4절 _ 남북 출입통행 및 운송	94
① 출입통행 현황	94
② 남북 출입통행 절차	99

제3장 남북 간 인도적 문제

제1절 _ 남북 이산가족	108
①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108
②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	111
③ 이산가족 교류 인프라 구축	112
제2절 _ 국군포로·납북자	113
① 국군포로·납북자 현황	113
②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114
③ 전시 납북자 명예 회복 노력	115
④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	119
제3절 _ 인도적 지원	120
①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	120
② 정부차원의 지원	121
③ 민간차원의 지원	123
④ 분배 투명성 확보	123
제4절 _ 북한 인권	125
① 국제사회와의 협력	125
② 민간단체의 인권개선활동 지원	128
③ 북한인권법 제정 노력	129

제4장 남북대화

제1절 _ 정치·군사분야 회담	134
① 남북고위급접촉	134
②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	136
③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140
제2절 _ 경제분야 회담	142
①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	142
②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144
③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1차 회의	146
제3절 _ 사회문화·인도분야 회담	148
①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148
②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남북 실무접촉	151
제4절 _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	154

제5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1절 _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164
① 사회적응 기본교육 프로그램 운영	164
② 초기 직업교육 및 진로 설계	165
③ 아동·청소년 교육	167
④ 초기 건강관리	168
⑤ 심화교육·직무교육	170
제2절 _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정착지원	173
① 초기 정착지원	173
② 거주지에서의 보호 및 지원	180
③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 및 자산형성 지원	183
④ 미래 통일인재 육성을 위한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188
⑤ 생활안정 지원	190
⑥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력 및 인식 개선	192

제6장 통일교육

제1절 _ 통일교육 추진기반 확충	198
① 기본계획 및 지침	198
②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199
③ 제2회 통일교육주간 운영	201
제2절 _ 통일교육과정 운영	203
① 원내 초청교육	203
② 사이버 통일교육	207
제3절 _ 학교통일교육 지원	209
①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209
② 청소년을 위한 참여·체험형 교육	209
③ 학교통일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교원전문성 제고	212
④ 대학사회 통일교육 지원	214
제4절 _ 사회통일교육 지원	215
① 제19기 통일교육위원협의회 출범	215
②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217
③ 통일관 운영 및 통일교육협의회 지원	218
제5절 _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220
① 통일교육 기본교재	220
② 눈높이 영상교육자료	222
③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시리즈	223
④ 영문판 교육자료	224

제6절 _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	227
① 건립 경과	227
② 시설 개요	228
③ 개관식 개최	230
④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231

제7장 정책추진 기반 강화

제1절 _ 북한 정보 서비스 및 북한·통일 연구 기반 확대	238
① 북한정보포털 서비스 운영	238
② 북한정보 수집·관리	239
③ 북한·통일 연구기반 확대	242
제2절 _ 법·제도적 기반 구축	249
①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49
② 통일법제 구축사업	253
제3절 _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257
① 남북협력기금 수입	257
② 남북협력기금 지출	258

부록

I. 남북관계 주요 일지	264
II. 남북관계 주요 통계	291
III.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301
IV. 통일부 국정과제·브랜드과제 현황	305

찾아보기	307
------------	-----



에
일
백
서

제1장 실질적 통일준비

제1절 통일준비 추진

제2절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제3절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제1장 실질적 통일준비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설정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실질적인 통일준비도 추진해 왔다.

정부는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을 신뢰 형성의 길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왔다. 2014년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드레스덴 구상」과 「민생·문화·환경 3대 통로」를 제시하고, 남북간 대화를 통해 이러한 구상의 이행방안을 협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남북 대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남북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었지만, 북한이 평화를 깨는 잘못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는 올바른 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차근차근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2014년에 실질적 통일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통일준비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더 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하며,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과 주민, 국제사회가 통일로 가는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통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2014년에는 통일준비의 방향과 추진체계를 정립하는데 주력하였다. 2014년 1월 6일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제시하였으며, 2월 25일에는 민관 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추진하고, 통일문화주간을 선포하는 등 통일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여 젊은 세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긍정적이고, 친근하게 인식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한반도 통일이 국제사회에도 ‘대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주변국가들과 국제통일전략대화를 개최하는 등 통일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국제사회가 통일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나진·하산 물류 협력사업 등 남북한과 주변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통일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여 남북 대결의 상징인 DMZ를 평화의 관문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 제1절 통일준비 추진

① 통일준비 구상

(1) ‘통일대박’ 비전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bonanza)’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평화와 번영의 기회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 또한 일회적인 편익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천이 될 것임을 극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과 함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조치도 제시하였다. 첫째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비핵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적극 돕겠다는 의지도 피력하였다. 둘째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북 주민간 동질성을 회복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단체들이 힘을 합쳐 북한의 농업과 축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셋째로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통일은 국제사회가 지지할 때에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역내 국가 모두

에게 도움이 되는 통일을 추구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의 든든한 우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통일대박론’ 발표(2014.1.6)

-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2) 통일준비 추진 체계

통일 대박 언급 이후 각계각층에서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특히 통일로 가는 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대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통일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연구와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심층적인 논의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사이에 상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때 비로소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정부 부처 이 외에 민관 협업 기구가 필요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담화에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발표(2014.2.25)

-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

②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및 활동

(1)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후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 내외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3월 21일에는 통일준비를 위한 근거 법령으로 대통령령인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였고, 7월 15일에는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인선을 발표하였다.

구체적 인선내용을 살펴보면, 「통일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을 포함, 민간위원 30명, 국회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되었다. 부위원장은 2명으로 민간위원 중 1명, 정부위원 중 1명이 맡게 되는 바, 박근혜 대통령은 민간 부위원장에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

를, 그리고 정부 부위원장에 통일부장관을 임명하였다. 민간위원은 총 30명으로 통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선임하였고,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학계, 관계, 경제계, 사회단체 등 폭 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배경과 철학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였다. 위촉된 위원들은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30여명 위촉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외교안보 분야】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 회장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이숙종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한승주 한미협회 회장

【사회문화 분야】

고 건 前 국무총리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김성재 연세대 석좌교수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양호승 월드컵전 회장
 전우택 연세대 의대 교수
 최경자 서울공덕초 교장

【경제 분야】

김동근 한국산지보전협회 명예회장
 김영훈 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교수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
 함범희 前 코레일 센터장

【정치법제도 분야】

강인섭 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 대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함광복 한국 DMZ연구소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명단〉

【외교안보 분야】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이호령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황인무 前 육군 참모차장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사회문화 분야】

김동선 경기대 스포츠경영학 교수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소장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
 황나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경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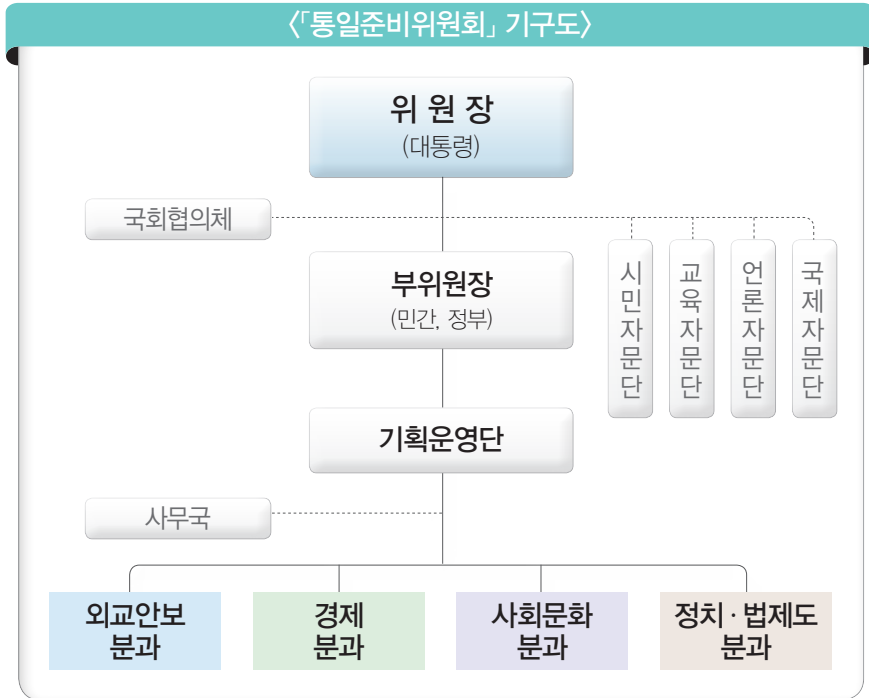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영희 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원
 이춘근 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주 LH공사 국책사업본부장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태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조유현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최이섭 자산관리공사 연구원
 허준행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정치법제도 분야】

김용호 연세대 북한연구원장
 김종수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통일전문위원
 박노섭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
 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소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또한 국회에서는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2명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정부 위원은 부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NSC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통일준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민관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한국개발연구원, 국방연구원, 국토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였다.

한편, 시민자문단, 언론자문단, 통일교육자문단 등도 구성하였으며, 「시



민자문단」에는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총 12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통일교육자문단」에는 대학총장 30명과 고교 교장 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언론자문단에는 전현직 언론인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통일준비를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범·제도적 협력을 위해 국회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여기에서 민·관·정이 함께하는 통일준비의 협력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통일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었으며, 사무국은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10명, 전문 임기제 공무원 5명, 사무보조 6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예산으로는 회의, 정책연구, 홍보 등 사업비가 17억 3천만원, 인건비 등 사무국 운영비가 8억 8천만원 등 총 26억 1천만원이 책정되었다.

(2) 주요 활동

「통일준비위원회」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를 위해 첫째,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방향 마련, 둘째, 통일 준비 관련 제반 분야의 과제 발굴과 연구, 셋째,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통합 등 사회적 합의 촉진, 넷째, 통일 준비를 위한 정부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 간 협력 등을 주요 기능과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 주재하에 2014년 8월 7일 1차 전체회의 이후 12월까지 총 3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먼저 1차 전체회의에서는 민간부위원장이 「통일준비위원회」의 운영 기본방향」을 정부부위원장이 「민·관 협업방향」에 대해 보고하였고, 민간위원들이 「통일미래 청사진」, 「평화통일의 과제」, 「국내·국제 통일준비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014.10.13)

10월 13일 개최된 2차 전체회의에서는 민간부위원장이 「통일준비위원회」 활동경과를, 정부부위원장이 「남북관계 주요현황 및 정책추진방향」을

보고하였고, 경제분과에서는 ‘北주민 생활인프라 개선’, 사회문화분과에서는 ‘모자 1000일 패키지 사업’, 정치법제도분과에서는 ‘통일현장 추진방향’, 외교안보분과에서는 ‘新평화구상’ 등을 발표한 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12월 2일 개최된 3차 전체회의에서는 민간부위원장이 ‘통일준비위원회 활동보고’를, 정부 부위원장이 ‘민·관 협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였고, 사회문화분과에서 ‘인도적 개발협력’, 경제분과에서 ‘농촌 자립기반 구축방안’, 정치법제도분과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외교안보분과에서는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고, ‘통일준비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정부측은 민관협업체계인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위원들로 구성된 「정부위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부위원장 주재로 2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부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실국장들로 구성된 「실무지원 협의회」도 2차례 개최하여 정부내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통일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2014년에 총 20개의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민들의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공개세미나를 4회 개최하였고, 언론 자문단 등 자문단과 7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지난 12월 29일에는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통일준비를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하였으며, 「통일준비위원회」의 2015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통일준비를 위해 상호협력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하였다.

〈 2015년 「통일준비위원회」 추진과제〉

- 민족동질성 회복사업 △언어·민족문화유산 보전사업 △스포츠 등 민간교류 △남북축구 대회 △평화문화예술제 △세계평화회의 등
- 인도적 문제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 및 영상편지 교환 △상봉 정례화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생태계 공동 조사
- 행복한 통일시대 △보건·영양개선사업 △생활 인프라 개선 △산림녹화·생태·환경보전 △수자원 공동이용
- 남북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다자 경제협력 사업 등

(3) 주요 성과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대박 가능하다’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새로운 주제로 대국민 공개 세미나를 4회 개최하여 통일의식이 생활속에 뿌리내리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언론자문단 회의 2회, 시민자문단 회의 4회, 교육자문단 회의 1회를 개최하여 여론주도 계층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 관련 전문가 그룹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민간의 통일 추진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민간·정부 부위원장간 정례회의, 기획운영단회의, 분과위-정부 연석회의 등을 통해 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통준위 분과위원장 회의, 분과별 회의를 통해 발굴된 과제가 정책으로 입안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정부협의회와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실무지원 TF를 가동함으로써 민관이 함께하는 범국가적 통일준비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를 통해 통일청사진 제시, 인도적 지원 및 민생인프라 구축,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상생과 융합의 생태환경 통합, 국

민 통일공감대 확산 등 주요 분야별로 통일준비를 위한 핵심 연구과제를 구체화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설립으로 그동안 정부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통일준비에 처음으로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본격 참여하게 됨으로써 통일준비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민관이 함께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③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 공론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으로, 자주·평화·민주의 원칙하에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마련되고 1994년 한차례 보완된 이래, 역대 정부에 의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계승되어 왔다.

그러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2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일방안을 보다 발전적으로 계승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담론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재결집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되,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여 왔다. 우선 2013년에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변화된 환경 및 통일방안의 발전 필요성을 검토한데 이어, 2014년에는

통일방안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특히 2014년에는 통일방안 발전의 기본 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주요도시 및 해외교민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분기별 여론조사,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상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통일방안의 계승·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였다.

【2014년 공론화 추진실적】

분류	추진내용	일시·장소
국내 공론화	공개세미나	부산(11월 14일, 동아대)
	공개세미나	광주(11월 21일, 전남대)
	공개세미나	서울(12월 11일, 동국대)
해외 공론화	교민토론회	영국(11월 2일~11월 5일)
	전문가토론회, 교민간담회, 강연회	중국(11월 27일~11월 29일)
	강연회, 간담회	미국(12월 8일~12월 14일)
여론조사	통일부 여론조사	분기별 실시(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민주평통 국내정기회의 의견수렴(3분기)	228개 지역협의회 및 세종지역회의 (8월 11일~9월 5일)

국내외 공론화의 경우, 국내 대도시(서울, 부산, 광주)에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 교민(영국, 중국, 미국)을 대상으로 강연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통일국가의 비전·미래상’, ‘바람직한 통일의 원칙과 과정’ 등을 주요 주제로 논의함으로써 통일방안 발전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준비위원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론화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국 교민 강연회(2014.11.27, 우저우)



미국 동포 강연회(2014.12.9, 워싱턴)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고 통일방안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또한 통일의 비전·청사진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국민의 통일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등 실질적 통일을 준비해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통일부는 2015년에도 공론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구체적인 통일방안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④ 문화를 통한 통일공감대 형성

정부는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 「문화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2014년부터 문화를 통한 통일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주로 남북관계, 정치·경제 그리고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여전히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무겁고 재미없는 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젊은 세대의 특성에 맞게 통일문제를 문화로 접근하여 분단과 통일이라는 화두 속에 담겨있는 문화적 모티브를 활용한다면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일을 소재로 한 음악, 영화, 미술작품, 시와 소설, 나아가 옷이나 생활용품까지 만들고, 젊은 세대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이를 즐기고 공유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마음을 모아나가고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해 나가고자 한다.

(1) 「2014 통일문화주간」 개최

2014년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작! 하나로」라는 슬로건하에 광화문광장, 파주, 도라산역 등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인, 일반국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2014 통일문화주간」 행사를 추진하였다.

「2014 통일문화주간」 행사는 국민들이 문화를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통일’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통일문화적 접근」에서 추진하였으며, 각계 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의 주도적 참여와 협업을 바탕으로 「파주평화발전소 미술제», 「남북영화상영전», 「To be One 콘서트», 「통일국악한마당», 「통일디자인 Show», 「청소년 통일문화경연대회」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행사가 추진되었다.

❖ 파주평화발전소 미술제(Paju Peace Station)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분단의 최전선인 판문점, 도라산역,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국내외 작가 18명의 평화와 화합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 작품 20여점을 전시하였다. 10월 11일 파주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통일부장과 작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평화와 통일을 담은 축하공연과 함께 전통 낙화놀이도 시연되었다.



파주평화발전소 미술제(2014.10.11~11.30)

* 남북영화상영전(영화를 통해 통일을 꽃피우다)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의 20개 CGV·롯데시네마 상영관에서 분단과 통일을 주제로 한 우리 영화, 가족애·로맨스·스포츠 등을 주제로 하는 북한소재 해외영화, 북한영화 등 총 8편을 무료로 상영하였다. 10월 25일 여의도 CGV에서 열리는 개막행사에서는 통일부장관, 영화배우, 영화감독 등 총 70여명이 참여하여 ‘한반도 통일염원 핸드프린팅’ 제막행사를 하였으며, 영화 ‘굿바이 평양’을 상영하였다.

‘한반도 통일염원 핸드프린팅’ 조형물은 CGV 여의도점과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 설치되었으며 금번 상영전을 통해 국민들이 분단의 현실과 북



남북영화상영전 ‘한반도 통일염원 핸드프린팅’ 조형물 및 제막행사(2014.10.25)

한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여,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 광화문 광장 행사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일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는 「통일디자인 Show」와 「To be One 콘서트」 「제1회 청소년 통일문화경연대회 본선」 「통일국악한마당」이 개최되었다.

10월 31일 ‘춤추는 한반도에 옷을 입히다’는 주제로 펼쳐진 통일디자인 Show에는 혜춘 김학수 화백의 ‘한강대전도(漢江大全圖)’를 활용하여 통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디자인한 의상을 음악과 함께 국민들에게 선보였다.

그리고 록그룹 부활과 인디밴드 등이 공연하는 ‘To be One 콘서트’가 펼쳐졌다. 이 공연에서 그룹 부활은 5월부터 ‘한반도 부활프로젝트 70’이란



광화문 광장 행사(2014.10.31~11.1)

이름으로 작곡해 온 통일 노래 ‘To be One’을, 인디밴드 ‘에이프릴 세컨드’와 ‘자보아일랜드’는 각각 ‘끈’과 ‘세컨드 찬스’를 불렀다.

11월 1일에는 김혜란·김영임 명창을 비롯한 국악인들이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통해 남북이 하나됨을 기원하는 ‘통일국악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번 통일문화주간 행사를 통해 통일에 대한 문화적 접근의 시작을 알리고, 그 준비과정에서 각계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여 통일문화네트워크의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14 통일문화주간」 개요】

행사명	주요 내용
파주 평화 발전소 미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끝과 시작 • 기간 : 2014.10.11(土)~11.30(日) • 장소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도라산역, 판문점 자유의 집 • 작품 : 평화와 화합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 작품 20점 • 참여작가 : 故 백남준, 이불, 최우람, 이우환, 강익중, 함진, 마리오 모리, 올라퍼 엘리아슨, 시마부쿠, 전준호, 치호 아오시마, 요시히로 스다, 김혜련, 박기원, 김승영, 장우정, 플라잉시티, 황지해 • 주최 : 출판도시문화재단, 통일문화네트워크
남북영화 상영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4.10.25(土)~10.31(金) • 장소 : 전국 주요도시 CGV·롯데시네마 상영관(20개) • 상영작 : 코리아(2012), 간큰가족(2005), 고지전(2011), 국경의 남쪽(2006), 디어평양(2006), 굿바이평양(2009), 천리마 축구단(2002), 자매들(1993) • 주최 :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광화문광장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4.10.31(金)~11.1(土) • 장소 : 광화문 북측광장 • 주요행사 : 통일디자인 Show, 'To be One' 콘서트, 제1회 청소년 통일문화경연대회, 통일국악 한마당 • 주최 : 통일문화네트워크, 유니쉐어, 한국국악협회

(2) 통일문화 인프라 구축

「문화를 통한 통일」 운동이 실질적으로 성과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통일문화에 관심과 뜻이 있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창의와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통일을 주제로 하는 전시와 공연 등을 펼쳐나간다면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문화네트워크」가 2014년 4월 3일 준비모임을 거쳐 6월 27일 출범식을 개최하였으며, 자발적인 통일문화 활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활동의 장을 만드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 제2절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속 추진

정부는 2014년에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고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남북간 신뢰는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축적될 수 있다. 남북간 신뢰 형성 노력과 함께 북한의 도발과 합의 파기 등 잘못된 행동에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북한이 남북간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도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온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남북간 신뢰가 형성되려면 무엇보다 남북간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북한을 대화의 장에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2014년 초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2.5)하여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북한 체제를 비방증상 했다고 주장하며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무산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다른 사안과 연계한 북한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이미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그 결과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2.20~25)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남북은 7년 만에 남북고위급접촉(2.12, 2.14)을 개최하였다. 남북고위급접촉에서 양측은 서로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비방·중상 중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고 서해 NLL 침범, 단거리 미사일 발사, 추가 핵실험 위협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 민간단체 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한 남북적십자실 무접촉 제의(3.5),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실무접촉 제의(4.22), 북한 억류 우리 국민 관련 실무접촉 제의(6.10) 등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9월부터 인천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은 남북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북한은 ‘공화국 성명’(7.7)을 통해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7.10)하였다. 정부가 북한의 제의에 화답하면서 남북실무접촉(7.17)이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남북실무접촉은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퇴장하면서 결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도적 문제를 포함한 쌍방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개최할 것을 북한에 다시 제의(8.11)하였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8.15), 통일부 대변인 성명(8.18)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측에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다가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10.4)에 고위 대표단(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김양진 비서 등)을 보내고, 이들의 방문 계기에 열린 남북오찬회담에서 양측은 10월말에서 11월초 사이에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2차 고위급접촉도 개최되지 못하였다. 한편, 「통일준비위원회」는 12월 29일 2015년 1월 중 남북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

를 가질 것을 북한에 공식 제의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의 대화 제의는 광복 70주년인 2015년에 남북이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는 인식 아래 민·관 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가 2014년 한 해 동안 준비해온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북측에 설명하고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5.24 조치 해제 등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부당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부당한 요구나 위협에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드레스덴 구상」, 「민생·문화·환경 3대 통로」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하여 통일지향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도 제시하였다. 「드레스덴 구상」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포괄적 교류협력 구상이며, 「민생·문화·환경 3대 통로」 제안은 「드레스덴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우선적으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 협력 사업들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구상들이 ‘흡수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상기 구상들에 담긴 교류협력사업들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하고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해 오고 있다.

②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발표

2014년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이하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북한에 평화통일 기반을 만들기 위해 ①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나갈 것, ②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 ③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설 것을 제안하였다. 이 구상의 가장 큰 의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초 위에 구체적인 교류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먼저,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벌써 절반 가까운 이산가족이 사망했고, 연간 3000명 이상의 이산가족들이 돌아가시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여 분단의 고통을 치유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영유아와 산모는 취약계층임과 동시에 이 시기의 영양 부족은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유엔과 함께 북한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통해 이들의 영양 개선, 보건 의료 환경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여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드레스덴 구상」에서의 교류협력은 일회적이거나 이벤트성의 협력을 지양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북이 함께 북한 지역의 농축산 및 산림을 개발하고, 신뢰형성에 따라 남한은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북한은 남한에 지하자원 개발권을 제공하는 식의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켜나간다면, 남북한 모두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나진-하산 물류사업과 같은 남북러 협력사업, 남북중 3각협력 등을 추진해 나간다면 공동번영의 지평을 국제사회에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주민간 동질성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전체 국민의 약 92%가 분단 이후 출생한 세대일 정도로 남북간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다방면에서 접촉과 교류를 늘려 상호간 이해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역사·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늘려 나가고, 통일 미래세대인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해 나간다면 남북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통일된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도 고려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을 넘어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견인할 수 있는 열쇠이다.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부터 북한 지역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남북한과 이웃국가, 국제기구 및 NGO 단체들이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통일 한반도가 평화와 통합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드레스덴 구상」의 이행 과정은 통일을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며, 남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한국의 편익을 체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북한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함께 추진방안을 논의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주요 내용

-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
 -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유엔과 함께하는 북한 모자 패키지(1,000days) 사업 추진
 -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복합농촌단지 조성, 경제개발 협력(南:교통통신 건설투자, 北:지하자원 개발 허용), 남·북·러 / 남·북·중 3각협력
 -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역사·문화예술·스포츠 교류 장려, 북한 인력 경제교육,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 ↳ 3대 제안 실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 남북한과 UN이 함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 북한 핵포기 결단시, 北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

③ 광복절 경축사 ‘3대 통로’ 제시

2014년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계기에 남과 북이 서로 만나 소통하기 위한 환경, 민생, 문화의 ‘3대 통로’를 북한에 제안하였다. 「드레스덴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남북 주민의 행복과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 가능한 협력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3대 통로’로 제시된 환경, 민생, 문화는 정치·군사와 같은 분야보다 협력하기 쉽고, 또 우리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하나로 융합해 나가기에 적합한 분야이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러한 분야 중에서도 남북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사업들부터 제시한 것이다.

민생 통로를 통해서서는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협력에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경제개발 노하우 공유, 북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열어나갈 것이다. 문화의 통로를 통해서서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해 나가고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남북이 함께 광복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환경의 통로를 통해서서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남북간에 이러한 작은 통로부터 열어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간다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작은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제도적,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큰 통일’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 광복절 경축사 '3대 통로' 주요 내용

- (3대 통로 협력)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서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
 - ① (환경협력의 통로)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확대
 -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 참여를 희망
 - ② (민생의 통로)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협력 본격 시작
 - 우리 경제개발 노하우 공유, 北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성장모델 제시 가능
 - ③ (문화의 통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할 것을 제안
 -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이 함께 광복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사업 준비

▶ 제3절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1)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



2013년 5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하였고, 8월 15일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공원 조성을 제의하였다.

2014년에도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3.28), 제69차 유엔(UN) 총회 기조연설(9.25)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공원 구상을 재차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제69차 유엔(UN)총회 기조연설에서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출발점이자, 남북 주민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소통할 수 있는 생명과 평화의 통로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 2013년 5월 8일 박근혜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2013년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

-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를 북한에 제안합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듦으로써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14년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

- “DMZ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철조망과 지뢰를 걷어내고 생명과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의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2014년 9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유엔(UN)총회 기조연설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생명과 평화의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유엔이 앞장서 주길 부탁드립니다. 유엔 주도 하에 남북한, 미국, 중국 등 전쟁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인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며 공원을 만든다면, 그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하에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함께 비무장지대 내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생명과 평화, 협력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주민과 세계인이 상호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셋째,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고, 운영할 것이다.

분단과 대립의 상징이 되어버린 비무장지대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이 조성된다면 실질적 통일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기념비적 공간이 될 것이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남북으로 단절된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연결하고,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며, 이용하게 된다. 또한 공원 조성·운영 과정에서의 협력 경험을 토대로 사회·문화·민생 등 다방면의 협력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생태평화공원 내에 남북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작은 통일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60년 분단에 따른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북 주민이 서로 마음을 열어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의 일부 공간을 무기가 사라진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면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성과

정부는 사업추진 첫 해인 2013년에 공원구상을 구체화하고, 유관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2014년에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남북합의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분야별 연구용역은 「공원기본구상」, 「추진전략」, 「기본계획」, 「법·제도적 기반구축」,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뢰제거 방안」 등이며, 2015년 7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현황

- 「DMZ세계평화공원 기본구상(도화엔지니어링) : DMZ 세계평화공원 입지여건 분석 및 조감도 수립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추진전략(통일연구원) : 공원 조성사업의 비전 · 운영전략 · 발전방향 등 분석
- 「DMZ세계생태평화공원 법 · 제도적 기반구축(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공원 조성 · 운영을 위한 법 · 제도적 기반 마련 ·
-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도화엔지니어링 · LH) : 후보지별 개발여건 분석 및 조성계획 수립
-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뢰제거 방안(유신 · ERW · GICHD) : 환경친화적 지뢰제거 방안 마련

공원 후보지 현지조사를 위해 「정부·민간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2014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단은 환경·생태, 접근성, 지역 연계성 등 7개 분야의 지표에 따라 후보지역별 장단점 및 후보지역별 특성을 평가하였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통일부는 환경부와 함께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의 부대행사로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협력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2014년 10월 8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네스코(UNESCO) 등 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비무장지대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014년 11월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공원총회에 정부 대표단(통일부·환경부·제주도)을 파견하여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을 설명하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다양한 국제기구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국제 심포지엄 선언문(2014.10.8)

- 한국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설립은 생태와 평화를 결합하여, 분쟁지역을 평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한다.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은 동북아 협력의 핵심인 한국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중심으로, 남북한 및 동북아 지역 국가의 과학자, 보호지역 관리자,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협력과 지식교류를 장려한다.

■ 제6차 세계공원총회 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의 관심 및 지지 표명

- 마르통-르페브르(Julia Marton-Lefèvre) IUCN 사무총장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남북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생태'를 이슈로 한 것은 훌륭한 발상이라고 본다.

(3)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향후계획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한 계기시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대북협의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남북합의 이전까지는 공원 조성을 위한 초기 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2차 공원 후보지 현지 조사를 추진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원 컨셉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후보지별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원 주변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에 대한 대내외 지지기반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내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국민공감 심포지엄」, 「국민과 함께하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UCC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UN·유관국·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② 통일외교 활성화

(1) 국제통일전략대화 등을 통한 정부간 대화 확대

국제통일전략대화는 통일부 당국자들이 미·중·일 등 주요 국가를 방문하여 정부관계자들과 대북정책 및 한반도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4년에는 대상 지역을 유럽·대양주·동남아까지 확대하고 총 7회 실시하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통일부장관이 직접 방문하여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미국 국제통일전략대화는 통일부장관이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뉴욕, 워싱턴, LA를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워싱턴에서는 웬디 셔먼(Wendy Sherman) 국무부 부장관 대행,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 에드 로이스(Ed Royce) 하원 외무위원장, 스티브 샤보트(Steve Chabot)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원장, 찰스 랭글(Charles Rangle) 하원의원 등을 만나 지난 2년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성과와 향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셔먼 부장관 및 미국 의원들은 통일부장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정부와 의회, 학계 등에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을 직접 설명해 준 것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비전과 「드레스덴 구상」

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미국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에서 통일부장관은 유엔인구기금(UNFPA), 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고위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UN기구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드레스덴 구상」 이행 등을 위해 통일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다른 한편 뉴욕, 워싱턴, LA에서 각각 현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갖고, 통일대박론 및 박근혜 정부의 평화통일기반 구축 노력을 소개하면서 미국 전문가집단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였다.



미국 및 중국 국제통일전략대화

중국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는 2회에 걸쳐 개최하였는데, 그 중 1회는 고위급으로 진행하였다. 통일부장관은 5월 20일과 21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아 교류·신뢰 구축회의(CICA)에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평화와 안정, 협력의 신아시아를 위한 대화·신뢰·공조 강화’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에서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언급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및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CICA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하반기에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무급 국제통일전략대화를 실시하

였다. 국무원 대만관공실 부국장, 하문대학 대만연구원, 대만내 국책 싱크탱크 관계자 등 양안문제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안관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남북관계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일본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에서는 일본 외무성, 납치문제대책본부 사무국, NSC 등의 관계자들을 만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북한 정세, 향후 대북정책에서 한일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현지 한반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 정세 및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을 병행하였다.

유럽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EU와 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EU 대외관계청·EU 개발총국 관계자를 면담하고 드레스덴 구상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EU 차원의 이해와 협조를 제고하는데 주력하였다. 영국에서는 외무성 및 한반도문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통일과 우리 정부의 통일준비 노력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영국 정부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2월 1일부터 7일까지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대양주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를 진행하였다. 동 전략대화는 2014년 최초로 개최된 전략대화로서, 통일부와 호주·뉴질랜드 외교부 정부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뉴질랜드 동포대상 정책설명회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드레스덴 구상,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을 설명하면서 동포사회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정책설명회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기회가 주기적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통일전략대화를 실시하였다. 이번 전략대화는 2014년 12

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ASEAN 특별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ASEAN 역내 국가들과 정례적으로 대화, 협력,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사회과학원, 하노이국립대학교와 ‘통일 이후 통합정책’ 등을 주제로 매년 정례적인 학술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음으로 ASEAN사무국이 소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외교부, ASEAN 관계자, 지역문제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고, 이러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도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서 주한 EU국가 대사 대상(6월), 주한공관 대사 대상(11월) 및 주한공관 관계자 대상 남북관계 현장투어(11월) 등 정책설명회를 총 3차례 실시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을 알리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 1년차의 대북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상세히 알리기 위해 2014 영문판 통일백서를 1,000부 발간하여 재외공관 및 주요 한국학 연구소 등에 배포하였다.

(2) 1.5트랙 협의체를 통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5회째를 맞는 「한반도국제포럼 2014」는 2010년 코리아글로벌포럼(Korea Global Forum)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된 1.5트랙 다자협의체이다. 9월 25~26일 이틀간 진행된 「국내 행사」는 통일부장관의 기초연설로 시작하였다. 공개 포럼에서는 ‘동아시아 세력구조 재편과 한반도 통일의 함의’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후지와라 기이치(Kiichi Fujiwara) 도쿄대 교수,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맨스필드재단 대표, 바실리 미헤예프(Vasily Mikheev)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한스 울리히 자히트(Hans-Ulrich Seidt) 전 주한독일대사, 제임스 코튼

(James Cotton)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교수, 베리 데스커(Barry Desker)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학장, 존 에버라드(John Everard) 전 주북영국대사, 프랑소와 니콜라스(Francoise Nicolas)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게오르기 톨로라야(Georgy Toloraya) 러시아 사회과학원 한국과장 등이 발표와 토론을 하였고, 크쉬슈토프 마이카(Krzysztof Majka) 주한 폴란드대사 등 주한 대사들과 한·미·중·일·러·독·영·프·호·싱가포르 등 10여국의 전·현직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 200여명이 청중으로 참석하였다. 비공개 포럼에서는 북한 정세 및 북핵 문제, 한반도 통일의 도전과 과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주제로 10개국의 정부 관계자 및 민간 학자들이 참석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커트 캠벨(Kurt Campbell)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아시아재균형정책 및 한반도 통일의 여건과 준비’에 대해 공개 강연을 하였다.



한반도국제포럼 2014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현지전문가들과의 진지한 의견교환을 위해 기획된 「한반도국제포럼 국외 세미나」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서 총 4차례 진행하였다. 중국세미나는 5월 23일 베이징에서 개최하였고, 일본은 6월 23일 도쿄에서, 유럽은 10월 31일 브뤼셀에서, 미국은 12월 10일 워싱턴에서 개최하였다. 미국세미나에서는 통일부장관이 직접 ‘한미동맹과 대북정

책'이라는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통일준비를 소개하는 기초 연설을 하였다. 기타 지역에서는 통일부 고위공무원이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통일부장관의 축사를 전달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기조 및 계획 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였다.

「주변국 정책커뮤니티 네트워크」 사업은 2013년에 우리 전문가들과 주변국 한반도 전문가 집단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이다. 2014년은 중국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2차에 걸쳐 한중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첫 회의는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중국 북경과 상해지역에서 우리측 학자 5명과 중국 현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한중 전문가회의를 진행하였다. 북경에서는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관계자들과 최근 북한 및 한반도 정세, 한·미·중 각국의 입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상해 푸단대에서 진행된 상해지역 한중 전문가 회의에서는 북한 정세, 통일 문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두 번째는 7월 9일부터 12일까지 북경과 연길에서 한중전문가회의를 진행하였다. 북경에서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연구원 및 중국국제문제연구소 관계자들과 회의를, 연길에서는 민간전문가 그룹과의 전문가 대화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중정상회담 성과, 북핵문제 등 최근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3) 한민족 통일기반 구축 등 재외동포 협력 강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재외동포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통일부는 재외동포 사회와의 통일협력을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 국제통일전략대화 계기에 위

싱턴과 LA에서 최대 규모의 미주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통일부장관이 직접 통일준비와 재외동포사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의 통일협력 분위기를 고양하였다. 또한 6월에 진행된 일본지역 국제통일전략대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도쿄 지역 동포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평소 교류가 쉽지 않았던 후쿠오카 지역으로 이동하여 민단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정책설명활동을 통해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재일동포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통일준비에 있어서 재일 동포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한편 통일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외동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기반을 확산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2014년에는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기념하여 고려인 및 재외동포 약 11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현지 전문가의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기고 활동을 지원하였다. 고려일보(러시아어), 카자흐뉴스·한인신문·한인일보(한글) 등 4개 현지 동포 언론사에 36회가 연속 게재됨으로써 고려인 동포 및 현지 한인들의 통일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 또한 5월 2일에는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한민족 축제행사를 계기로 우즈벡·키르기즈·타지키스탄 고려인 대표 및 카즈누국립대학 한국학과 학생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민족친선회관에서 통일부 주최 통일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4) 독일통일 경험 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통일준비

독일통일 20주년이 되던 2010년 한국 통일부와 독일 연방 내무부는 한독 통일자문위원회의 구성과 독일통일 당시의 공문서를 이관하는 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2011년 제1차 서울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돌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국방·재정·사회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총 82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독일 통일 관련 공문서가 한국으로 이관되었다.

2014년에 「제4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9월 17~18일간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제4차 회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전 회의와는 구분된다. 우선 첫째 2014년 3월 한독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는바, 한독통일자문위원회가 명실상부한 한독통일 협력체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다. 둘째 2013년말 독일 메르켈 3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연방주 특임관(구 동동지역 발전 담당) 업무가 연방 내무부에서 연방 경제·에너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 통일부와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가 처음으로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한독정상회담을 통해 신규로 구성된 한독경제협력네트워크와 함께 개최함으로써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부처간 협업사례를 남겼다.

제4차 회의는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대표단 단장으로 하여,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안두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이각범 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과 명예교수, 이상우 전 한림대학교 총장, 이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홍양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정재각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원 박사 등이 전문가로 특별 초청되어 세션별로 우리측 발제를 담당하였다. 독일측에서는 이리스 글라이케(Iris Gleicke) 연방 경제에너지부 정무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할렌(Johannes Hahlen) 전 연방내무부 차관, 루데비히(Johannes Ludewig) 전 신연방주 특임관, 메지에르(Lothar de Maizere)전 동독총리, 파케(Karl Heinz Paqué) 전 작센-안할트 주정부 경

제장관, 쉬납아우프(Klaus-Dieter Schnapauff) 전 내무부 실장 및 통일조약 팀장, 슈뢰더(Richard Schöder) 전 동독 사민당수, 텔치(Horst Teltschik) 전 총리실 외교안보보좌관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노이버트(Hildigund Neubert) 튀링겐주 총리실 정무차관, 오버하우스(Manfred Overhaus) 전 연방 재무부 정무차관 등이 특별초청자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하였다.

내용면에서는 9월 17일 첫 날 회의에서 「구동독지역내 민주적 행정체제 구축」과 「통일비용과 재원 조달」을 대주제로 하여 한독 양국 위원간 활발한 논의를 전개 하였으며 이어 9월 18일 둘째 날 회의에서는 「구동독 재건(Aufbau Ost)을 위한 경제정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독일에서 이관받는 독일통일 관련 공문서들은 문서들의 활용 가치 및 중요도 등에 따라 2011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이를 독일통일 총서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2013년 군사, 행정, 인프라 재건 등 4건을 발간한 데 이어 2014년에는 『독일통일총서 5: 경찰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총서 6: 정당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총서 7: 과거청산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총서 8: 여성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총서 9: 가족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등 총 5종을 새로 발간하였다. 해당 책자는 2013년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국공립 도서관 및 연구기관, 국회 및 행정부 등 유관단체 등에 배포되었으며, 향후 통일과 관련된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전망이다.



제4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통일 총서 발간 결과 및 향후 계획】

연도	발간 분야	비고
'13년	군사, 행정, 특임관, 인프라 재건	4권
'14년	경찰, 정당, 과거청산, 여성, 가족	5권
'15년	통일비용 및 재정정책, 화폐통합, 신탁청, 건강·보건, 연금·사회복지, 노동·실업	6권
'16년	국가구조 변화, 이주민 정책, 교육, 환경, 어린이 및 청소년	5권
'17년	농업경제, 자연환경, 건설, 주거, 문화	5권
'18년	사법, 동서독의 국제 조약, 주정부간 협력, 브란덴부르크주, 국제환경 변화	5권

③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확고한 북핵 불용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압박과 대화를 병행 추진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국제사회와 구축한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4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 엄중 경고하는 한편,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였다. 특히,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한반도에서

의 핵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여 조건없는 비핵화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였다.

■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中 비핵화 관련 내용

-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중략)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한 압박도 지속하였다. 북한은 2014년에도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견지하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3~4월경 ‘핵억제력 강화’를 지속 언급하며 추가 핵실험을 위협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북한에 비핵화 압박을 강화하였으며, 한·중 정상간 전화통화(4.23)를 통해 북한에 핵실험 저지를 압박함과 동시에 앞서 언급한 한미 정상회담(4.25) 계기 북한의 핵 관련 추가 도발 중단을 엄중 경고하는 등 단호한 대처를 통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대북압박과 함께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미·중·일·러 등 주변 4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미있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전제조건 없는 비핵화 대화 재개를 주장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관련국

들의 입장 조율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북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의미있는 대화재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4차 핵실험 시사 북한 언급

- ‘핵억제력을 과시하는 추가적 조치’(14.3.14 北 국방위 성명)
-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을 것’(14.3.30, 北 외무성 성명)
- ‘자위적 억제력 강화’(14.4.5, 北 전략군 대변인 중통문답)
- ‘핵억제력 가일층 강화’(14.4.7, 北 국방과학원 성명)
- ‘자위적인 대응조치’(14.4.11, 국방위 정책국 담화)
- ‘자위적 억제력 강화 노력에 박차’(14.4.21, 北 외무성 담화)
- “우리가 예고한 새로운 핵시험과 로켓발사 관련 견해와 억측들에 대해 그 이상의 조치들도 취할 수 있음.”(14.4.28, 北 국방위 대변인 성명)
- “3.30(외무성 성명) 천명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선언에는 시효가 없음.”(14.4.30,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아울러, 남북간 대화·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남북간 신뢰형성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규모 경협사업을 추진한다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도 북한에 제시하였다. 앞으로 남북대화가 개최되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도 북한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제2장 남북 교류협력

제1절 남북경제협력

제2절 개성공단 사업

제3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제4절 남북 출입통행 및 운송

제2장 남북 교류협력

정부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남북간 경제협력의 경우, 개성공단을 제외한 교역과 경협사업의 중단 상황이 계속되었으나,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경우에는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러간 양국의 신뢰 구축,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등 국익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나진항 현지실사(2014년 2월, 7월) 및 석탄시범운송(2014년 11월)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러시아측과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 간 경협사업 중단으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해주기 위해 추가 대출 및 대출금 상환유예 등 지원 노력도 지속하였으며, 그 밖에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수시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남북간 교역은 「5.24 조치」에 따라 남북간 일반교역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 증가로 2013년 11억 3,585만달러에서 2014년 23억 4,264만달러로 106.2% 증가하여 남북교역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중 개성공단은 전체 교역액의 99.8%를 차지하였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일단위 상시통행 실시를 위한 전자출입체계 구축, 인터넷 연결방식 합의, 개성

공단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북한에 당국간 협의를 제의하며 개성공단 현안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개소, 개성공단 생산제품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한편, 남북간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하여 정부는 비정치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문화·종교·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한 남북간 교류가 진행되었다. 2014년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하여 북한주민의 우리측 방문은 5건, 북한지역 방문은 31건, 북한주민 접촉은 219건이 이루어졌다. 이는 2013년 대비 북한주민의 우리측 방문이 2배 이상(2건→5건), 북한지역 방문이 3배 이상(8건→31건), 북한주민 접촉이 1.1배 이상(197건→219건) 증가한 것이다.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이 2009년 12월 이후, 5년만인 2014년 7월 재개되었으며,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도 2011년 12월 중단된 이후 3년만인 2014년 7월에 재개되었다.

또한, 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2014년 9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273명이 14개 종목에 참가하였으며, 2014년 10월 개최된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는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최초로 4개 종목 33명의 북한 선수단이 참석하였다. 2014년 11월에는 연천에서 개최된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에 북한 유소년 축구단 32명이 참석하여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연천 소재)에 10일간 체류하기도 하였다.

▶ 제1절 남북경제협력

① 남북교역

(1) 개요

2014년 남북교역은 5.24조치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 증가로 전년도 11억 3,585만 달러 대비 106.2% 증가한 23억 4,264만 달러로 남북교역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그중 반입은 전년 대비 96.1% 증가하여 12억 62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반출은 11억 3,644만 달러로 전년보다 118.3% 증가하였다. 개성공단은 전년 11억 3,217만 달러 대비 106.5% 증가한 23억 3,781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99.8%를 차지하였다.

【연도별 남북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1,074	615	1,206	10,958
반출	0	1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897	521	1,136	10,812
계	19	13	111	173	187	195	287	252	308	222	333	425	403	642	724	697	1,056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971	1,136	2,343	21,771

* 반올림으로 인해 각 년도의 반입/반출 '합계'와 '계'가 다를 수 있음. 1백만 달러 이하는 '0'으로 표시

(2) 유형별 교역 현황

남북교역을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나눠 보면, 2014년 상업적 거래는 23억 3,851만 달러로 전년 11억 3,290만 달러 대비 106.4% 증가하였고, 전체 교역에서의 비중은 99.8%로 전년 99.7%와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상업적 거래 중 반입은 12억 603만 달러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고, 반출도 11억 3,248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8.8% 증가하였다.

2014년 상업적 거래의 구성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은 23억 3,781만 달러로 2013년 대비 106.5% 증가하면서 상업적 교역에서 99.97%, 전체 교역에서 99.8%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교역은 사회문화교류 성격의 서적류 반입에 따라 18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69.7% 감소했으며 상업적 교역에서 0.0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2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시설점검 및 행사지원에 따라 금강산관광 관련 교역액은 52만 달러를 기록하며 상업적 교역에서 0.0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3년 및 2014년도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 천 달러/%)

구 분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합 계
		개성 공단	위탁 가공	일반 교역	금강산 관광	기타 경제협력	대북 지원	사회·문화 협력	
2013년	교역액 (천 달러)	1,132,174	-	589	136	-	2,947	-	1,135,846
	구성비(%)	99.7	-	0.1	0	-	0.3	-	100.0
2014년	교역액 (천 달러)	2,337,809	-	178	520	-	3,675	457	2,342,649
	구성비(%)	99.8	-	0	0	-	0.2	0	100.0

* 구성비 :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 '0.1' 이하는 '0'으로 표기

한편 2014년 비상업적 거래는 413만 달러로 전년 295만 달러 대비 40.2% 증가하였지만 전체 교역에서 0.2%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에 따른 「5.24 조치」의 영향으로 사회·문화협력이 중단되고 대북지원이 감소한 결과이다.

(3) 교역구조

2014년 교역품목으로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석유류, 전기·전자제품 등이 전체의 73.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석유류 교역액은 전년 4억 3,941만 달러에서 8억 2,855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전체 교역에서의 비중은 전년 38.7%에서 35.4%로 하락하였다. 전기·전자제품류 교역액 또한 전년 3억 5,720만 달러에서 8억 8,247만 달러로 증가하여 전체 교역에서 37.4%를 차지하였다. 또한 농림수산물 교역액은 3억 806만 달러로 전체 교역에서 1.6%를 차지하여 전년 1.8%와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였다.

【남북교역 품목 구성】

(단위: 천 달러, %)

구분 연도	석유류	전기· 전자 제품	농림 수산물	기계류	생활 용품	철강 금속 제품	화학 공업 제품	광산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잡제품	계
2013	439,409	357,197	20,834	88,359	94,765	17,014	64,430	24,052	64,430	1,158	1,135,846
	[38.7]	[31.4]	[1.8]	[7.8]	[8.3]	[1.5]	[5.7]	[2.1]	[5.7]	[0.1]	[100.0]
2014	828,547	882,469	38,057	166,739	198,996	31,650	104,788	39,102	51,033	1,259	2,342,649
	[35.4]	[37.7]	[1.6]	[7.1]	[8.5]	[1.4]	[4.5]	[1.7]	[2.2]	[0.1]	[100.0]

* 구성비 :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

남북 간 교역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수는 2014년에는 342개사로, 2013년 328개사에 비해 4.3% 증가하였으며, 교역 품목의 수는 718개 품목

으로 2013년 674개 품목에 비해 44개 품목이 증가하였다.

② 「남북러 3각협력」 사업 추진(나진-하산 물류사업)

정부는 한·러 양국간 신뢰관계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등을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기업의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를 장려하기로 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나가기로 하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中

- “유라시아 동북부를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는 복합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유럽까지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13.10.18.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박근혜 대통령)

「나진-하산 물류사업」은 2000년 러시아와 북한이 나진-하산 공동개발에 합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 합의로 2008년 6월 러시아가 70%, 북한이 30%의 지분으로 출자한 합작회사(라선콘트랜스)가 설립되었다. 이후 북·러 양측은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13.9월 완료) △나진항 제3부두 개발 등 항만·터미널 인프라 구축(‘14.7월 완료)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러시아측은 우리 기업의 동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으며, 2013년 11월 13일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KORAIL, (주)포스코, (주)현대상선으로 구성된 우리측 3사 컨소시엄과 러시아측이 「나진-하산 물류사업」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동 사업 참여를 위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개요

▶ 목표

- 소통과 개방을 통해 평화롭게 교류하며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 건설

▶ 주요 내용

- ‘하나의 대륙’
 -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 구축
 - 전력망, 가스관, 송유관 연계를 통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무역협정과 연계, 단일시장 구축
- ‘창조의 대륙’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접목, 융복합 촉진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 ‘평화의 대륙’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한 역내 평화 안보 강화

2013년 한-러 공동성명 최종 합의문 中

- 양측은 러시아 철도공사의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시범사업인 나진(북한) - 하산(러시아) 구간 철도 복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나진항 제3부두의 현대화를 환영하였다. 이를 계기로 양측은 양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철도 및 항만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기업 3사 관계자는 2014년 두 차례(2월, 7월) 러시아측과 공동으로 나진을 방문하여 두만강-나진 철도와 나진항 시설, 철도·항만 연계 운영 및 투자비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2014년 11월에는 러시아산 석탄 시범운송을 위해 나진을 방문하여, TSR-나진항-해운 연계 복합물류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기술적 점검을 진행하였다. 시베리아에서 나진까지는 시베리아철도(TSR)를 이용하여 운송하였으며, 나진에서 포항까지는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하였다. 북한과 러시아측의 협조 속에 시범운송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특히 북한은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21일간의 에볼라 방역 관련 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점검을 위해 방북한 한·러 공동 실사단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취하는 등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리기업 3사는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사업성 검토와 더불어 수익성 제고를 위해 러시아측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진항 석탄시범운송

③ 「5.24 조치」의 이행과 기업애로 경감 대책 마련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5.24 조치」의 기초를 유지해 왔다. 우선, 남북교역 및 신규투자 불허 조치 이행을 위해 2010년 6월 14일 <반출·반입 승인 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남북 간 모든 물품의 이동을 승인대상으로 전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반출·반입에 따른 통관검사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5.24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첫째,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5.24 조치」 발표 이후 4차례 실태조사(2010.5.25~6.2, 6.18~22, 2011.5.13~18, 2013.5.13~20)를 실시하여 기업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외에도 기업별 면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 상담센터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둘째, 「5.24 조치」 이전에 이미 북한과 계약을 체결, 대금을 지불한 건에 대해서는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반출·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하였다. 2010년 6월 초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191개사 1억 2,578만 달러 상당의 일반 교역 선급금 지급분의 수산물과 위탁가공 완제품이 반입되었으며, 총 72개사 4,141만 달러 상당의 원부자재가 반출된 바 있다. 또한 2012년 6월에는 위 유예조치 기간에 미처 회수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반입을 추가로 허용(26개사, 392만불 대상)하였으며, 총 3개사 79만 달러 상당의 수산물 반입이 진행되었다. 수산물 반입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3년 2월까지 진행되어 오다 핵실험 이후 추가반입이 중단된 상태이다.

셋째, 사업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난 경감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5.24 조치」 이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26일 남북협력기금에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제도」를 신설하고, 2차례에 걸쳐 연이율 2%의 정책자금을 대출하였다. 2010년 8월에서 2011년 2월까지 시행된 1차 특별대출을 통해 184개 기업이 377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2012년 1월에서 6월까지 시행된 2차 특별대출을 통해 99개 기업이 183억 원의 대출 혜택을 받았다.

2014년에는 4월에서 10월까지 신청을 받아 금강산·교역·경협기업 총 44개사에 총 190억 원의 3차 특별대출을 실시하였다. 특히 3차 대출은 사업중단 장기화 상황임을 고려하여 1·2차 대출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추진되었다. 전액 신용 대출이 가능하게 했고, 재무등급요건도 폐지하였으며, 세금체

납기업도 대출금으로 조세를 선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을 지원하였다. 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대출인 만큼 신용불량 기업 및 휴·폐업기업 등은 제외하는 등 최소한의 일반금융원칙은 준수하였다.

또한 「대출평가 및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기업측 주장을 심사하고 수용하는 등 가급적 많은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3차 특별대출에서는 금강산 상품자산까지를 투자액으로 인정해 주었고, 기존 정부가 인정한 투자액 이외에 경협기업측에서 주장하는 투자액까지 추가로 인정해 주었다.

넷째, 중단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9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교역·경협·금강산 기업에 「긴급운영경비」를 무상 지원하였다. 교역·투자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였으며, 그 결과 총 457개 기업에 약 5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다섯째, 우리 교역·경협기업들의 북한에 있는 투자자산을 점검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북 및 제3국에서의 접촉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까지 9개사가 21회에 걸쳐 개성 및 금강산 지역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부터 현재까지 방북 및 제3국 접촉은 중단된 상태이다.

▶ 제2절 개성공단 사업

①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남과 북은 2013년 8월 14일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가동중단 재발방지, 3통·투자자산 보호 등 제도개선, 개성공단 국제화와 개성공단 현안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한 상설기구 운영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이후 2013년 9월 16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었으며, 2014년 초부터는 기업 생산량, 반출입량 등 입주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대다수의 지표가 가동중단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활동 비교】

구 분	입주기업(가동기업)	반출입량	생산액	근로자
13년 3월	123개(122개)	19,137만불	4,577만불	53,466명
14년 3월	123개(122개)	18,169만불(95%)	4,193만불(92%)	52,289명(98%)
14년 9월	124개(125개)	20,795만불(109%)	3,955만불(86%)	53,209명(99%)

* ()는 '13.1월 대비 %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남북은 개성공단 현안 및 제도개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5차, 6.26)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4차, 1.24)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제1차, 3.13)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등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은 1월 24일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전

자출입체계(RFID) 도입을 통한 일일단위 상시통행 시행시기와 이에 따른 기술적 문제 및 인터넷 연결방식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를 통해 RFID 운영을 위한 기술적 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월 28일부터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통신분야 실무접촉을 다음달인 2월 7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월 28일 개성공단 통행검사소에서 우리측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RFID를 통한 인원 및 차량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RFID 시스템을 수정·보완하여 3월 1일부터 RFID를 통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RFID를 통한 일일단위 상시통행 시행을 위한 기술적 여건은 조성되었으나, 이후 북한이 상시통행 시행일자 확정을 위한 후속협의를 응하지 않으면서 남북이 합의한 상시통행 이행은 지연되고 있다.

2월 7일에는 통신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인터넷 망 구성 및 경로, 서비스 제공방식 및 인증방식, 통신 비밀보장, 인터넷 사고방지 등 인터넷 연결방식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러한 당국간 합의를 토대로 2월 21일에는 KT, 조선체신회사 등 남북 통신사업자간 인터넷 공급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에 이르렀으나, 이후 북한이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출입체계(RFID) 시범가동(14.3월~)

한편 남북은 2013년 12월 개성공단에 투자한 입주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4년 3월 13일 남북은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중재제도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재절차, 중재대상,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이후 후속협의를 개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후 6월 2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일일단위 상시통행 실시, 인터넷 공급, 상사중재제도 가동 등 남북이 합의한 발전적 정상화 이행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014년 12월 현재까지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회담은 개최되고 있지 않으나, 개성공단 현지에 설치되어 있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는 실무접촉(일일)과 사무처장 회의(주1회) 등을 통해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운영 관련 당국간 연락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1월 21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개성공단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준하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되었다.

9월 12일 개소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개성공단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상담, 정보제공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투자기업 발굴·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2013년 9월 개성공단 재가

동 이후 2014년 12월말까지 중국·독일 등 45개 이상 외국계기업에 투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독상공회의소(4.29), 세계한인무역협회(5.2), 노르웨이 상공인(5.23), 러시아 무역대표부(9.4) 등 해외상공인의 투자여건 확인을 위한 개성공단 방문을 지원하였다. 또한 12월 26일에는 외국인투자 유치 전용 영문 홈페이지(www.investgic.org)를 개설하여, 해외에서도 개성공단 투자 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투자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입주기업과 생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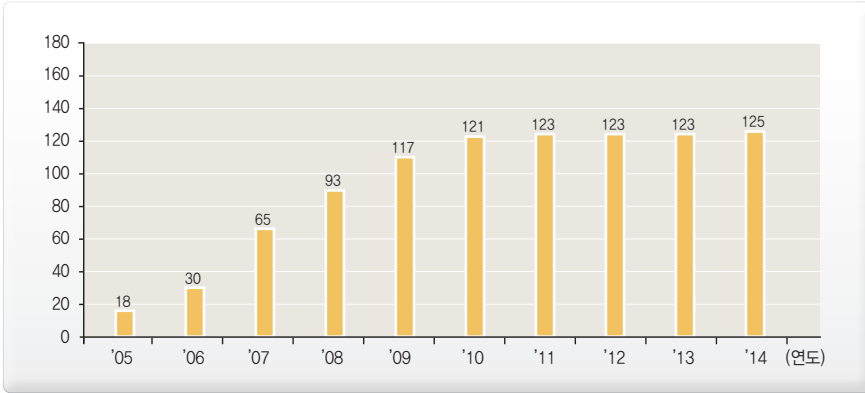
(1) 입주기업

개성공단 사업은 2003년 6월 30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1단계 330만㎡ 개발에 들어갔다. 2004년 6월 시범단지에 15개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개성공단 첫 생산품이 출시된 이후, 2007년 1단계 2차 분양 및 1단계 1차 기반시설이 준공됨으로써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건축중인 공장 2개사가 준공·가동됨에 따라 2014년 12월 현재 개성공단에는 125개사가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입주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섬유 73개사(58%)로 가장 많으며, 기계금속 24개사, 전기전자 13개사, 화학 9개사, 종이목재 3개사, 식품 2개사, 비금속광물 1개사 순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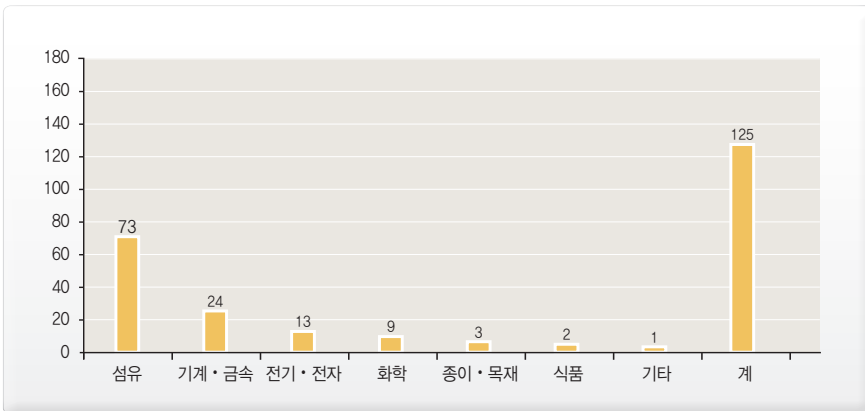
(단위 : 개사)



* 2014년은 기건축중인 공장 준공·가동으로 입주기업 수 2개 증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업종 분포】

(단위 : 개사)



* 2014년에는 신영제어기(기계금속업체), 협진카바링(섬유봉제업체) 1개씩 증가

(2) 생산 현황

개성공단의 연도별 생산액은 2008년 2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2010년 3억 달러, 2011년에는 4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2013년은 개성공단의 잠정중단으로 2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14년은 4억 6,997만 달러로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였다.

누적 생산액의 경우, 2007년 1월말 1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2008년 11월 5억 달러, 2010년 9월 10억 달러, 2011년 15억 달러, 2013년에는 2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2014년 12월 말 현재 누적 생산액은 26억 6,974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각 업종별 누적 생산액은 섬유업종이 14억 9537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 전기전자업종 4억 9,083만 달러, 기계·금속업종 4억 2,801만 달러, 화학업종 2억 997만 달러, 식품 2,209만 달러, 종이목재 981만 달러, 기타는 1,366만 달러이다.

【개성공단 업종별 생산액】

(단위 :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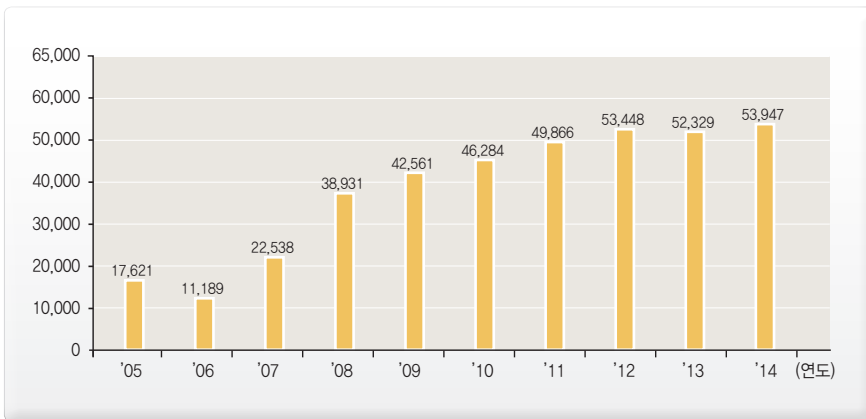
연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섬유	6,780	27,793	85,543	132,179	152,050	179,235	215,676	269,383	134,142	292,588	1,495,369
화학	1,768	10,900	18,262	21,785	26,179	32,092	28,636	30,337	16,040	23,974	209,973
기계·금속	5,250	20,853	41,947	49,250	37,312	48,637	52,617	65,861	31,653	74,628	428,008
전기·전자	1,108	14,191	39,027	47,162	37,584	59,147	97,221	93,836	33,851	67,699	490,826
식품	-	-	-	976	2,003	2,668	4,187	4,943	4,539	2,773	22,089
종이·목재	-	-	-	70	1,313	1,469	1,570	1,941	1,158	2,293	9,814
기타	-	-	-	-	34	75	1,941	3,199	2,401	6,010	13,660
계	14,906	73,737	184,779	251,422	256,475	323,323	401,848	469,500	223,784	469,965	2,669,739

(3) 북한 근로자 현황

북한 근로자 수는 2012년에 5만명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2004년 10월 북한 근로자 55명이 처음 고용된 이후 7년 4개월 만의 성과로, 개성공단이 국내 중소기업 공단에 버금가는 인력규모를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근로자 수는 5만여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14년 12월 현재 개성공단에는 북한 근로자 5만 3,947명이 근무하고 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수 추이】

(단위: 명)



③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내공단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개성공단 기반시설을 건설하여왔다. 주요 기반시설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 현재 용수공급 용량 3만톤(1일), 폐수종말 처리용량 1만 5,000톤(1일), 폐기물 매립용량 6만 1,000 m^3 , 폐기물 소각용량 12톤(1일) 등이며, 10만kW 용량의 전력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용수공급을 위한 핵심시설인 정배수장은 국내 음용수 수질에 맞춰 일 22,000톤의 물을 생산하고 있다. 2014년에는 개성지역의 유례없는 가뭄으로 원수공급처인 월고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월고저수지 최하단 수문 개방에 대비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그동안 정배수장에 국제적인 표준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노력한 결과, 2014년 10월 27일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개성공단 용수공급 체계



월고저수지 취수탑(가뭄으로 낮아진 수위)

폐기물 소각장은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인 12톤(1일) 처리에 한계가 있어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3월 제작공된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공사가 보류되기도 하였으나, 2012년 11월 재개되어 2014년 12월 현재 공정율은 65% 수준으로 2015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새로 건립될 소각장은 25톤(1일) 규모의 소각설비와 환경오염 방지설비를 갖추고 있다.



기존 개성공단 폐기물 소각장(12톤/1일)



새로 공사중인 폐기물 소각장(25톤)

통신시설은 KT가 2005년 12월 303회선을 개통한 이래 2009년 12월 600회선 등 3차례에 걸쳐 총 1,300회선이 구축되어있다.

지원시설로는 기술교육센터, 종합지원센터, 소방서, 응급의료시설, 탁아소 등이 갖추어져 있다. 기술교육센터는 2007년, 종합지원센터는 2009년에 각각 완공되었다. 종합지원센터는 지상 15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사무실,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업무시설, 은행 등의 편의시설, 개성공단 홍보관 및 제품전시·판매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소방서는 연건평 2,181㎡ 규모로 2009년 12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완공되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4년 12월 현재 총 8대의 소방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38명의 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화재진압 뿐 아니라,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화재 및 재난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개성공단 소방서



④ 법·제도 및 사업지원체계

(1) 법과 제도

개성공단에는 남북간 합의서, 남한 법규 및 북한 법규가 함께 적용되고 있다.

2004년 1월 29일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2000년 12월 16일 체결된 남북경협 4대 합의서(「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및 기타 남북 간에 적용되는 합의서도 개성공단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2013년 개성공단 잠정중단 기간 중 남북은 2013년 8월 14일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가동중단 재발방지와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문서로 보장하였다. 이 합의서를 토대로 하여 개성공단 문제를 상시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28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2013년 9월 1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각각 체결되었다.

우리 법규로는 2007년 5월에 제정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에 따라 개성공단의 개발·운영지원을 비롯하여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나 개성공단에 출입·체류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2013년 8월 13일, 2014년 1월 21일 두 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을 통해,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될 경우,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의무와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이전 및 대체 생산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

거가 마련되었으며, 개성공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신설되었다.

북한 법규는 2002년 11월에 제정된 「개성공업지구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등 16개의 하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개성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에는 사업준칙 작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2014년 12월 현재 「개성공업지구 건축 준칙」 등 51개의 준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14년 12월 5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대한 일방적 개정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내용에는, 최저임금 5% 상한 폐지 및 임금직불제 근거조항 삭제, 월 최저임금 결정시 관리위원회와의 합의절차 폐지, 이외에도 관리위원회의 노무관리 권한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개성공단은 남북이 협력하여 운영한다”는 남북간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개성공단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는 점에서 정부는 당국간 협의 없는 어떠한 제도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남북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남북 간 합의서】

구분	남북 간 합의서
남북경협 4대 합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12.16.)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2000.12.16.)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2000.12.16.)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2000.12.16.)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2002.12.8.)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2002.12.8.)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2002.12.8.)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2004.1.29.) •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2013.8.14.)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2013.8.28.)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2013.9.11.) •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2013.9.11.)
기타 관련 합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2003.7.31.) • 남북 상사중재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2003.10.12.) •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2002.12.6.)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2004.4.13.)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2007.5.11.)

(2) 사업지원체계

개성공단 사업은 당국차원에서는 남한의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과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중심으로 지원·관리되고 있으며, 당국 간 상설협의기구로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와 산하에 4개 「분과위원회」(통행·통신·통관, 출입체류, 관리운영, 국제경쟁력)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2013년 개성공단 잠정중단 이후 남북간 합의에 따라 설립된 공동위원회는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현안문제를 협의·결정하는 기구로서 개성공단 관련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 총괄·관리하고 있다. 2013

년 9월 30일 개소한 공동위원회 사무처는 현재 개성공단에 설립된 유일한 당국간 상설기구로서 개성공단 관련 남북간 연락업무 및 기타 공동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입주기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2004년 10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가 개성공단에 설립되었으며, 7부 1팀(관리총괄부, 기업지원부, 공단관리부, 공단개발부, 출입사업부, 법무지원부, 기술교육부, 운송사업팀)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2007년 12월에는 관리위원회에 대한 지원, 운영 지도·감독 및 개성공단 개발 및 입주기업 지원대책 수립·시행, 민원업무 대행 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이 설립되었다.

5 기업 투자 지원

(1) 금융·세제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다양한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간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통해 투자자금으로 28개 기업에 7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중소기업정책자금(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용자가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 중에 있다.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운전자금 특별대출을 실시하여, 2011년에는 남북협력기금 11개사 35억원, 2013년에는 남북협력기금 103개사 555억원,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28개사 121억원 및 중기청 정책자금 61개사 377억원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1

년 이후 매년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에 대해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박탈 등에 따른 사업중단 조치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경험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11월말 기준 미착공 기업을 포함한 106개의 개성공단 업체가 경험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금액은 3,642억원에 이르고 있다.

나아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4년 5월부터는 국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실시해오던 관세(간이정액)환급제도가 개성공단 임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개성공단 기업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기납부한 관세를 간이정액환급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기업이 원활하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지원 실적】

(단위 : 개/억원)

구분	남북협력기금		신·기보특례보증	중기청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업 수(개)	28	114	54	105
금액(억 원)	760	590	540	672

(2) 판로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FTA 체결 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OPZ)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4년 9월에는 한·EU FTA와 한·터키 FTA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1월에는 한·미 FTA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각각 참여하였으며, 2014년 11월 타결된 한·중 FTA에서는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대중 수출이 확대되고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매년 개성공단 생산제품 홍보와 시장개척을 위해 입주기업 생산제품의 전시회 및 판매전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제13회 세계한상대회’(9.24), 관리위원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최 ‘바이어의 날 구매상담회’(10.15) 개최 지원 등을 통해 대형유통사 및 대기업 구매담당자와 입주기업간 1:1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였다. ‘2014년 대한민국 판로지원종합대전’(11.5~11.7)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동 브랜드관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국회 개성공단 제품 전시·판매전’을 개최(12.2~12.3)하여 5,000만원 이상의 제품판매 실적을 올렸다. 특히 판매금액 중 일부는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기업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개성공단 투자에 관심있는 해외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여건 확인을 위한 개성공단 방문 지원도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 한해 동안 한독상공회의소(4.29), 세계한인무역협회(5.2), 노르웨이 상공인(5.23), 중국심천상공회의소(5.28), 러시아 무역대표부(9.4), LA한인무역협회(9.29) 등 총 173명의 외국인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2014년 12월

26일에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전용 영문 홈페이지(www.investgic.org)가 개설되어, 해외에서도 투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4 판로지원 종합대전 제품 전시관(2014.11.5~11.7)



국회 전시·판매전 (2014.12.2~12.3)

(3) 보건의료 지원

개성공단내 의료시설은 우리 근로자를 위한 의료시설로 2005년초 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2007년 4월 「그린닥터스」 의료시설과 북한의 종합진료소를 하나의 건물에 통합하여 「그린닥터스 협력병원」으로 개원하여 2012년까지 운영되었다. 2012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협력병원에서 총 42,064명의 남북한 근로자가 진료를 받았다.

입주기업이 증가하면서 우리 근로자의 의료 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2년 12월 연건평 1,487㎡ 지상 3층 10개의 병상을 구비한 현재의 「개성공업지구 부속의원」이 준공되었다. 당시 부속의원의 운영주체로 「일산백병원」이 선정되어, 「일산백병원」은 지원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6~7명의 의료진이 투입되어 우리 주재원들을 진료하여왔다. 2014년 12월말로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 1월부터는 새로운 운영주체로 선정된 「가톨릭학원 의

정부 성모병원」이 「개성공업지구 부속의원」을 계속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4년 7월에는 북한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북한 종합진료소에 치과 기자재 등 진료장비를 도입하여 치과 진료소가 개소하였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 현재 「개성공업지구 부속의원」과 북한의 종합진료소에서 총 66,822명의 남북한 근로자가 진료를 받았으며, 산부인과 32.1%, 외과 27.7%, 내과 27.0% 순이다.

(4) 근로조건 개선

북한 근로자의 보수는 기본급, 성과급 등 각종 수당, 사회보험료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존 노동규정에 따르면, 기본급은 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합의로 월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전년도 최저임금의 5% 이상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다.

기본급의 경우, 월 최저임금 50달러에서 시작하여 2007년 8월 52달러, 2008년 8월 55달러, 2009년 8월 57달러, 2010년 8월 60달러, 2011년 8월 63달러, 2012년 8월부터 67달러로 꾸준히 인상되어왔다. 2014년 12월 현재 평균 임금은 약 141.4달러 수준이다.

한편, 관리위원회는 북한근로자 5만 3천여명의 출퇴근을 위해 출퇴근버스 287대를 운행하고 있다. 출퇴근버스는 입주기업 가동시간에 맞춰 출근 2회, 퇴근 4회에 걸쳐 운행하고 있으며, 24시간 가동기업을 위한 별도의 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개성시내를 중심으로 운행되었으나, 개성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성시내는 물론, 인근 11개 지역에도 출퇴근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장 내 샤워시설, 공단 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다양한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개성공단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여,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우리측 주재원들의 자기개발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향후 기술교육센터 본격적인 운영에 대비하여, 북한근로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모유수유가 필요한 북한 여성근로자를 위한 탁아소가 갖추어져 있다. 탁아소는 남북간 협의를 거쳐 2009년 12월 200명 규모로 완공되어 2010년 9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되었으며, 2012년 10월부터는 수용인원이 600명으로 확대되었다.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



개성공단 택야소



▶ 제3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① 종교 교류

정부는 순수 종교교류 차원의 접촉 및 방북을 지속적으로 허용하였다. 2014년 남북 종교인 사이의 접촉을 통해 18개 단체가 개성 6회, 중국 베이징 9회, 선양 10회, 스위스 보세이 1회 등 26회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이후에는 개성·평양·금강산 등에서 남북 공동행사가 개최되었다.

조계종은 금강산 신계사에서 6월 29일 「만해스님 열반 70주기 남북합동다례제」, 10월 13일 「신계사 낙성 7주년 기념 남북합동법회」를 개최하였고, 천태종은 11월 26일 개성 영통사에서 「대각국사 의천 열반 913주기 다례제 및 영통사 낙성 9주년 남북합동법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8.13~16)와 조국평화통일협의회(10.15~18)는 각각 방북하여 평양 봉수교회에서 「남북합동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신계사 만해스님 열반 70주기 남북합동다례제 (2014.6.29, 금강산)



평양 봉수교회 남북합동 기도회 (2014.8.15, 평양)



단군릉 개천절민족 공동행사 (2014.10.3, 평양)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천도교는 10월 3일 평양 단군릉에서 「개천절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였다.

2 문화유산 및 예술 교류

남북의 언어를 함께 수록한 단일 사전 편찬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09년 12월 이후, 5년 만에 남북공동회의를 재개하였다.

2014년 6월 25일 개성에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을 위한 실무협의를 통해 남북은 남북공동회의의 재개에 합의하였으며,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제21차 남북공동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평양에서 제22차 남북공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제21차 남북공동회의
(2014.7.29~8.6, 중국 심양)



제22차 남북공동회의
(2014.10.30~11.8, 평양)

개성 만월대(고려궁성)를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조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2011년 12월 철수한 이후, 3년 만에 재개되었다.

2014년 7월 1일 개성에서 개최된 실무협의를 통해 남북은 개성 만월대 남

북공동발굴·조사 재개에 합의하고,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12월 9일에는 2015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남북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착수식
(2014.7.23)



문지와 계단 전경

이와 함께, 남북은 문화유산 분야에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7월 2일에는 「개성 한옥 보존사업」, 8월 12일과 12월 10일에는 「우리 민족 기록유산 남북공동전시사업」, 12월 9일에는 「평양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과 관련하여 남북의 실무진이 개성에서 만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예술분야에서는 국내의 여러 단체들이 북한을 초청하여 공동 행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양하게 시도하였으나, 실제로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2014년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윤이상평화재단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윤이상음악연구소가 개최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2017년 윤이상 탄생 100주년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일부 단체들은 고려인이주 1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러시아 사할린 체호프 책박물관에서 우리나라, 북한, 일본, 러시아의 한민족 청소년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8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제9회 부산 국제매직페스티벌」에서 북한미술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③ 체육 교류

2014년 체육 교류는 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행사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인천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14개 종목에 273명이 참가하였다. 인천시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원국인 북한 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 지원프로그램인 「비전 2014프로그램」과 「인천평화컵 유소년축구대회」 등의 남북 교류를 통해 꾸준히 북한 참가를 독려해왔다. 우리측의 수차례에 걸친 참가 독려 노력에 의해 북한은 마침내 2014.5.23 OCA에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통보하였으며, 을지훈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8.19~22 조추첨 행사에 참석하는 등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에 지대한 관심을 표출하였다. 북한의 참가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45개 회원국 모두가 참석하는 성과를 이룩하였고, 북한은 동 대회에서 종합 7위라는 12년 만에 아시아경기대회 1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러한 북한 선수단의 쾌거는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비서,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 등 북한의 고위급 3인이 참석하였고, 남북관계의 화해무드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또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는 4개 종목 33명의 북한 선수단이 참석하였다. 북한은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참가가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역사상 최초 출전이었으며, 동메달 2개로 총 32개국 중 29위를 차지하였다.

11월에는 연천에서 개최된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에 북한 유소년 축구단(4.25 체육단 소속팀) 32명이 참석하였다. 북한 유소년 축구단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축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연천 소재)에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체류하기도 하였다. 동 대회는 사회문화분야 교류 중 미진했던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 교류 확대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외에도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하는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육교류 추진을 위한 남북 접촉이 이루어졌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2014.9.19~10.4, 인천)】



북한 선수단 1진 입국(2014.9.11), 인천공항



여자축구 준결승전(2014.9.30), 인천문학경기장



북한 도마 금메달 연속장면(2014.9.24), 인천남동체육관



남자축구 결승전(2014.10.2), 인천문학경기장

④ 지방자치단체 교류

「5·24 조치」 영향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교류가 활성화되지는 못하였으나, 인천평화컵 국제 여자 유소년 축구대회(인천) 등 스포츠 분야 교류와 북한 다재내성 결핵환자 지원(경기도) 등 일부 인도적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2014년 4월 17일부터 18일,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남북 교류협력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면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동 실무협의회에서 각 지자체는 2015년 광복 70주년 계기 지자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교류협력사업 등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대북 교류협력사업 재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 제4절 남북 출입통행 및 운송

① 출입통행 현황

(1) 육로 출입통행 현황

남북 간 출입통행이 공식 집계된 2003년 이후 2014년 12월까지 출경기 기준으로 총 282만 4,415명의 인원과 총 83만 1,032대의 차량이 육로로 출입하였다. 육로를 통한 출입통행은 2008년 7월 북한군 초병에 의한 금강산관광객의 총격 사망으로 인해 동해선을 통한 출입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경의선을 통한 출입통행은 2008년 12월 1일 북한의 일방적 개성지역 출입제한 조치 및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 등으로 출입경이 일시 중단되는 등 지장은 있었으나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의선 육로의 출입통행은 2009년 이후 매년 약 11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의 출경기 인원과 약 7만 대에서 8만 대 정도의 출경기 차량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3년도에는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 등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출경기 인원 및 차량이 7만 7,277명, 5만 5,154대로 전년 대비 인원 36%, 차량 37%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128,132명(12월 기준)이 출입하여 중단 이전인 2012년 수준(121,091명)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의선 육로를 통한 출입경 인원은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출·퇴근 인원과 원자재 및 제품 운송차량의 출입통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4년도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출입경이 이루어졌다. 개성공단의 발

전을 위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고, 3월 13일에는 상사중재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5월 21일에는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이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였고, 영통사 복원 9주년 통일기원 및 대각국사 의천 913주기 열반재 법회, 개성 만월대 및 평양 고구려 고분군 남북공동발굴 조사사업, 월드비전 등 사회문화분야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단체들의 방문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8월 16일에는 러시아 고려인 국제오토렐리팀이 북한을 거쳐 남한을 방문하였고, 하반기에는 김대중평화센터 및 현대아산 관계자가 북한의 김양건 통전부장의 초청으로 방북하였다.

정부는 개성공단 등으로 출입경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에 출입하거나 체류하는 근로자와 운송차량에 대한 안전하고 신속한 출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제도 개선 및 출입절차 간소화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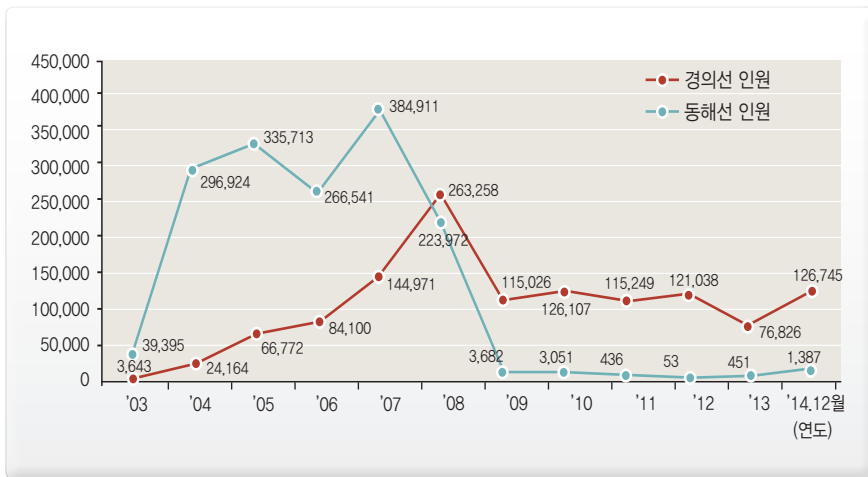
동해선 육로의 출입통행은 2008년 7월 북한군 초병에 의한 금강산관광객 총격 사망으로 금강산관광이 중지됨에 따라 출입경 인원이 대폭 감소하였다.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시설관리를 위한 출입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2010년 4월 27일 북한이 금강산지구 정부 및 민간 재산을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2011년 8월 23일 금강산지구 우리측 관리인원이 전원 철수함에 따라 동해선으로의 출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후 금강산관광·신계사 복원 기념행사 등 관련 출입이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 2014년에는 「2014년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과 관련하여 인원 2,774명, 차량 524대가 왕래하였다.

【연도별 경의선 및 동해선 육로 출경 인원·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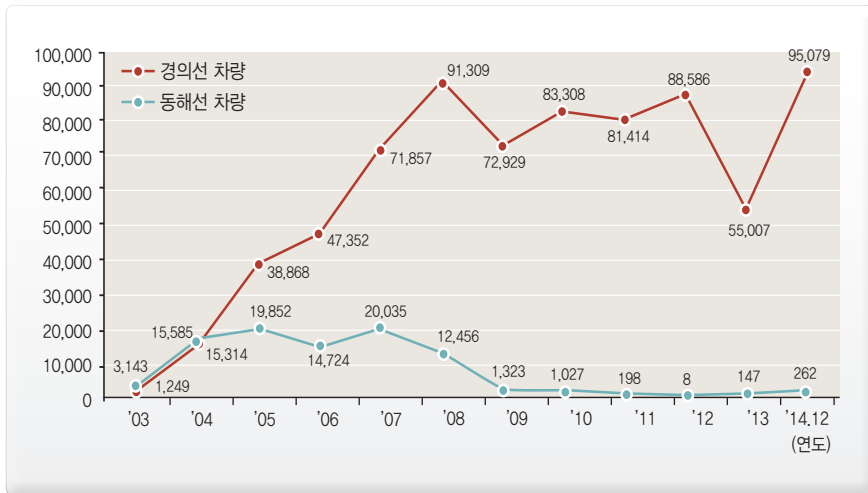
(단위 : 명/대)

구분	연도	2003~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경의선 육로	인원 (명)	94,579	84,100	144,971	263,258	115,026	126,107	115,249	121,038	76,826
	차량 (대)	55,431	47,352	71,857	91,309	72,929	83,308	81,414	88,586	55,007	95,079	742,272
동해선 육로	인원 (명)	672,032	266,541	384,911	223,972	3,682	3,051	436	53	451	1,387	1,556,516
	차량 (대)	38,580	14,724	20,035	12,456	1,323	1,027	198	8	147	262	88,760
출경인원 합계		766,611	350,641	529,882	487,230	118,708	129,158	115,685	121,091	77,277	128,132	2,824,415
출경차량 합계		94,011	62,076	91,892	103,765	74,252	84,335	81,612	88,594	55,154	95,341	831,032

【출경인원 변동 추세】



【출경차량 변동 추세】



남북 간 출입통행은 북한측과의 합의를 통해 시간대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의선 출입사무소의 평일 출경은 8시 30분에 시작하여 16시 30분까지 11회, 그리고 입경은 10시 정각에 시작하여 17시 정각까지 10회로 하루에 총 21회에 걸쳐 출입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토요일에는 8시 30분에서 14시 30분 사이에 출경 7회와 입경 5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요일과 북한의 공휴일에는 출입경이 없다.

(2) 해상운송

2005년 8월에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우리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 등 7개 항과 북한의 남포·해주·고성·원산·홍남·청진·나진 등 7개 항 간에 해상항로가 개설되어 남한과 북한의 선박이 운항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05년 8월부터 남과 북의 해사당국은 전화 1회선과 팩스 1회선

의 유선통신망을 연결하여 남북간 선박운항 허가, 선박의 운항정보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선박운항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따른 「5.24 조치」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이 금지되고, 북한도 우리 선박의 북한 해역 운항을 금지시켰다.

「5.24 조치」에 따른 남북교역 중단 등으로 남북간 해상운송은 2010년 5월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13년은 편도기준으로 31회이다. 특히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우리 교역업체의 피해 경감을 위해 일시적으로 허용한 북한 농림수산물 수송 운항을 제외하고는 제3국적 선박이 우리 항구를 단순 경유하여 남북간을 운항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2014년에는 「나진-하산 물류사업」 석탄시범운송을 위하여 11월말 제3국적 선박이 북한 나진항에서 우리 측 포항항으로 1회 운항하였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북한 선박은 2010년 5월까지 우리측 해역을 총 2,165회 운항하였으며, 「5.24 조치」 이후에는 운항이 없었다.

【남북 간 선박운항 현황】

(단위 : 회)

연도	1994~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횟수(편도)	13,131	4,497	8,401	11,891	7,435	2,577	1,432	142	228	31	1

(3) 항공운송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해를 우회하는 서울-평양간 임시직 항로가 개설된 이래 남북간 항공기운항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였다. 2010년 「5.24 조치」 이후에는 2011년 4월에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 일행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엘더스 그룹(The Elder's

Group)이 북한 평양을 경유하여 남한을 방문하면서, 제3국적 항공기가 남북한 사이를 2회 운항하였다.

2014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9.19~10.4)」에 참여하는 북한 선수단과 임원진을 수송하기 위하여 북한 항공기가 평양과 인천간 서해직항로를 통하여 편도 14회 운항하였다. 특히, 10월 4일에는 북한 항공기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양건 당 대남비서 등의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2회 운항하였다.

【남북 간 항공기운항 현황】

(단위 : 회)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횟수 (편도)	43	19	67	112	28	208	88	153	64	11	-	2	-	-	14

2 남북 출입통행 절차

남북 간 출입통행은 국가간 출입을 의미하는 출입국 대신 출입경 개념을 도입하여, 입국 대신 입경으로, 사무소 명칭도 출입국사무소 대신 출입사무소로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2005년 12월 29일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명시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도 국외에 출국할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공항에서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여권 대신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다만, 출입심사, 통관, 검역 등의 절차는 출입국의 경우와 동일하다.

【출입국과 출입경 비교】

구분	출입국	출입경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의 왕래, 거래(국경 개념) • 여권 소지, 비자 발급 • 출입국사무소 관할(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내부 왕래, 거래(특수 관계, 비국경 개념) • 북한방문증명서 소지, 출입증(체류증) 발급 • 남북출입사무소 관할(통일부)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심사, 통관절차, 보건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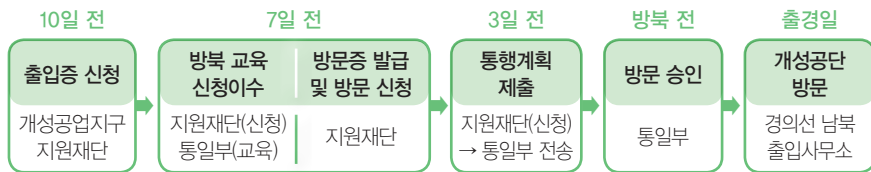
우리 국민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부에 북한 방문을 신청하여 방북 승인을 받고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성공단 방문 시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OK시스템(Online 출입 신청시스템, <http://oks.kidmac.com>)에 북한 출입 시 필요한 증명서인 출입증이나 체류증을 신청하고, 통행계획을 작성하여 출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북한방문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OK시스템에 제출된 북한 출입 관련 신청서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출입 신청 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통통시스템, <http://www.tongtong.go.kr>)에서 방북 승인 여부 및 통행 계획을 확인하고, 출경 당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북한방문증명서를 제시한 후 출경심사를 받아 출경한다. 북한에서는 출입증 또는 체류증을 제시하여 출입심사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방북 승인을 신청할 때 방북 안내교육과 출입증(또는 체류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하여 방북하려면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후 통행계획 제출 전에 차량운행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자동차운행 신청할 때 전자운행증(RFID카드)이 발급되어 출입경 시 전자식 자동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출입경 차량 전면에 전자운행증을 부착토록 하여 차량심사대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3월 1일부터 북한지역에서도 전자출입체계(RFID)가 도입되어 일일단위 상시 통행이 시범 운영된 바 있으나, 북한측의 비협조로 인해 일일단위 상시 통행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북한 개성공단 출입 신청 개요】



동해선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시스템」(통통시스템, <http://www.tong-tong.go.kr>)에서 북한방문, 차량운행 및 남북출입 통행계획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고, 출경 당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북한방문증명서를 제시한 후 출경심사를 받아 출경한다. 전자출입체계는 아직 미도입된 상태다.

〈남북출입사무소 시설 및 운영 현황〉

「남북출입사무소」는 2000년 7월 31일 체결된 남북 간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합의와 2002년 4월 5일 체결된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합의에 따라 남북간 철도 및 도로를 통한 인원·물자·차량에 대한 출입심사를 위해 2003년 11월 20일 개소하였다.

시설규모는 총 부지면적 67만 5,988㎡와 건물 51동 8만 6,424㎡로, 철도·도로 출입시설은 2006년에 준공하였으며, 물류센터는 경의선 도라산물류센터가 2007년 12월에, 동해선 물류센터가 2010년 9월에 각각 준공되었다.

한편, 경의선출입사무소는 남북간 실무회담을 위한 시설도 갖추고 있어 2011년 3월 29일에는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전문가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또한, 「남북출입사무소」는 통일안보 현장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2012년 7,287명, 2013년 8,094명, 2014년 9,304명으로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한 육로 출입통행은 임시도로가 개통된 2003년 이후 2014년 12월 까지 출경기준 총 282만 4,415명의 인원과 총 83만 1,032대의 차량이 출입하였다.

2013년도에는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조치 등으로 약 5개월간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출경 인원 및 차량이 2012년 대비 인원 36%, 차량 37% 감소한 바 있으나, 2014년도에는 128,132명이 출경하여 중단 이전인 2012년 수준(121,091명) 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4년에는 「2014년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지구에서 개최됨에 따라 원활한 행사진행 및 가족상봉 등을 위해 인원 1,387명, 차량 262대가 동해선 육로를 통해 왕래하였다.

【연도별 경의선 및 동해선 육로 출경 인원·차량】

(단위 : 명/대)

구분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경의선 육로	인원(명)	3,643	24,164	66,772	84,100	144,971	263,258	115,026	126,107	115,249	121,038	76,826	126,745	1,267,899
	차량(대)	1,249	15,314	38,868	47,352	71,857	91,309	72,929	83,308	81,414	88,586	55,007	95,079	742,272
동해선 육로	인원(명)	39,395	296,924	335,713	266,541	384,911	223,972	3,682	3,051	436	53	451	1,387	1,556,516
	차량(대)	3,143	15,585	19,852	14,724	20,035	12,456	1,323	1,027	198	8	147	262	88,760
출경인원 합계	43,038	321,088	402,485	350,641	529,882	487,230	118,708	129,158	115,685	121,091	77,277	128,132	2,824,415	
출경차량 합계	4,392	30,899	58,720	62,076	91,892	103,765	74,252	84,335	81,612	88,594	55,154	95,341	831,032	





특별
이력서

제3장 남북 간 인도적 문제

제1절 남북 이산가족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제3절 인도적 지원

제4절 북한 인권

제3장 남북 간 인도적 문제

정부는 남북한 주민 모두의 분단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우선적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남과 북은 2014년 2월 5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3년 4개월 만에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남과 북의 이산가족 170가족, 813명이 그리운 가족과 상봉하였다. 이후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및 남북고위급접촉을 북측에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호응해오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초청행사 등 내부적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남과 북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인도적 과제이다. 그러나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지하는 못하였다. 반면 국내 전후 납북자에 대한 지원과 전시 납북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은 꾸준히 전개되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을 지속 유지하면서, 통일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제기구·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북한 영유아·산모 대상 「모자패키지」 사업을 실시하였고, 나아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합농촌단

지」 조성 등 농축산·산림·환경과 같은 민생협력 분야로의 지원확대를 추진하여 대북지원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인도지원 총 규모는 실제 반출액을 기준으로 2013년 186억원에서 2014년 195억원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제기구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135억원에서 141억원으로 4% 증가하였고 국내 민간단체의 자체재원을 통한 지원은 2013년 51억원에서 2014년 54억원으로 5%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0년 이후 4년만에 총 3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투명한 대북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분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지속해 왔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인권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이며,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은 통일준비의 중요한 과제라는 관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제1절 남북 이산가족

①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12만 9,616명이다. 이중 6만 1,352명이 사망하여, 생존자는 6만 8,264명이다.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현황】

구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50세	계
인원(명)	8,592	29,125	18,379	6,880	5,288	68,264
비율(%)	12.6	42.7	26.9	10	7.8	100

* 2014년 12월 31일 기준

남과 북은 2000년부터 남북적십자회담 및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등을 통해 합의한 바에 따라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 북한의 거부로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특히 2013년에는 남과 북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합의하였으나, 북한은 상봉행사를 불과 4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행사를 연기하였다.

정부는 2014년 1월 6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설을 계기로 연기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재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남과 북은 2월 5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고,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월 12일, 14일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1차 남북고위급접촉을 개최하고,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2014년 2월 7일부터 금강산 상봉시설을 점검하고 노후화된 부분의 보수를 시작하였다. 특히 금강산에 많은 눈이 내림에 따라 2월 8일부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조하여 금강산 현지 도로 및 시설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2월 11일에는 금강산 현지 점검단이 방북하여 상봉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2월 15일에는 상봉행사 선발대가 방북하여 북측과 상봉행사 세부일정을 논의하고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2014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개최되었다.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1회차 행사를 통해 우리측 이산가족 82명과 동반가족 58명이 북측 가족 178명을 상봉하였으며,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회차 행사를 통해 북측 이산가족 88명과 동반가족 50명이 우리측 가족 357명을 상봉하였다. 이번 상봉행사에는 전후 남북자 2가족, 전시 남북자 3가족이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두 명의 이산가족은 동반가족과 의료진의 보호 아래 구급차 안에서 북측 가족을 상봉하였다.



2014년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현황 (2000년~2014년)】

구분	남한	북한	계
상봉행사(19회)	1,956가족(12,297명)	1,978가족(6,502명)	3,934가족(18,799명)
화상상봉(7회)	279가족(2,257명)	278가족(1,491명)	557가족(3,748명)
계	2,235가족(14,554명)	2,256가족(7,993명)	4,491가족(22,547명)

이후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3월 5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하였으며, 8월 11일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인도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이유 등을 거론하며 우리측의 제의에 호응해오지 않았다.

2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

정부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와 함께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사확인 200만 원, 상봉 500만 원, 서신교환 등의 교류지속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주선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2월 민간교류 주선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남북이산가족협회에 대해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건수는 2010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이산가족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 북한 당국의 국경지역 통제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교류 절차, 민간교류경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건수】

(단위 : 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생사확인	447	208	198	388	209	276	69	74
서신교환	984	579	935	961	776	843	449	413
상봉	152	170	208	283	188	95	54	55
계	1583	957	1341	1632	1173	1214	572	542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생사확인	50	35	15	3	6	9	6	1,993
서신교환	228	61	13	21	16	22	11	6,312
상봉	36	23	7	4	3	3	5	1,286
계	314	119	35	28	25	34	22	9,591

비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교류 주선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③ 이산가족 교류 인프라 구축

2012년부터 고령 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고 남북 간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을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만 6,823명의 희망자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815편, 2013년 2,007편, 2014년 1,202편의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제작하였다. 정부는 우선 제작된 영상편지를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보관하고, 향후 남북 간 협의를 거쳐 북한 가족에게 영상편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4년부터 이산가족의 사후에도 남북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만 1,914명의 희망자를 파악하였다. 2013년 11월 23일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를 규정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2014년 1,211건의 이산가족 유전자를 검사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이산가족 유전정보를 보관함으로써 이산가족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당국 및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와는 별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고령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을 설명하고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는 초청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지역별로 100여 명 내외의 이산가족이 참여하는 초청행사를 6회 개최하였다.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① 국군포로·납북자 현황

6·25 전쟁이 나갈 무렵 유엔군과 공산군은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교환하였다. 당시 유엔군 측은 국군 실종자의 수를 8만 2,000여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여 상당수가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조창호 소위의 탈북·귀환 이후 2014년 12월 말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귀환하였고, 국방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의 진술을 바탕으로 현재 약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납북자는 6·25 전쟁(1950.6.25.~1953.7.27.) 중 납북자(전시 납북자)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전후 납북자)로 구분된다. 전시 납북자 규모는 조사 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전후 납북자 현황 (추정)】

(단위 : 명)

구 분	어선원	대한항공 (KAL)납치	군·경	기 타		계
				국내	해외	
피랍자	3,729	50	30	6	20	3,835
귀환자	송환	3,263	-	-	8	3,310
	탈북·귀환	9	-	-	-	9
미귀환자	457	11	30	6	12	516

다. 전후 납북자는 총 3,835명이며, 그중 3,319명이 귀환하였다. 귀환자 중 3,310명은 북한이 송환하였으며, 9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 중 자진 탈북·귀환하였다. 2014년 12월 말 기준 북한에 억류된 전후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②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정부는 2011년 12월 26일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여, 범정부적인 납북자 대책기구로서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납북자 대책위원회」는 납북자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및 현안업무의 처리방향과 해결방안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경찰청 관계 공무원 및 대한적십자사 임원 등으로 구성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의 경우 이미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교환으로 종료된 문제이고, 납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송환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적십자회담 및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기시마다 북한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2000년 제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 현재까지 국군포로 및 납북자 93명에 대한 생사확인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35명이 가족을 상봉하였다.

정부는 유엔(UN)의 인권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등 국제사회를 통해서도 납북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유엔(UN)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에서 진행 중인 납북자 가족의 개인청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엔(UN)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③ 전시 납북자 명예 회복 노력

정부 발간 납북자 명부에 따르면 6·25전쟁납북자의 규모는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발간 6·25전쟁 중 납북자 명부】

명 부 명	작성 주체	시기	인원	존재 여부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0년	2,438명	보존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2년	82,959명	보존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1954년	17,940명	보존
실향사민 명부	국방부	1963년	11,700명	일부 보존 ¹⁾

1) 성명별 가나다순으로 구성된 이 명부는 '1번 김○부터 11,700번 이○○'까지만 현존하고 뒷부분은 미상

위 표에 수록된 명부 외에 1952년 1월 4일 국무회의록('6·25사변 피납치자 수에 관한 건')에는 내무부 치안국 조사 결과, 납치자 수는 126,325명(민간인 납치자 36,472명, 강제의용군 73,613명, 비강제의용군 16,240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1954년 3월 공보처 통계국이 발행한 『6.25사변종합피해조사표』에는 납치자 수가 84,53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2010년 3월 26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

복에 관한 법률」(이하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법」)이 공포되어 2010년 9월 27일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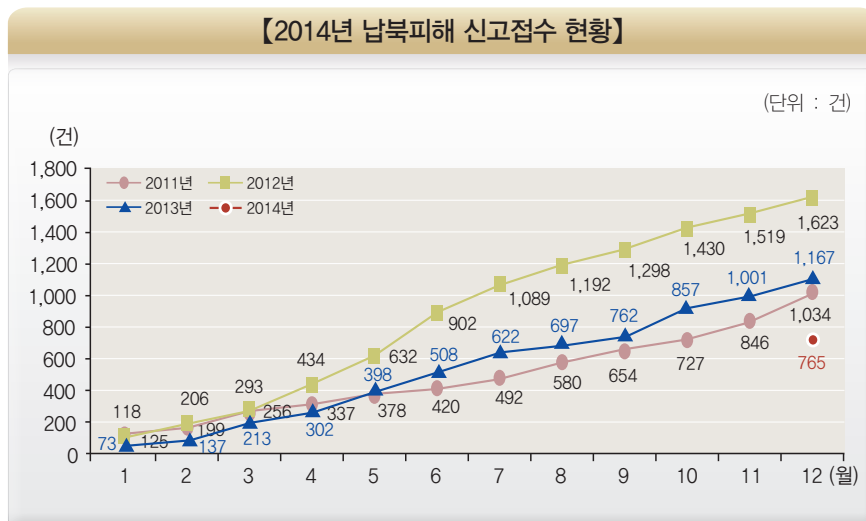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법」 주요 내용

-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구성·운영
-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납북여부 심사·결정
- 6·25전쟁 납북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 시·도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보고서 작성 및 대통령·국회 보고 후 공표
-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 추진
- 국가적 책무로서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등

정부는 법률 시행에 따라 2010년 9월 27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을 설치하고, 2010년 12월 13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위원 5명을 비롯해 납북가족대표 3명과 전문가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로써 정부 차원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차관)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 사실조사 등을 담당할 「시·도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 1월 3일부터 전국 시·군·구 및 재외공관을 통해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를 시작하였다. 2011년에는 1,034건, 2012년에는 1,623건, 2013년에는 1,167건, 2014년에는 765건의 납북피해 신고가 접

수되었고, 2014년 12월 말 기준 누적 신고 건수는 4,939건에 달한다.



신고 접수 건은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전체위원회를 거쳐 평균 1년 정도가 걸려 결정을 받는다. 2011년에는 319건, 2012년에는 929건, 2013년 1,588건, 2014년 12월 말 현재 총 3,635명이 6·25전쟁 남북자로 공식 인정되었다.

【6·25전쟁 남북자 심의 현황】

(단위 : 건)

구 분	상 정	심 의 결 과		
		결 정	비결정	판단 불능
2011년도	319	272	28	19
2012년도	929	835	29	65
2013년도	1,588	1,453	32	103
2014년도	1,182	1,075	18	89
계	4,018	3,635 (90.5%)	107 (2.6%)	276 (6.9)

* 2014년 12월 31일 기준

위원회에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안내 및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재래시장, 전국 관광지, 여객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과 TV, 라디오, 신문 및 SNS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6·25전쟁납북피해기념관 건립을 위해 전시납북자가족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부지를 선정하고, 기념관 건립을 위한 2015년 예산을 확보하는 등 2017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납북피해 신고 건에 대한 조사 및 심사 결정과 함께 6·25전쟁 납북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발굴·수집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납북피해 규모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12월 13일 위원회 출범 이후 2014년까지 국내외 기록조사 활동을 통해 총 2,700여 건(20여만 분량)의 납북 관련 기록을 수집하였다. 2014년에는 우선 국가기록원 등 국내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6·25전쟁 납북 관련 문서·간행물 및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수집하여 『6·25전쟁 납북관련 자료집 : 정부문서편』을 발간하였다. 또한 미국 자료에 대한 번역과 해제를 위하여 『6·25전쟁 납북관련 자료집 : 미국편①·②·③』을 발간하고, 북한 자료도 『6·25전쟁 납북관련 자료집 : 북한편』으로 발간하는 등 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또한, 피생환자·탈북생환자·사건 목격자 등 6·25전쟁 납북피해자 및 피해가족들의 증언채록을 통해 90개 사건 총 105명의 사례에 대한 증언을 채록함으로써 문헌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납북피해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도록 『6·25전쟁 납북관련 자료집 : 증언채록편①, ②』를 발간하였다.

④ 전후 남북피해자 지원

2007년 4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2007년 11월 전후 남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남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남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2014년 12월까지 전체회의를 44회 개최하여 425건의 피해위로금 등 신청에 대해 147억 5,579만원 지급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납북자가족 피해위로금으로 416명에게 129억 1,457만원, 귀환납북자 정착금으로 9명에게 17억 7,361만원, 납북과 관련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이자 보상금으로 1명에게 6,760만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정부는 남북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연말연시, 명절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활이 어려운 납북자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 을 위로하고 있다. 2014년에는 6차례에 걸쳐 납북자 가족을 방문하여 생필품과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남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단위 : 건/천원)

구 분	신 청	지 급 결 정	지 급 액
피해위로금	428건	416건	129억 1,457만원
정착금·주거지원금	9건	9건	17억 7,361만원
보상금	13건	1건	6,761만원
계	450건	426건	147억 5,579만원

* 2014년 12월 31일 기준

▶ 제3절 인도적 지원

①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

정부는 ‘북한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한다’는 기본입장 하에, 통일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제기구·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북한 영유아·산모 대상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농축산·산림·환경과 같은 민생협력 분야로의 지원 확대를 추진하여, 대북지원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4년도에는 국내 민간단체의 자체재원을 통한 54억원 상당의 지원물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정부 차원	당국차원	949	1,221	2,000	1,432			183	-	-	-	-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02	120	134	216	241	77	21	-	-	-	(30)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62	19	139	335	197	217	-	65	23	135	141
	계	1,313	1,360	2,273	1,983	438	294	204	65	23	135	141
	식량차관	1,359	1,787	-	1,505	-	-	-	-	-	-	-
	계	2,672	3,147	2,273	3,488	438	294	204	65	23	135	141
민간차원(무상)		1,558	779	709	909	725	377	200	131	118	51	54
합 계		4,230	3,926	2,982	4,397	1,163	671	404	196	141	186	195

※ '14년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금액 30억원은 공모사업 기금지원으로 '15년도 집행 예정

자 반출을 승인하였으며,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해 141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총 3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투명한 대북지원이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분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지속해 왔다.

② 정부차원의 지원

(1) 당국 및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2014년 2월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2월 24일 북한에 구제역 퇴치 지원을 위한 방역관계자간 실무접촉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회신을 해오지 않음에 따라, 실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2014년 10월, 정부는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북한 대표단을 초청하였으나, 북한은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과 농축산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단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진료소·온실·낙농 3개 분야에서 리 단위 마을을 대상으로 총 30억원 규모의 17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2)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북한 지역 영유아·산모

에 대한 영양·치료·보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모자패키지」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 모자보건사업에 630만 달러(67억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리·군 단위 지역병원을 대상으로 출산, 신생아 응급처치 등을 위한 의료시설 개선 및 의약품·의료물품 공급, 의료인력 교육 등을 실시·지원하였다.

또한 2007년 이후 7년만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 모자보건사업에 700만 달러(74억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북한 지역 87개군의 영유아·산모·수유부 68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식을 지원하였다.

2014년 10월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국내외 NGO 및 국제기구간 합동포럼을 개최하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 및 해외 NGO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3) 대북 식량차관 상환 촉구

정부는 기존 합의 이행 차원에서 북한이 식량차관을 상환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북한에 식량차관 상환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2000년에 제공한 식량차관의 1차 원리금(583만 달러) 상환 기일이 2012년 6월에 도래하여 2012년 첫 번째 상환촉구를 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에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고 있다. 2014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한 2000년 식량차관 3차 원리금(574만 달러), 2002년 식량차관 1차 원리금(700만 달러), 2003년 식량차관 1차 원리금(7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각각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하였다.

③ 민간차원의 지원

2014년도에는 18개 국내 민간단체에서 자체재원을 통해 총 54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였으며, 주요 지원품목은 영유아·산모, 환자 등 취약계층 대상 영양식, 의약품, 소모품 등이었다.

특히, 2014년도에는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품목을 산모용 초음파 등 기초 의료장비, 온실·종자 등 농자재, 가축·사료 등 낙농자재로 범위를 확대하여,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농자재 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대북지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물품의 육로수송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지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해 남북관계 경색 등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실제적인 지원 규모는 크게 증가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2014년 6월 이후, 국내 11개 단체가 대북지원 재개와 모니터링 협의 등을 위해 방북하였으나, 북한은 대부분 개성으로만 지역을 제한하고 평양 및 기타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방문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④ 분배 투명성 확보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수혜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지원 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꾸준히 지도·안내해 왔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인 경우에도 분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국제기구 사무소의 모니터링 인원을 증원하고 현장 확인 수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3년에는 민간단체의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이 7건 이루어졌으나,

2014년에는 북한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국제기구와 해외동포를 통한 모니터링은 큰 차질없이 2013년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간단체와의 상시적인 면담을 통해 분배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북한주민 접촉과 방북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면서 북한에도 우리의 이러한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다.

제4절 북한인권

① 국제사회와의 협력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유감 표명 및 북한 당국에 대한 인권개선 조치 촉구가 이어져 왔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06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유엔 인권이사회도 2008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는데, 정부는 2008년 제63차부터 2014년 12월 제69차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결과 및 우리 정부 입장】

구분	유엔 인권이사회						
연도	2008 (7차)	2009 (10차)	2010 (13차)	2011 (16차)	2012 (19차)	2013 (22차)	2014 (25차)
표결 결과 (찬:반:기권)	22:7:18	26:6:15	28:5:13	30:3:11	무투표	무투표	30:6:11
우리 입장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공동제안	공동제안 찬성

구분	유엔 총회									
연도	2005 (60차)	2006 (61차)	2007 (62차)	2008 (63차)	2009 (64차)	2010 (65차)	2011 (66차)	2012 (67차)	2013 (68차)	2014 (69차)
표결 결과 (찬:반:기권)	84:22:62	91:21:60	97:23:60	95:24:62	97:19:65	103:18:60	112:16:55	무투표	무투표	116:20:53
우리 입장	기권	찬성	기권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 제안	공동 제안	공동제안 찬성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설치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 Commission of Inquiry)는 1년간 한국·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탈북자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그 결과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이에 2014년 3월 28일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관련 현장기반 조직의 설치,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소 등 COI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4년 12월 18일 제69차 유엔 총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내 인권침해 상황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하여, 유엔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가 COI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



2014년 12월 18일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2014년 12월 5일 우리 정부를 포함한 안전보장이사회 10개 이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 12월 22일 처음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였다.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북한인권문제를 언제든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성격이 부여되었으며 3년 내에 한 번이라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될 경우 그 시점부터 또다시 3년간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69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주요 내용

- 북한내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불처벌(impunity) 관행 비난
 - *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고문, 정치범수용소 존재 및 강제노동, 탈북자 강제송환 및 처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인권침해 등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하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 책임자에 대한 효과적 제재 범위 검토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북한 인권상황의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강화를 위하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field-based structure)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을 환영하며, 사무소의 독립적 기능, 충분한 자원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 요구
-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송시 고문, 사형 등 비인간적 대우를 받을 우려가 있는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
- 북한당국의 자국민 보호책임을 부각시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권고사항의 즉각적인 이행, 국제기구와의 협력,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을 촉구

② 민간단체의 인권개선활동 지원

정부는 학술회의, 자료 발간, 캠페인, 문화행사 등 민간단체의 다양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통일부 등록 북한인권 단체는 29개로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활동영역도 북한인권 관련 스피치 대회, 사진전, 다 멘터리 제작 등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노력이 확대되고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 실태 파악을 위해 「(사)북한인권정보센터」와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매년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국·영문)』에 반영되어 대중에게 공개된다.

【통일부 등록 북한인권 운동 단체 현황('14.12월말 기준)】

연번	단체명	대표자	연번	단체명	대표자
1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윤 현	16	(사)김상철 기념사업회	이종윤
2	(사)좋은벗들	최석호	17	(사)탈북동포지원연합	최병두
3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18	선진통일교육센터	도희윤
4	(사)엔케이워치	안명철	19	남북동행	한남수
5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박종훈	20	아시아·태평양 인권협회	유천종
6	(사)통일아카데미	강신삼	21	통일시대사람들	김지우
7	(사)북한전략센터	김진, 강철환	22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8	(사)통일미디어	이광백	23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박광일
9	(사)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김영일	24	NK디자인협회	이주성
10	(사)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25	북한인권학생연대	문동희
11	(사)행복한 통일로	도희윤	26	북한인권제3의길	김상현
12	(사)북한발전연구원	김승철	27	국제펜클럽 망명북한펜센터	장해성

연번	단체명	대표자	연번	단체명	대표자
13	(사)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28	NAUH (Now Action & Unity for Human rights)	지성호
14	(사)겨레얼통일연대	장세울	29	우리하나	최윤철
15	(재)북한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	임창호	총 29개		

③ 북한인권법 제정 노력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제18대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2012년에 6개 법안, 2013년에는 4개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었으나, 2014년 4월 28일 심재권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안인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발의하고, 2014년 11월 21일 김영우 의원이 새누리당 통합안인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여 두 법안을 외교통일 위원회에 동시에 상정하고 2014년 12월 19일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새누리당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기본계획 수립,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 설립,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북한인권증진법안」은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 설치, 인도적지원사무소 설치, 인권정보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
일책서

제4장 남북대화

제1절 정치·군사 분야 회담

제2절 경제분야 회담

제3절 사회문화·인도 분야 회담

제4절 판문점 남북연락업무

제4장 남북대화

정부는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14년에는 1월 6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한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제안을 시작으로 계기시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및 「제2차 고위급접촉」,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의 고위급 대화 등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4년 총 8회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다.

2월 12일, 14일에 개최된 「남북고위급접촉」은 현정부 들어 첫 고위급대화였다. 또, 군사분야에서는 2011년 이후 3년만에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이 이루어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1월 24일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를 시작으로 3월 13일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1차 회의」, 6월 26일에는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5차 회의」가 개최되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남북간 대화가 지속되었다. 또한 사회문화·인도분야에서는 2월 5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 813명의 이산가족이 금강산에서 상봉하였다. 7월 17일에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남북 실무접촉」이 개최되었고, 그 이후 대화를 통해 북한 선수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도 이루어지는 등 각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올 한해 대화와 도발을 오가며 남북대화의 환경을 위협하였다. 북한은 연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이후, 2월초 고위급접촉을 제의하고 특히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의 대화공세를 펼쳤다. 반면 우리 대통령 및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회담 결과를 곡하며 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행태도 병행하였다. 특히 한미연합 군사훈련 및 비방·중상 중단,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중단 등 정치·군사적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양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대화의 진전을 어 기 하였다.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NLL 교전, MDL 충격전 등의 도발을 일으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켰다.

남북은 10월 4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제2차 고위급접촉」 개최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회담 직후 북한이 군사도발을 일으키고, 우리측 민간단체 전단살포 중단을 회담의 전제조건화 하여 결국 「제2차 고위급접촉」은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남북간 합의가 실질적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부당한 요구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처하면서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의 대화를 제의하는 등, 남북 대화를 통한 신뢰 형성 노력도 중단 없이 계속해왔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 당국간 안정적 대화체계 구축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제1절 정치·군사 분야 회담

① 남북고위급접촉

북한은 2014년 연초부터 1월 1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및 1월 16일 국방위원회 중대제안 등을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및 상호 비방중상 중지 등을 요구했다. 또한 2월 5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에 합의한 직후, 2월 6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방중상 중단을 거론하며 상봉행사 무산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월 8일 통지문을 통해 「남북고위급접촉」을 긴급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즉시 이에 동의하고,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접촉 일시 및 장소 등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월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접촉」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규현 1차장을 수석대표로, 청와대·통일부·국방부 관계자 등 5명이 대표로 참여했으며, 북측에서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국방위·통전부 관계자 등 5명이 참여했다.

2월 12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남과 북은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먼저 2월 12일에는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2회 등 총 4회의 접촉을 가졌으며, 우리측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차질없는 개최가 남북관계 개선

의 첫 단추임을 강조하고, 우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합의한대로 개최함으로써 이를 통해 남북간 신뢰를 아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국방위원회 “중대제안” 등에서 주장했던 상호 비방중상 중지와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등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계시키며, 2월 24일부터 예정된 키리브/독수리훈련(KR/FE)을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로 연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계하는 것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문제와 군사적 사안을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시종 견지하였다.

또한 북측은 자신들의 ‘최고존엄’과 체제에 관한 우리 국내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언론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날 남북은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남북고위급접촉 (2014.2.12)

2월 14일 속개된 2일차 회의에서도 우리측은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남북 양측은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의제들에 대해 입장 차이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장시간의 토론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 증진을 위해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향후 고위급접촉을 통해 상호 관심사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협의결과를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4년 2월 12일과 1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1.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2014년 2월 14일

②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

남북 양측은 2월 「남북고위급접촉」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은 합의 직후 2월 21일과 3월 3일~4일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한 우리측의 북한 인권 관련 발언과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등을 거론하며 비방·중상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약할 수는 없으며, 우리측은 남북간의 합의대로 당국 차원의 비방·중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은 3월 29일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전단살포 등과 관련하여 우리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더미’, ‘불바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위협하였다.

이후에도 북한은 4월 23일 조평통 공개질문장을 통해 을지연습 중단 및 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고, 6월 30일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을 통해서도 비방·중상과 을지연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연례적·방어적 훈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대화의 장에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8월 11일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북한에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8월 19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면서 고위급접촉에서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하여 쌍방의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정부는 8.15 대통령 경축사 및 8월 18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8월 14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 만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아시안게임 북한선수단 참가를 계기로 북한 고위대표단이 10월 4일 폐회식에 참석하였다.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하루 앞둔 10월 3일 오전 10시 30분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지원인원은 선수단의 체류 일정을 지원하는 우리측 관계자에게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비서, 김양건 비서 등 북한 고위인사들이 아시안게임 폐회식에 참가할 뜻을 통보하였다. 우리 정부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10월 4일 아시안게임 폐회식 참가차 방한한 북측 고위급대표단과 우리측 대표단간 오찬을 한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양측 참석자 명단】

남 측	북 측
김관진(국가안보실장)	황병서(총정치국장)
류길재(통일부장관)	최룡해(당 비서)
김남식(통일부차관)	김양건(당 비서)
김기웅(통일정책실장)	김영훈(체육상)
천해성(남북회담본부장)	손광호(NOC 부위원장)
김규현(국가안보실 제1차장)	실무자 등 총 8명
홍용표(청와대 통일비서관)	
한기범(국가정보원 차장)	

본격적인 협의에 앞서 북측 대표단은 우리 대통령에게 김정은 제1위원장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였다.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8월 11일 우리가 제안했던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10월말에서 11월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고위급접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 계기 남북 고위급회담 (2014.10.4)

북측 대표단은 통일부장관 환담과 오찬 회담에 참석하고, 북한 선수단을 격려한 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고 귀환했다. 그 과정에서 국무총리 및 여야 국회의원 등과도 면담을 가졌다.

우리 정부는 10월 13일 10.4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제2차 고위급접촉을 10월 30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회담 이후 NLL 교전, 우리측 민간단체의 전단 풍선에 충격을 가하는 등의 도발을 지속하였다.

또한 북한은 10월 26일 통지문을 통해 우리 정부가 10월 25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임했다고 주장하며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10월 27일 통지문을 통해 민간단체 전단 살포와 관련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측이 10월 13일 제의한 「제2차 고위급접촉」에 대한 북측 입장부터 분명히 밝히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0월 29일 통지문을 통해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중단을 사실상 남북고위급접촉의 전제조건화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10월 29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측이 전단살포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고위급접촉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에 태도변화를 촉구하였다.

이후로도 정부는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 차원 남북대화를 제의하는 등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③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제2차 고위급접촉 개최에 합의한 뒤 3일 후인 10월 7일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는 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함정의 경고사격에 대해 대응사격을 실시하여 남북 함정간 교전도 발생하였다. 당일 북한은 총정치국장 명의로 우리측 국가안보실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사태를 수습할 목적’의 긴급단독접촉을 제의하였으며, 김영철 경찰총국장을 특사로 파견할 뜻을 밝혔다. 북한의 제의에 대해 10월 10일 우리측은 「군사당국자 접촉」을 10월 15일 판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이 이에 동의하여 「남북군사당국자 접촉」이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측	북 측
수석대표	류제승(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영철(국방위 서기실 책임참사 겸 경찰총국장)
대 표	김기웅(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문상균(국방부 군비통제차장)	리선권(국방위 정책국장) 곽철희(국방위 정책부국장)

접촉에서 북측은 소위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 내에 우리 함정의 진입금지, 민간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대북 비방·중상 중지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존중, 준수해야 할 것과 자유민주주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활동과 언론은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양측은 상호간의 입장차이를 헤치지 못하고 별도의 합의사항 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2014.10.15)



▶ 제2절 경제분야 회담

①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

남과 북은 2013년 8월에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를 총 4차례 개최하였다.

그러나 2014년 들어 북한의 대남비방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 공동위원회 회의는 5월까지 개최되지 못했다.

우리측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동위원회 사무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정례 개최 필요성을 북한에 수시로 전달하였다.

우리측은 6월 9일 남측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를 6월 19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후 북한은 6월 23일 북측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제5차 회의를 6월 26일에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해 왔고, 우리측이 6월 24일 통지문을 통해 북측 제의에 동의함으로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가 6월 26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되었다.

【생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측	북 측
위원장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위 원	이주태(남북공동위 남측사무처장) 홍진석(통일부 과장) 허진봉(통일부 과장) 나원창(기획재정부 과장) 전제구(산업통상자원부 팀장)	류창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 황충성(조평통 서기국 참사) 윤승현(남북공동위 북측사무처장)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기본발언을 통해 남북간 기존 합의사항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일일단위 상시통행 실시와 인터넷 공급 등 3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북측에 촉구하고, 2013년도 세금면제의 성실한 이행과 상사중재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요구하면서 관련 분과위원회 개최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근로자 임금 및 노무 관련 제도개선 문제와 공단 관리운영 문제 등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만을 설명하면서 우리측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회피하였다.

남북 공동위원장간 두 차례 접촉에서도 북측이 동일한 입장만을 되풀이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협의에는 별 다른 진척이 없었다.

남과 북은 제5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북측이 향후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통보하기로 함으로써 회의를 종료하였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2014.6.26)

2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이하 “3통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공단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원활히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¹⁾, 2013년도에는 3차례 개최된 바 있다.

남과 북은 2014년 1월 몇 차례 통지문을 교환하여 「3통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를 1월 24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측	북 측
위원장	홍진석 (통일부 과장)	리선권 (조선인민군 대좌)
위 원	최인용(국방부 단장) 강중우(통일부 과장) 남승현(국방부 중령) 박태희(미래창조과학부 사무관)	림룡문(조선인민군 상좌) 장비수(조선인민군 상좌) 홍석일(조선인민군 상좌) 리영민(조선인민군 중좌)

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에는 △통행·통신·통관 △출입·체류 △공단보호·관리운영 △국제경쟁력 등 총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다.

제4차 회의에서 남북은 위원장 접촉과 분야별 실무접촉 등을 통해 전자출입체계(RFID)를 이용한 일일단위 상시통행 시행시기와 이에 따른 기술적 문제 등을 협의하고, 전자출입체계(RFID) 운영을 위한 기술적 점검이 이루어지는 대로, 빠르면 1월 28일부터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신·통관 분야에서도 인터넷 연결방식 및 선별통관 등 통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업자간 후속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월 7일 진행된 실무협에서 남과 북은 인터넷 망 구성 및 경로, 서비스 제공 방식 등 인터넷 연결방식에 대해 합의하였고, 향후 사업자(KT-조선체신회사)간 협의를 통해 실무적 문제를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남북 사업자간 협의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우리측은 두 차례(9월 11일, 9월 15일)에 걸쳐 3통 분과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발송하여 3통 분과위원회를 9월 18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우리측 민간단체의 진단살포가 중단되



개성공단 통행·통신·분과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2014.1.24)

어야 3통 분과위 회담도 재개될 것이라는 입장을 통지문을 통해 전달해
으로써 후속 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③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1차 회의

2013년 9월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우리 업체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성공단에서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남과 북은 상기 합의서에 따라 2013년 12월 쌍방 중재위원 명단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다.

2014년 3월 7일 우리측은 향후 상사중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구체적인 분쟁사안에서 중재판정 업무를 담당할 우리측 전문가(변호사, 교수, 기업인 등) 30명의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면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당국간 협의를 개성에서 3월 13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이 3월 10일 북측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동의해
으로써,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1차 회의가 3월 13일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측	북 측
위원장	최기식 (법무부 과장)	허용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위 원	김상국(통일부 과장) 이영호(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이 석(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병철(김안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철원(민족경제협력위원회 법률고문) 허명국(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처장) 장국일(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상급연구원) 김영선(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책임중재원)

에 개성공단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 남북은 향후 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되면 적용될 중재규정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세부 중재절차, 북측 중재인 명부 전달 문제 등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남과 북은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중재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중재제도 도입과 관련된 쌍방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상호 인식을 달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1차 회의(2014.3.16)

▶ 제3절 사회문화·인도분야 회담

①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박근혜 대통령은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설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안,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우리측은 1월 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월 9일 조평통 서기국 명의로 회신 통지문을 보내,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며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측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다만, 북한이 ‘제기했던 문제들도 같이 협의한다면 좋은 시절에 다시 마주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추후 실무접촉의 성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후 북한은 1월 24일 북한 적십자 중앙위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안하였고, 이에 우리측이 1월 27일 통지문을 통해 실무접촉을 1월 29일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남북한은 통지문을 주고 받으며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2월 5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2014년 2월 5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먼저 2013년 8월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이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남북간 합의는 반드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무산된 이산상봉 행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상봉 일정(2.17~22), 상봉 장소(금강산) 및 숙소(금강산 호텔 및 외금강 호텔) 등 관련 실무적 문제에 대한 우리측 안을 제시했으며, 숙소 등 관련시

【생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측	북 측
수석대표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중앙위원)
대 표	김성근 (대한적십자사 국장) 송혜진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김영철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리강호 (금강산 특구지도국 책임부원)

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당면한 상봉 행사 개최 합의 외에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상봉 정례화, 전면적인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도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적 문제는 2013년 합의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상봉 시기(2.20~25), 상봉 규모(남북 각 100명씩, 지난해 확정된 명단), 선발대(행사시작 5일전 파견)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봉행사 이후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 해나가는데 동의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세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남북 양측은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하고 그 규모는 남북 각각 100가족씩 하기로 하고, 상봉대상자는 2013년 9월 남북이 명단을 교환한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봉시작 5일전에 선발대를 파견하고, 상봉장소인 이산가족 면회소, 금강산 호텔 등에 대한 시설점검단을 2월 7일부터 파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남과 북은 설계기 상봉행사가 난 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회담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여 정

하기로 하였다.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2014.2.5)

북한은 적십자실무접촉이 난 직후인 2월 6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무산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어 개최된 남북고위급접촉(‘14.2.12, 14)에서 우리측이 순수한 인도주의문제와 군사적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여 결국 상봉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남북이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2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였다. 상봉행사 이후 우리측은 3월 5일 대한적십자사 총재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인도적 문제해결 논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3월 6일 북측 적십자 위원장 명의로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며 우리측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로써 남북간 실무접촉을 갖기로 한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후 인도적 문제에 대한 남북간 협의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합의서 요지》

1. 설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 실시

- 2.20~25,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 행사
- 상봉대상자는 '13년 9월 쌍방이 교환한 명단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동반
- 단체상봉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와 금강산호텔에서 진행, 숙소는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로 함.
- 상봉시작 5일전에 선발대 파견
- 상봉장 현지점검을 위해 2월 7일부터 남측 시설점검단 파견 및 편의 보장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한 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함.

2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남북 실무접촉

북한은 5월 23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Olympic Council of Asia)」에 제17차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Asian Game) 참가의사를 공식 통보하였다. 이후 6월 28일~29일간 쿠웨이트에서 열린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기간 동안 성사된 남북한 접촉에서, 북측은 「실무회담」을 7월에 개최할 것을 구두 제안하였으며, 7월 10일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실무회담 날짜를 7월 15일로 제의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7월 11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실무회담 개최일자를 7월 17일로 수정 제안했다. 북측이 우리측의 수정 제안에 동의하는 서한을 7월 14일 보내 에 따라,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이 7월 1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측	북 측
수석대표	권경상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손광호 (北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및 서기장)
대 표	정기영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국제본부장) 김영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	장수명 (北올림픽위원회 국제국장) 고정철 (민족화해협의회 참사)

오전 전체회의에서 남과 북의 수석대표는 각기 기초발언을 통해 쌍방의 기본입장을 밝혔다.

우리측은 북한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참여를 환영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선수단 규모, 출입 경로, 응원단 파견 등 실무적 사안들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관련사항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 문제는 OCA현장과 국제관례 및 대회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전달했다.

북측도 기초발언을 통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문제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북측은 선수단과 응원단의 규모는 각 350명이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한 △선수단·응원단의 이동 △경기진행 △신변안전 보장 △통신보장 등의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기초발언 이후 오전회의는 주로 우리측이 북측의 입장을 청취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오후에 속개된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차질없는 대회준비 차원에서 북측이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우리측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북측에 구체적인 설명과 확인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북측의 요구로 2차 전체회의가 정회되었고, 이후 속개된 3차 전체회의에서 북측은

우리의 회담태도를 ‘회담 파탄행위’라고 꼭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회담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하였다.

이로써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 관련 남북실무접촉」은 합의없이 종료되었다. 남북실무 접촉 결렬후 북한은 각종 매체와 담화 등을 통해 회담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 하면서 우리측을 비방하면서도 동시에 대회 참가의지는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북한은 이후, 8월 20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추첨 행사 참석차 방한한 대표단을 통해 북한선수단 참가 관련한 문서협의를 제의하는 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서신을 우리측 조직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북한 선수단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실무문제를 타결하였으며, 북한은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 및 임원 등 총 273명을 파견하였다.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 (2014.7.17)

▶ 제4절 관문점 남북연락업무

남북간 연락업무는 남북회담 지원을 위해 시작되었다. 1971년 9월 20일 개최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예비회담 합의에 따라 1971년 9월 22일 관문점 우리측 자유의 집과 북측 「관문각」에 각기 남북연락사무소(북측 : 북남연락대표부)를 개설하였다. 주로 남북회담 지원을 위해 시작된 남북 연락 업무는 점차 범위가 넓어져 현재는 남북간 교류협력 전반에 걸쳐 남북간 연락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 근무시간은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남북연락관은 오전 9시에 업무개시 통화를 하며, 오후 4시에 마감통화를 한다. 근무시간중에는 쌍방 연락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문건 직접전달이나 쌍방 주민 송환 등의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근무시간 내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실시할 수 있어 사실상 24시간 상시 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남북연락사무소 남북직통전화 통화

2014년도 남북연락 업무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던 2013년도와는 달리 한 차례의 중단도 없이 정상 가동되었다.

국회 결의문 전달,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 서한 교환, 쌍방 주민·사체 인도인수 등과 관련한 남북연락관 접촉을 진행하였으며,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1차 남북고위급접촉,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남북회담과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통지문을 서로 주고받았다.

2014년 한 해 동안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는 직통전화 604회, 남북 연락관 접촉 17회, 서한(문건포함) 교환 11회 및 통지문 교환 53회가 실시되었다.



문건 전달을 위한 남북연락관 접촉

2014년에 우리측은 북한 선원 9명과 선원 사체 3구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도하였다. 북한 선원들은 해상에서 조난했다가 우리측에 의해 구조되었다. 불법적으로 입북하였던 우리 국민 2명과 북한 해변에서 발견된 사체 1구도 판문점을 통해 인수되었다.

한편, 9월 1일 판문점 자유의 집 4층에 판문점 리리를 개관하여 판문점 방문객들이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노력을 홍보·학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였다.



군사분계선 상에서 북한 선원 송환

관문점 리리는 ① 관문점 현황 및 기능, ② 남북회담, ③ 관문점 기원 및 역사 등 3개의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특별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2015년에는 관람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일반 단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문점 갤러리

유엔군사령관은 관문점과 비무장지대의 남측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사와 남북한 간, 유엔사와 북한군 간에 이루어진 주요 연락 내용을 공유하며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관문점에서 남북회담 개최, 남북 주민송환 등 관문점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 등의 경우에도 유엔군사

령부의 협조를 받는다.

한편 2014년에 유엔사는 북한 측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총 56건의 통지문을 판문점 군사분계선 상에서 북한군 측에 통보했다. 북한은 2013년 3월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와 유엔사 군정위 간의 직통전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했으며, 유엔사는 그 이후 2014년 말 현재까지 북한군 측에 대한 통지문을 판문점 군사분계선 상에서 육성으로 통보해오고 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측의 대북 통지문 육성 통보



특별
이벤트

제5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1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제2절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정착지원

제5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8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부터 탈북 여건의 악화 등의 원인으로 감소하였다. 2014년에는 총 1,396명이 입국하였으며, 2014년 12월 말까지 총 2만 7,51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다.

탈북여성의 입국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탈북남성을 추월하여 2014년까지 총 입국인원 중 약 70%에 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합계
남	831	565	511	472	624	423	512	571	608	671	589	797	405	369	304	8,252
여	116	479	632	810	1,272	959	1,510	1,977	2,197	2,258	1,813	1,909	1,097	1,145	1,092	19,266
합계	947	1,044	1,143	1,282	1,896	1,382	2,022	2,548	2,805	2,929	2,402	2,706	1,502	1,514	1,396	27,518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1%	73%	76%	78%	70%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단이주민 중 하나로 보고 이들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의 보호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이들을 전원 받아들이는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 또한 국내 입국 후에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선을 맞추어 준다는 의미에서 각종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사회적응교육은 정서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 부여를 위해 하나원 기수별로 12주 총 392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직업교육 과정을 개편하여 여성 교육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직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남성 교육생도 기존에 5가지 직종 중에서 본인이 택한 1직종을 집중 교육하던 방식에서 11개 직종을 1일 1직종씩 체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직장설명회」를 신설하였다. 초기 건강관리를 위해 2014년 4월부터 잠복결핵 치료를 시작하여 결핵감염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심리교육 프로그램으로 2014년 4월부터 「숲 치유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거주지 전입 이후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적응센터 등으로부터 교육지원, 취업알선 등 정착과 관련한 지원을 받게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정착도우미·전문상담사 운영, 방과후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통하여 교육지원, 취업알선 및 생활안정을 돕고 있다. 지역적응센터는 2014년 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31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거주지 적응교육, 취업상담 연결, 방과후 공부방 운영, 학습지도, 정착지원제도 안내 등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지 밀착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정착지원법에 근거하여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서는 △맞춤형 정착지원을 통해 행복한 정착 추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사회적 통합 유도 △중앙정부-지자체-민간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안정적 정착을 통한 통일준비 역량 강화 등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5개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체계화, 구체화 하였으며 중복지원에 따른 자원낭비를 없앨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세스】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 보호요청시 관계 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보호센터

- 입국 후 국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보호결정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하나원

- 사회적응교육(12주, 392시간)
 -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기초 직업교육 등
- 가족관계등록, 주거알선 후 거주지 전입

거주지
보호
(5년)

- 취업지원 : 직업훈련,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 등
- 교육지원 : 특례 신·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사회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례 적용
- 보호담당관제 : 거주지(지자체) · 취업(고용센터) · 신변보호(경찰)
- 민관협력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101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 종합서비스 제공

민간참여

- 지역적응센터 지정·운영(31개)
 - 거주지 적응교육, 심리·진로상담, 생활정보제공 등
-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정착도우미 운영(523명)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92명)
 - 전문적 상담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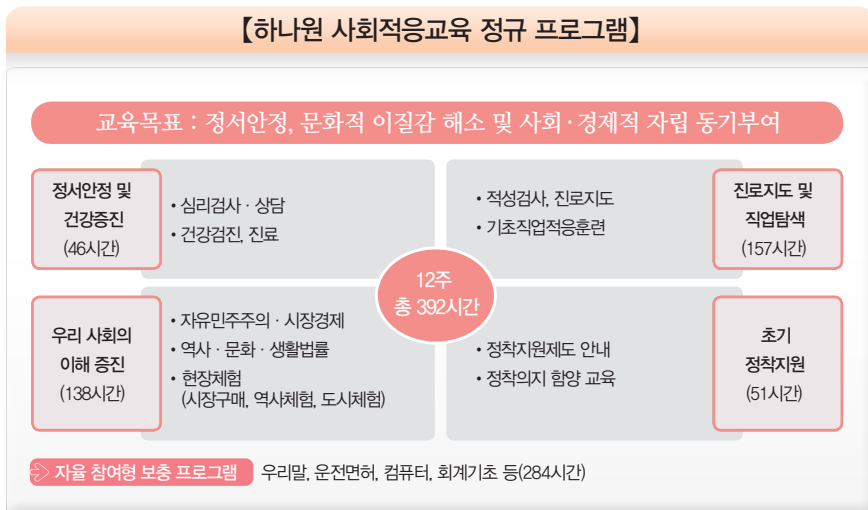


▶ 제1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① 사회적응 기본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사회적응교육은 정서 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와 함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동기부여를 교육목표로 ①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② 우리 사회 이해 증진 ③ 진로지도·직업교육 ④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 과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정규프로그램 외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 「자율 참여형 보충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선택학습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4년에는 현장실습, 민주시민교육과 실용교육과



의 조화, 유관부처와 협업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사회적응교육을 운영하였으며, 2014년 하나원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1,601명이다.

2 초기 직업교육 및 진로 설계

북한이탈주민이 자기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취업의욕 증진 프로그램」, 「기초직업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 직업교육 실적】

(단위 : 명)

구분	수료 인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여성	1,351	1,002	843	959
남성	546	361	254	239
계	1,897	1,363	1,097	1,198



직업탐색식 직업교육(봉제)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직장 설명회」를 신설하였으며, 매월 1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직장탐방, 직장생활 성공·실패사례 특강, 1일 직업체험 등을 실시하여 2014년에 1,05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설명회에 참여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직장설명회

③ 아동·청소년 교육

하나원 내 하나돌학교에서는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 및 학력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반 1개, 초등반 2개, 청소년반 3개 등 총 6개반으로 분반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치·초등반 아동들은 하나원 인근의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서 일반 학생과 함께하는 통합수업을 받고 있다. 방과 후에는 하나돌학교에서 기초학습, 한국어교육, 정보화교육, 자기소개와 공동체 활동 등 수업을 듣고 있다.

우리말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연령별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2013년보다 확대하여 진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제3국 출생 아동, 문맹 아동을 위한 「한글교실」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청소년반은 하나돌학교에서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다. 2014년에는 교육부 파견교사 1명을 증원하여 총 13명의 교사·강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기 특성에 맞춰 기초교과학습과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경제교육, 잡월드의 진로체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소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연도별 아동·청소년 교육생 인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유치반	0	6	12	14	18	24	14	19	53	54	63	70	69	42	37	28	523
초등반	3	34	38	68	74	139	74	97	104	107	142	118	179	124	98	87	1,486
청소년반	2	7	65	132	97	160	111	169	232	276	220	193	198	113	106	90	2,171

④ 초기 건강관리

「하나원」 내 「하나의원」은 1차 의료기관으로 의사, 간호사 등 20명의 의료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초기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안성 하나 의원은 내과, 치과, 한방과, 산부인과, 정신과, 소아청소년과 6개 진료과목을, 화천 하나의원에는 내과, 치과, 한방과, 정신과 등 4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진료과목별 1차 진료, 예방접종, 암 검진, 보철치료, 보건교육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정밀검사 및 입원 수술치료가 필요한 2, 3차 진료는 인근 협력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진료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매주 1~2회, 치과 보철치료는 (사)열린치과봉사회가 매주 1회 방문하여 진료를 하고 있다. 2014년 정규직 의무사무관 2명을 확보하여 치과의사 및 정신과의사를 각각 채용하였다.

2014년 4월부터 잠복결핵 치료를 시작하여 결핵감염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316명의 잠복결핵을 치료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교육 중에는 물론 수료 후에도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14년에는 (사)열린치과봉사회(3.14), 국립경상대병원(4.8), 국립춘천병원(11.27) 등과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포함 총 56개 병원과 협력하고 있다.

【연도별 진료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원내진료	31,253	40,137	49,303	27,773	19,136	18,389
원외진료	1,774	2,459	3,181	2,997	1,682	1,889
입원, 수술치료	196명	277명	315명	279명	251명	226명
보철치료	456명	653명	707명	615명	593명	531명

「하나원」 심리상담실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심리·정서안정 교육프로그램 등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인반의 경우,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입소 후 모든 교육생에게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를 실시하고, 조기에 심리적 개입이 필요한 교육생을 선별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 신청함」을 활용하여 교육생이 원할 때 자발적으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집단상담(마음나누기) 프로그램은 자기성격 이해 및 공감대화법 익히기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심리교육 프로그램은 자신과 타인 이해, 스트레스 관리, 사회성 향상 등으로 이루어지며, 2014년 4월부터는 「숲 치유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8회 운영하였다.

청소년반의 경우에도 입소 후 「탈북청소년 심리상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집단상담(자존감 향상) 프로그램과 심리·정서안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로반은 입소 후 인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년기 특성을 고려하여 인지재활 및 정서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치매예방과 노년기의 바람직한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4년에

는 개인 심리상담 891건, 개인 심리검사 160건을 실시하였다.

【연도별 개인 심리상담 및 검사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개인 심리상담	261	247	678	646	1,044	985	891
개인 심리검사	19	17	36	19	84	105	160

⑤ 심화교육 · 직무교육

제2하나원은 국내 입국한 성인 남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외에 하나원을 기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차원의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취업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도에는 요양보호사, 용접기능사, 간호조무사,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의사직업전환 등 5개 심화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103명이 수료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업 하에 보호담당관, 탈북학생 담임교사,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멘토, 정착지원 전문가, 통일교육원 연계 과정 등 총 11개의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794명이 수료하였다.

【2014년 심화교육·직무교육 운영 실적】

(수료인원 기준)

구분	과정명	기간		인원	비고
심화교육 (수료 탈북민)	요양보호사	4기	1.6~3.5	19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지원
		5기	5.12~7.4	21	
		6기	8.25~10.24	25	
	용접기능사	4.28~11.6		6	용접기능사 자격증 취득 지원
	간호조무사	3.10~12.24		7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지원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6.30~11.14		15	중국어 어학능력 인증 및 중 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취득 지원
의사직업전환	4.21~10.17		10	의사국가고시 준비 지원	
합 계				103	

구분	과정명	기간		인원	비고
직무교육 (정착지원 관계자)	보호담당관	1기	9.16~9.19	21	신변·거주지·취업 보호담당관 대상 탈북민에 대한 이해 제고
		2기	9.23~9.26	21	
		3기	9.29~10.2	30	
	사회복지담당관	1기	6.17~6.20	21	지자체 사회복지담당자 대상 탈북민에 대한 이해 제고
		2기	6.24~6.27	25	
	탈북학생 담임교사	8.4~8.8		36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 제고
	탈북민 공무원 멘토	10.16~10.17		10	탈북민 공무원에 대한 이해 제고
	탈북민 공무원	10.27~10.31		20	공직자 기본소양 교육
	전국 하나센터 관계자 워크숍	2.19~2.20		95	지역정착 관계자 업무능력 향상
	탈북민 취업지원 워크숍	7.24 ~ 7.25		24	고용주 대상 탈북민에 대한 이해 제고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8.18~8.21		19	탈북민 학생 지도능력 향상
외교부 재외공관 탈북민 담당관	7.2~7.4		12	탈북민에 대한 이해 제고	

구분	과정명	기간		인원	비고
직무교육 (정착지원 관계자)	탈북민 정착지원 전문가 과정	초급	7.28~8.1	28	탈북민 정착지원 관계자 대상 정착지원업무 전문성 제고 * 남북하나재단 협업
			8.18~8.22	18	
			9.15~9.19	26	
		중급	10.13~10.17	19	
	고급	11.12~11.15	15		
	통일교육원 연계과정	1~8차	7.8~11.27	354	탈북민에 대한 이해 제고
합 계				794	

* 인원 : 수료인원 기준

제2절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정착지원

① 초기 정착지원

(1)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및 주택알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과 주민등록신고 지원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가족관계 등록부가 창설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신분 확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하나원」은 2007년 6월부터 전국 시·도별로 주민등록 기준지 22개를 지정하여 교육생이 수료 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하나원」 수료 후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택한 거주지에 주택을 배정받아 입주하게 된다. 통일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 지역도시공사 등과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하게 주택을 배정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를 결정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먼저 입국한 가족의 거주지를 고려하지만 지역별로 알선 가능한 주택의 상황도 감안하여 추천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주택 알선 현황】

(단위 : 세대)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세대 수	1,681	1,837	1,815	1,320	1,027	1,232	8,912

(2) 정착금 지원제도

정착기본금은 세대를 단위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하나원」 수료 직후 초기 지급금을 지급하고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인 세대의 경우 기본금은 총 700만원이며, 초기 지급금이 400만원, 분할 지급금이 300만원이다. 기본금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00만원 이었으나 2013년부터는 사회 편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해 7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2014년에 1,601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94억원의 기본금을 지급하였다.

【기본금 지급기준】

(단위 : 만 원)

세대원수	기본금		주거지원금	합계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1인	400	300	1,300	2,000
2인	500	700	1,700	2,900
3인	600	1,000	1,700	3,300
4인	700	1,300	1,700	3,700
5인	800	1,600	2,000	4,400
6인	900	1,900	2,000	4,800
7인 이상	1,000	2,200	2,000	5,200

【기본금 지급현황】

(단위 : 명/백만 원)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원(명)		2,321	2,435	2,417	1,524	1,307
기본금 (백만 원)		18,918	13,932	13,815	12,167	9,173	9,429

정착가산금은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령(보호여부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가정 아동보호를 위하여 지급한다. 동일인에게 중복의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하나의 사유만을 인정하고, 동일세대에 대한 가산금 총 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이내이며, 기본금 지급 종료 후 남은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2014년에 208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15억원의 기본금을 지급하였다.

【가산금 지급기준】

구분	기준	금액
연령 가산금	만 60세 이상	720만 원
장애 가산금	장애등급별	1,540만 원(1급), 1,080만 원(2~3급), 360만 원(4~5급)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개월 X 80만 원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 가산금	만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한 부모가정	360만 원

【가산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가산금	장애인	5,421	6,635	4,991	3,147	24,346	21,226
	연령	7,524	8,418	8,490	6,711	79,461	65,817
	한 부모가정 아동보호	3,912	4,852	5,871	5,676	71,733	63,115
	장기치료	72	428	400	568	4,000	4,320
계		16,929	20,333	19,752	16,102	179,540	154,478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하여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업훈련

장려금은 500시간 이상 740시간 까지의 직업훈련 수료자에게 120만원 ~160만원을 지급한다. 자격취득장려금은 자격증 취득시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급한다.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 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3년간 취업장려금을 받을 경우 수도권은 1,650만원, 지방은 1,9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014년에 5,397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214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장려금 지급기준】

(단위 : 만 원)

구분	기준		금액	
직업훈련장려금	500시간 이하		미지급	
	500시간		120	
	500~740시간		120~160 (120시간당 20)	
*직업훈련 추가장려금	1년 과정, 우선선정직종		200	
자격취득장려금	1회 한정		200	
취업장려금	1년차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신청 시 지방 250, 수도권 200 지급	(수도권)450	(지방)550
	2년차		(수도권)550	(지방)650
	3년차		(수도권)650	(지방)750
총액			(수도권)2,210	(지방)2,510

전체 장려금 수혜 인원과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장려금 수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초기 취업활동이 활발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만원/명)

연도 구분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우선선정직종	취업장려금	총액
2009	88,400 (681명)	104,000 (520명)	21,800 (109명)	296,900 (646명)	511,100 (1,956명)
2010	150,000 (985명)	171,200 (856명)	65,000 (325명)	668,600 (1,325명)	1,054,800 (3,491명)
2011	118,100 (726명)	163,800 (819명)	70,400 (352명)	1,181,300 (2,406명)	1,533,600 (4,303명)
2012	191,600 (1,118명)	294,400 (1,472명)	99,200 (496명)	1,720,380 (3,455명)	2,305,580 (6,541명)
2013	122,140 (774명)	190,400 (952명)	53,200 (266명)	1,660,750 (3,304명)	2,026,490 (5,296명)
2014	108,240 (706명)	175,660 (879명)	36,200 (181명)	1,823,750 (3,631명)	2,143,850 (5,397명)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급여의 1/2을 월 50만원 한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2014년에 2,659개 업체에 146억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단위 : 개/명/만 원)

연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업체수(개)	1,151	1,419	1,717	2,915	2,824	2,659
인원(명)	1,489	1,963	2,565	3,976	4,206	3,966
지급액(만 원)	634,900	973,300	1,313,209	1,533,482	1,574,200	1,461,540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단속 현황】

(단위 : 만 원/%)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지급액 (만 원)	1,151개 업체 634,900	1,419개 업체 973,300	1,717개 업체 1,313,209	2,915개 업체 1,533,482	2,824개 업체 1,574,200	2,659개 업체 1,461,540
부정수급액 (만 원)	2개 업체 5,000	9개 업체 4,574	24개 업체 8,388	7개 업체 7,678	3개 업체 5,340	9개 업체 7,018
부정수급률 (%)	0.8	0.5	0.6	0.5	0.3%	0.5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은 주택 임대애 필요한 보증금을 지원받는데, 세대를 단위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책정된 주거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지급받고 남은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받는다.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이내라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2014년에 1,601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233억원의 주거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주거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명/백만 원)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원(명)	2,321	2,435	2,417	1,524	1,307	1,601
주거지원금 (백만 원)	19,526	24,069	26,997	25,516	21,454	23,288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전국 각지의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방거주 및 지방취업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거주 장려금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시 및 그 외의 지역으로 첫 거주지를 택하여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주거지원금의 10~20% 상당액을 지

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2014년에 555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12억원의 지방거주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지방거주 장려금 지급현황】

(단위 : 명/백만 원)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원(명)	2,964	1,126	369	744	752	555
지급액(백만 원)	4,908	1,673	805	2,323	1,806	1,172

북한이탈주민은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받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학에 진학하면 국·공립 대학의 경우 학비는 전액 면제된다. 사립 대학의 경우 6년의 범위 내 8학기 동안 정부가 학비의 50%를 해당 학교에 보조하여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2014년에 253개 대학, 1,892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42억원의 교육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사립대학 교육지원 현황】

(단위 : 개/명/백만 원)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학수(개)	136	156	157	183	200	253
지급 인원(명)	708	952	1,334	1,570	1,704	1,892
지급액(백만 원)	1,930	2,352	3,158	3,294	3,747	4,213

② 거주지에서의 보호 및 지원

「하나원」을 수료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한 거주지에 임대주택을 앞선받아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지방자치단체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지역적응센터, 민간 자원봉사자인 정착도우미, 3종(거주지·신변·취업) 보호담당관과 그 밖의 지역 민간 복지·종교·봉사 시설과 단체 등 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3종(거주지·신변·취업) 보호 담당관과 복지관,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회의체이다. 2001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협의회」가 최초로 구성된 이후, 2014년 12월 현재 101개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9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할 뿐만 아니라 정착지원과 관련된 지역 내 각종 사업을 공유, 심의함으로써 탈북민에 대한 균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효율적 민관협력 네트워크이다.

특히, 2014년 11월에 모든 광역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 담당부서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제1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협업 강화 워크숍’(11.5, 서울)을 개최, 중앙-지방 간 정착지원 관련 정례적 협의체계를 구축하였다. 향후 「지역협의회」가 지역내 통일준비 클러스터(지자체 대북교류, 통일교육, 통일문화 등과 연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

갈 계획이다.

(2)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한 직후 초기집중교육과 취업·교육·의료·생계 등 개인별 맞춤형 사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009년 서울, 경기(2), 대전, 대구, 광주 등 총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전국 16개 시도 30여 곳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4년 12월말 현재 31개 지역적응센터가 운영중이다. 특히 2012년에는 지난 3년간의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영 역량이 현저히 낮거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센터 및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단체 재공모 및 통합운영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2014년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설치 지역】

(단위 : 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경북	경남	광주
개수	4	6	2	3	2	2	2	1
지역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충북	전북	전남	제주
개수	1	1	1	1	2	1	1	1



(3) 보호담당관

지역사회에 갓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 경찰서에 신변보호담당관,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고 있다. 거주지 보호담당관은 전입신고, 주민등록 외에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 사회보장제도 편입을 도와주고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담당한다. 신변보호담당관은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의 고용센터에 전문 직업상담사로 지정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등 특별제도를 활용하여 진로 상담 및 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진행하고 있다.

③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 및 자산형성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있어 핵심은 일자리라는 점에서, 취업 확대 및 장기 근속유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증진과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낮은 북한이탈주민의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개최하여 탈북민들에게 일자리 정보 및 스스로의 취업역량을 점검하고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행복통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탈북민들의 취업과 장기근속 유도에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고용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직업훈련개발계좌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계좌로 지급된 직업훈련비 한도(20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직업훈련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전용반으로 개설된 직업훈련과정에 참가할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부담 없이도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별 상담을 통해 자신의 취업역량 등을 정확히 진단받고 진로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을 추천받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직업훈련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부담 없이 수강이 가능하며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 축하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역량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재단에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4개 지역에서 2014년에는 27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취업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 소자본 창업지원 및 영농정착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였다.

「취업지원센터」는 2012년 3월에 개소되어, 북한이탈주민 1 : 1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 구직자 등록 등 체계적인 DB관리, 취업교육 및 이동취업상담 등 구직자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취업지원센터 알선 및 채용실적(1.1~12.31)】

(단위 : 건)

구분	구직등록	취업상담	구인등록	알선	취업	동행면접
누계	1,812	1,257	15,293	1,097	763	396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총 직원의 30% 이상으로 채용하였거나 이를 약정한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직접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2013년 총 4개 기업에 더해 2014년에는 1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을 신규로 받아 2014년 11월 말 기준으로 24개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14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나는조합」과 협력하여 예비창업자 자금조성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지원,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을 지속

하고 있으며, 영농희망자에 대해 하나원 영농교육, 영농실습, 영농컨설팅 연계, 운영비 지원 등 영농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 사이에 영농정착모델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도권 지역에서 5회에 걸쳐 개최하여 탈북민들에게 다양한 기업들의 취업 정보는 물론, 취업 상담 및 진로지도를 통해 취업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스스로의 취업역량을 점검하고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수도권 취업박람회(2014.11.19) 입구



박람회장 전경

(3)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활성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월 ‘북한이탈주민 정부내 활용계획’ 지침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부내 채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2014년 6월말 현재 15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정부부문에 재직하고 있으며, 채용된 북한이탈주민들은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2013년 4월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되었고, 2013년 3월에는 공무원임용령이 개정 시행되어 북한이탈주민과 귀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임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 바,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사업

정부는 2014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5.28 공포, 11.29 시행)한 데 이어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산형성지원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산형성제도는 북한이탈주민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제도이다. 이는 고용주가 아니라 탈북민 본인에게 직접 혜택을 줌으로써 취업동기를 부여하여 취업률을 제고하는 한편,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산형성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탈북민에게는 기존의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게 된다. 기존 고용지원금은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탈북민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탈북민의 취업률은 점차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용지원금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즉, 고용지원금 지원시점이 종료된 후 이직을 초래하여 탈북민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한계를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고용지원금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한 단순노무직으로의 취업이 많아 고용지원금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어왔다.

정착지원법 상 자산형성제도는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주거마련 등의 용도로 매월 저축을 하는 경우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매월 적립하여 만기도래시 그 적립금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결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로서 최초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거주지보호기간 내에서 보호대상자에게 출산 또는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또한 동 제도는 탈북민에게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해주기 위해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등으로 저축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영 제40조의2제2항) 만기시 적립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산관리를 위한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 제40조의2제7항)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며, 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추가적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영 제40조의2제3항).

자산형성제도가 본격 실시되면 탈북민의 적극적인 취업동기가 부여되고 장기근속의 가능성을 높여 취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고되어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형성제도 개요】

구분	세부 내용(안)
적용 대상자	• 14.11.29(법 시행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된 자부터 적용
적용 기간	• 거주지 보호기간(5년) - 출산, 군복무(직업군인 제외)의 경우 최대 2년의 기간 동안 납입기간 유예
적립금 납입기간	• 최대 4년(2년+1년+1년, 보호기간 5년 이내) - 단, 직업훈련 및 직업탐색 기간 없는 조기취업에 따른 저숙련 일자리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원 수료 후 최소 6개월간 가입제한
적립금 출처 제한	• 탈북민의 근로소득으로 제한
만기 지급시 사용처 확인	• 주거·교육·사업 등 용처 제한, 만기해지 요건 심사 - 만기가 되더라도, 실제 용처에 사용했을 경우에만 지급
만기 수령 조건부과	• 기초생계수급 탈피, 금융 및 자산관리 교육이수 제도화 - 초기 지역적응교육 이수

④ 미래 통일인재 육성을 위한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2014년에는 탈북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를 전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배치하였고, 전담코디네이터를 통해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여 탈북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탈북학생 중도탈락률이 전년 3.5%에서 2.5%로 1%p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정규학교 내의 보살핌 외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가정에서의 교육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학습지 지원(월평균 810명), 영어교육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어화상교육 지원(월평균 115명) 및 탈북 중·고생, 대학(원)생 등 총 415명에게 약 5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특히 이공계, 전문대 등 취업과 연계가능한 전공을 우대하여 지원하였다.

한편 학력결손, 연령격차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 밖에서 교육받고 있는 탈북청소년을 위해 8개 민간 대안교육시설에 9억 원, 각 지역에 분포해 있는 20개 방과후 공부방 시설에 약 10억 6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탈북청소년들에게도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학 진학을 앞둔 탈북청소년들에게 입학 및 진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 입시박람회」를 2011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일반대와 전문대의 입시박람회를 함께 개최하여(6.30, 450명 참여)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탈북청소년들은 미래 통일한국에 중요한 역할을 할 세대로서 정부는 이들이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탈북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된 「WEST(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25명을, 그리고 2014년도에는 4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여 일반WEST와 동일하게 최장 18개월 동안 현지에서 어학연수 및 인턴 활동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1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미래리더 경진대회」를 2014년도에도 개최하여 통일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 스스로 만든 기획안에 대해 실제로 추진해 보는 기회를 갖는 등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우수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였다.

2012년도부터는 제3국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 대안교육시설 및 방과후 공부방 시설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고 아동 학습지 지원과 영어화상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생활안정 지원

(1)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는 2014년 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9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총 75,846건('14.12월말 기준)의 상담 및 각종 지원 연계를 수행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출신 중 상담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소정의 전문상담사 교육을 받아 채용되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은 이제 막 우리 사회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자신의 정착 노하우와 경험을 생생하게 공유할 수 있고, 상담 시 상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 현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도 상담 실적】

(단위 : 건, 12월말 기준)

상담 분야	취업	주택	건강	교육	지원 제도 안내	심리 /정서	의료 /생계 급여	가정 문제	법률 관계	기타	합계
상담 실적	12,253	4,263	9,716	8,083	6,673	12,913	2,172	5,134	4,485	10,154	75,846

(2) 정착도우미

민간의 자원봉사자 중 지원자에게 북한이탈주민 특성 교육 등을 실시하여 우리 사회에 막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전입하면 임대주택 입주, 주민등록 신고, 가정방문(월 2회) 등을 통해 ‘친근한 이웃’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4년 12월말 현재 전국 31개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523명이 활동하고 있다.

(3) 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장기이식이나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연간 한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하나원」 수료 직후 지역적응교육 및 구직활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근로가 어려운 기간에 필요한 초기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약 3주 정도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쌀, 고추장, 간장, 라면,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의 식료품, 생필품을 27종 21만 원 상당으로 구성하여 세대당 1개씩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임대주택 지원공급 등으로 「하나원」 수료 후의 임시거주자에 대한 쉼터 12개소 운영, 무연고청소년 그룹홈 13개,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 여성에 대한 쉼터 2개소 운영 등 취약계층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는 탈북 후 제3국 장기체류 등으로 <정착지원법> 상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하나원」 수료 후 거처를 확보할 때까지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하였다.

⑥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력 및 인식 개선

(1)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에서는 지역 복지관, 종교시설,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상담, 교육, 주민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역량을 활용한 협력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주민통합, 취약계층 지원, 자립 지원활동 증진을 위한 「민간협력프로젝트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구축사업」을 운영하였다. 일반 공모로 진행된 「민간협력프로젝트사업」에서는 12개의 단체를, 북한이탈주민이 대표자인 단체 제한공모로 진행된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구축사업」에서는 10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이와 별개로 「지정위탁사업」을 통해 2개 사업을 시범 지정함으로써, 우수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2) 인식 개선

2014년에는 착한(着韓)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여 이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의 정책 브랜드로 삼아, 착한(着韓)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정착 사례인 착한(着韓)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언론과 뉴미디어를 통해 전방위로 확산하는 데에 홍보사업의 중점을 두었다. 열심히 땀흘려 일하며 소소하게 삶을 일구고 있는 착한사례 발굴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간행물, 언론, 뉴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시켰다.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자를 모델로 하는 상호인식제고 공익광고 캠페인 영

상 「북한이탈주민, 착한(着韓) 우리 이웃입니다」를 제작하여 공중파TV, 케이블TV, 옥외전광판, 지하철 행선안내기, 공항 등을 통해서 캠페인을 전개·확대하였다. 정착사례자는 SBS, MBC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연계하여 방영하였으며, 동아일보와 착한사례 공동프로젝트를 특집 연중기획 보도함으로써 탈북주민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도왔다. 북한이탈주민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가공되어 전문지,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었고, 온라인매체를 통한 캠페인 및 프로모션으로 일반국민이 자연스럽게 착한사례를 접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했다.

올해 50호 발간을 맞은 동포사랑은 2014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매체 부문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여 상호인식 제고를 위한 매체로 인정받았다. 통일꿈나무 달력 제작 등을 통해 착한 사례 발굴과 콘텐츠 제작에 탈북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PD연합회와 着韓미디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전기(轉機)를 마련하고 정착지원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 언론 및 미디어업계 종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였다.

또한 「남북한주민이 함께하는 2014 어울림 한마당」(2014.10.11.,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행사를 통해 남북한주민 2,500여 명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과 교류의 장도 개최하였다. 어울림한마당을 비롯한 각 지역 행사에 착한사례 부스 운영을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상호인식 제고를 도왔다. 한편 재단은 격월간 소식지 《동포사랑》(매월 2만 5천부), 영문 뉴스레터《NKRF News》, 브로슈어, 착한사례집 등 각종 홍보물을 발간 및 배포하여 관련 소식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1회 탈북민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를 2014년 12월 4일에 개최하였다.



제6장 통일교육

제1절 통일교육 추진기반 확충

제2절 통일교육과정 운영

제3절 학교통일교육 지원

제4절 사회통일교육 지원

제5절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제6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

제6장 통일교육

정부는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마음이 통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민 통일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통일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였다. 특히 통일 한반도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에 역점을 기울였다.

우선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제도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제2회 통일교육주간」 및 일선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통일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실시하여 학교통일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문제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통일리더캠프·청소년 통일문화경연대회·통일부 어린이기자단 등 청소년들이 통일을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다양한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교육자료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감성적,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하였다. 뽀로로, 구름빵 등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캐릭터를 활용한 공감영상과 애니메이션,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보급하였고, EBS와 공동으로 청소년 통일드라마를 기획, 방영하여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통일교육원 초청교육은 통일교육의 확산을 고려한 핵심인재 육성에 주력

하는 한편, 글로벌 교육과정 신설을 통해 국제사회로 외연을 확장하였다.

국내 대학·공공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외동포 및 해외 전문가 활용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다. 송실대, 동아대, 방송통신대, 공군사관학교, 서울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에서의 통일강좌 개설과 및 통일 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하였다.

2013년부터 실시한 해외 신진학자 초청교육과 해외 전문가 초빙교수 사업을 통해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기반을 마련하는데도 기여하였다.

범국민적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으로 시민 대상 통일교육도 꾸준히 실시하였다. 제19기 통일교육위원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사로 개편 위촉하였으며, 지역별 거점대학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하고 대학총장을 지역협의회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통일교육위원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였다.

지역사회의 열악한 통일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일부 통일관에 대한 시설안전공사 및 전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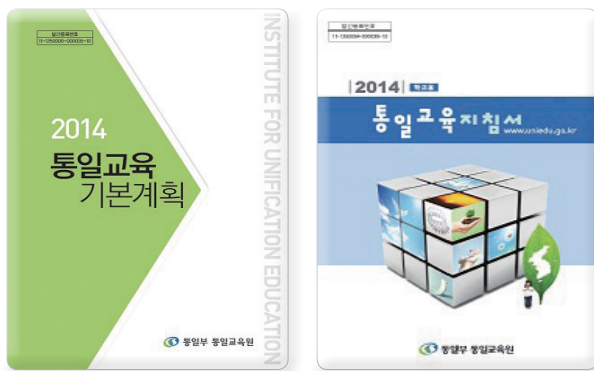
한편 국내 최초로 본격적인 통일 체험연수 시설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2014년 11월 개관하여 청소년을 위한 체험형 통일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통일 전·후의 편익을 직접 비교 체험할 수 있는 통일미래체험관을 비롯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와 감동이 있는 통일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 제1절 통일교육 추진기반 확충

① 기본계획 및 지침

정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의 중기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통일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내실화 △통일교육의 저변확대를 통일교육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제시하였다.

한편 정부는 학교통일교육 및 사회통일교육이 일관된 원칙과 목표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 일선 통일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2014년 통일교육 지침서는 청소년기의 통일교육에 있어서 문화적·정서적 접근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과, 드레스덴 선언 등 2014년에 새롭게 대두된 주요 이슈들도 반영하였다.



2014년 기본계획 및 통일교육 지침서

2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범국민적 통일 공감대 형성 및 통일준비 태세 확립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통일교육 참여자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통일부와 학교정책의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2014. 5.26 통일시대 기반구축에 기여하는 체계적인 학교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실시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의 내실있는 운영 △「통일교육주간」 ‘계기수업’ 확대 △교원 사이버 통일연수 확대 운영 △통일대비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유학기제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통일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통일교육원은 재외동포재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2014.4.10) 재외동포 청소년과 교사 대상 체험연수 실시 등 동포사회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는 국제사회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신진학자 초청연수 및 국제학술회의 등 사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2014.5.27 협약체결)

한편 대학사회 내 통일논의 확산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4년 한해동안 숭실대(3.28), 동아대(5.29), 방승대(5.29) 공군사관학교(7.29), 서울대(11.24)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학에서의 통일강좌 개설 등 다양한 통일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통일부-교육부 업무협약식



통일부-서울대학교 업무협약식

한편, 정부는 해외 한반도 문제 전문가 양성과 유관국 전문가들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13년부터 해외신진학자 초청연수 프로그램과 초빙교수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14년에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EU 등 13개국 21명의 신진학자와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좌와 국제학술회의 등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7.1~7.10) 이를 통해 해외 전문가들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정부 주도의 통일에 대해 주변국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기여 하였다.

2014년 초빙교수에는 산딕 쿠마르 미쉬라 인도 텔리대 교수와 히라이 히사시 일본 교도통신 객원 논설위원,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 브루스 벡톨 미국 안젤로주립대 안보학 교수 등 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3주간 통일교육원 초빙교수로 활동하면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강좌, 토론회,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4년 해외신진학자 초청교육

③ 제2회 통일교육주간 운영

통일교육주간은 일반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세대간 통일 논의를 확산하기 위해 2013년 부터 시행한 교육 캠페인 사업으로 매년 5월 넷째 주를 지정 운영해오고 있다.

2014년 <제2회 통일교육주간>은 “통일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이라는 슬로건과 ‘학생·교사가 주인’이라는 기획 의도에 따라 문화적 접근을 접목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였으며, EBS 통일드림콘서트(5.26, 서울생활과학고), 통일한마당(5.23~24, 서울대공원), 우리동네 통일영화관(지역통일교육센터), UCC·웹툰 공모전(온라인 이벤트) 등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의 비중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전국 초중고교 중 약 96%의 학교가(전년 83%) 계기수업에 참여하는 등 통일교육주간에 대한 일선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인지도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제2회 통일교육주간(2014.5.26~5.30)

【 2014 통일교육주간 주요 프로그램 】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문화 행사 문화	『통일교육주간』 개막식	5.26(월)	극장 "웅"	통일 100℃, 축하공연
	『통일 DREAM』 콘서트	5.30(금)	서서울생활과학고	주제강연, 토크쇼, 공연
	우리동네 통일영화관	5.24(토)~5.30(금)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영화 상영
체험 참여 행사	통일한마당	5.24(토)~5.25(일)	서울대공원/통일관	놀이를 통한 통일체험
	온라인 이벤트	5.2(금)~5.30(금)	홈페이지	UCC·웹툰 공모전 등
	통일리더캠프	5.27(화)~5.28(수) 5.29(목)~5.30(금)	포천 한화리조트 파주 지지향	이산가족 자녀 특별캠프 학부모 특별캠프
	전국학생통일글짓기대회	5.19(월)~6.19(목)	시도 교육청 주관	-
	전국학생 서예대전	5.26(월)~5.30(금)	지역통일교육센터	-
강연 토론	초·중·고 계기수업	5.26(월)~30(금)	전국 초·중·고교	통일 체험교육 실시
	일일통일교사	5.19(월)~6.5(목)	전국 초·중·고교	장차관 등 특강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	5.27(화)	대전시 교육청	대전지역 교사 참여
	통일아카데미/통일포럼	5.26(월)~5.30(금)	주요대학	시리즈강좌, 끝장토론 등
	해외전문가 순회특강	5.26(월)~5.30(금)	공공 교육기관	주한 독일대사 외

제2절 통일교육과정 운영

① 원내 초청교육

초청교육은 ① 전문교육 ② 열린교육 ③ 글로벌교육 ④ 교원교육 ⑤ 공무원교육 등 5개 분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2014년에는 총 74회 5,394명(연인원 28,99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내용은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북한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함께 통일미래 비전의 제시를 통한 긍정적인 통일의식 형성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교육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교육 대상으로 교사, 공무원, 여론 주도층 등 ‘핵심전달자’ 비중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2014년 통일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 명/회)

과정 구분	전문 교육	열린 교육	글로벌 교육	교원 교육	공무원 교육	합계
인원	339	2,316	281	1,176	1,282	5,394
반수	9	17	10	25	18	79
연인원	15,317	2,880	803	6,142	3,852	28,994

* 연인원(명)은 각 과정 인원의 교육 일수를 곱한 값

전문교육과정에는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통일미래지도자과정, 통일기획과정,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등이 운영되었다. 통일정책 최고위과정은 우리 사회 지도층과 통일준비의 협치(協治) 기반 마련을 위해 2012년 신설되었으며, 2014년 38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4개 기수 142명이 본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 과정에는 학계, 언론계, 기업, 문화체육계, 법조계, 고위공무원 등 우리 사회 각계의 지도층이 참석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총 8회의 일정으로 강의하였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통일정책, 통일외교·안보 분야, 한반도 주변정세, 한반도 미래와 통일의 과제 등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었다.

【2014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프로그램】

회 차	강의 내용	강사진
1강(4.17)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류길재 통일부 장관
2강(5. 1)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3강(5.15)	최근 북한정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4강(5.29)	통일과 국가안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5강(6.12)	통일인문학(여가문화)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6강(6.21)	현장방문(판문점 등)	
7강(6.26)	독일통일이 한반도통일에 주는 시사점	롤프 마파엘(Rolf Mafael) 주한독일대사
8강(7.10)	경제정책 및 현안(통일 등)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남북관계 진전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 차원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 국·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의 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한 통일미래지도자과정과 서기관 이하 실무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기획과정을 운영하였다. 통일기획과정은 2013년까지는 통일정책실에서 운영해왔으나, 2014년부터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이들 교육과정은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역량,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민·관을 이어주는 통합·조정능력, 통일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은 2014년 59명을 포함하여, 2006년부터 총 353명의 수료생을, 통일기획과정은 2014년 8명을 포함하여,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총 25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제9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 교육생 입교식 기념사진

통일교육 전문과정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시키고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학교통일교육 과정」, 「사회통일교육 과정」 외에 북한이탈주민 강사를 양성하는 「북한이탈주민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2014년에 수료한 124명을 포함하여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1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현황]

(단위 : 명)

구분	학교 통일교육 강사	사회 통일교육 강사	북한이탈주민 강사	계
2010	21	31	-	52
2011	21	37	26	84
2012	21	-	79	100
2013	29	-	21	50
2014	47	31	46	124
계	139	99	172	410

열린교육과정은 통일관련 단체 및 NGO, 대학생, 청소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17회, 총 2,316명을 교육하였다. 겨울방학기간을 활용한 청소년 통일교육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접목한 북한 문화예술체험교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글로벌교육과정은 통일을 대비한 국제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4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신설되었다. 하버드대(3월), 듀크대(5월), 베를린 자유대(8월) 학생들과 재외동포유학생(10월), 주한외국인유학생(11월), 재일민단 (11월) 등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총 281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교육과정은 교원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분야별 북한 실상 등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교육을 운영하였다. 2014년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장학관·장학사, 교육연구원·연구사, 초·중학교 교사, 통일교육 연구학교 교사, 중등교사 자유학기제반 교사 등 25회에 걸쳐, 총 1,17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공무원교육과정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일 관련 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4년에는 통일부공무원직무반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간부 및 실무 공무원, 군 정훈장교, 보안경찰, 지방행정연수원 사무관반, 접경지역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8회, 총 1,282명을 교육하였다.

2 사이버 통일교육

2014년 사이버 통일교육은 공무원과정, 교원과정, 학점인정과정 및 열린 강좌, 북한방문 안내교육 등 네 개의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특히 연초부터 제기된 ‘통일대박’,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온라인상의 통일교육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평소 월 3~4만명에 불과하던 접속인원이 월 40~50만명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일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

공무원과정은 종래에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이해」 등 2개의 주제를 가지고 운영해 왔으나, 이를 「통일문제 이해», 「북한이해», 「한반도 통일비전», 「북한의 경제와 문화」 등 4개의 소주제로 세분하여 운영하였다. 한 해 동안 총 7,136명의 공무원이 사이버 통일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

교원 대상 교육과정은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이해」 등 2개 주제 이외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 통일교육 과목을 더하여 장기과정(5주)과 단기과정(3주)을 운영하였다. 2014년에는 교육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교육부 소속 중앙교육연수원에 사이버통일교육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교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이버통일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교육연수원 과정 이수자 884명을 포함, 2014년 동안 총 7,742명의 교원이 사이버 통일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

2014년에는 특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협력하여 대학 통일교육용 온라인

인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통일교육원의 이미경 교수와 차문석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한 「통일인사이드」와 정은찬 교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북한사회와 주민생활」 등 2개 과목을 개발하였으며, 2014년 2학기부터 한 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및 국문과에서 교양과목으로 채택하여, 3,500여명의 학생들이 과목을 이수하였다.

이외에도 일반국민들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인정과정도 운영하였다. 통일문제연구, 북한정치와 사회 등 2개 과목(각 3학점)을 개설 운영하였으며, 정원 160명 중 87명이 동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였다.

북한방문 안내교육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2009년 이후부터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개성공단 방문자 등 총 6,438명이 방북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방북교육 콘텐츠도 현재의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개편하였다.

▶ 제3절 학교통일교육 지원

①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2014년 2월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를 규정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통일부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2014년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 초·중·고 200개교 학생 116,000명, 교사 3,130명을 대상으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청소년의 약 53% 정도만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비중은 연간 3시간에서 5시간 수준으로 조사되어, 학교통일교육이 더욱 확대되고 내실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교육부는 학교통일교육의 비중을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다 내실있는 학교통일교육 지원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② 청소년을 위한 참여·체험형 교육

정부는 청소년의 통일이해 제고 및 통일미래 비전 확산을 위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556개교 22,11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2014년에는 기존 강의식 위주에서 놀이와 문화를 접목한 체험형 교육으로 개편하여 청소년이 쉽고 재미있게 통일 및 북한문제를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놀이형 통일교육 교구재 활용

대표적인 청소년들의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인 통일리더캠프는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국내캠프에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47회에 걸쳐 5,176명이 참가하였으며, 국외캠프에는 대학생, 현직교원, 각 교육청 통일교육 담당자 등 295명이 북중 접경지역을 방문하여 통일문제와 관련된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하여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그리고 통일교육지원법 개정(2013.8.13 공포, 2014.2.14 시행)으로 학교 통일체험 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전국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각급 학교의 필요와 실정에 맞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통일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장 수요를 반영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초중고 학생들이 올바른 통일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였다.

어린이들을 통일미래리더로 양성하기 위해 제3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을 구성하였다. 온라인 공모를 통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50명을 어린이 기자단으로 선발하여 다양한 통일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통일에 대한 기사를 스스로 작성 활용할 수 있도록 블로그와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 통일리더캠프(국내)



2014 통일리더캠프(국외)



제3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2014.4.23)

한편 2014. 10월 마지막주에 열린 통일문화주간과 연계하여 중고등부 대상 「제1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통일푸드」, 「통일창작노래」 두 개 분야에 총 124개 팀 426명이 응모하였고 각각 12팀이 본선에 참가하였다.



통일푸드



통일창작노래

③ 학교통일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교원전문성 제고

정부는 학교 통일교육의 모범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통일교육 연구학교」를 지정하였다. 2014년에는 전국의 51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학교별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통일교육 연구학교 현황】

시·도명	학교명
서울(11)	상곡초등학교, 대명중학교,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신석초등학교, 목현초등학교, 우암초등학교, 남성초등학교, 서운중학교, 양진중학교, 태릉고등학교, 청원여자고등학교
대구(2)	대구남부초등학교, 다사고등학교
인천(2)	제물포중학교, 인천영종고등학교
광주(1)	마지초등학교
대전(1)	대전송촌초등학교
울산(1)	송정초등학교
경기(3)	검산초등학교, 정천중학교, 영북고등학교
강원(3)	장평초등학교, 철원여자중학교, 하장고등학교
충북(2)	수회초등학교, 판동초등학교
충남(2)	추부초등학교, 청리중학교

시·도명	학 교 명
전북(5)	부귀초등학교, 대강중학교, 낭산초등학교, 운봉초등학교, 마령중학교
전남(3)	곡성중앙초등학교, 영암신북중학교, 하이고등학교
경북(9)	축산향초등학교, 영양중앙초등학교, 학림초등학교, 아화초등학교, 오태초등학교, 고령초등학교, 유천초등학교, 안덕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
경남(4)	신등중학교, 김해대청고등학교, 삼방초등학교, 진영고등학교
제주(2)	아라초등학교, 서귀포대신중학교

학교현장의 통일교육 우수 지도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3년에 이어 제2회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를 통일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전국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가 144명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총 28명이 입상하였으며 입상자들에게는 시상과 연구점수를 부여하였다.

초·중·고 도덕·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통일교육 정책과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4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대전(5.27), 부산(9.30), 경남(11.28), 전남(12.5) 지역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교통일교육 정책 방향을 일선 교사들에게 직접 설명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제고와 학교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하였다.



2014년 「제2회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시상식

④ 대학사회 통일교육 지원

대학사회에서 통일담론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각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생 「통일아카데미」와 「통일포럼」을 지원하였다.

「통일아카데미」는 고려대학교·동국대학교·한림대학교·명지대학교 등 4개 대학교에서 통일환경·남북관계·북한실상·통일미래 비전 등을 주제로 한 특별강좌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통일포럼」은 전국 16개 대학교에서 특강과 세미나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외에도 대학사회 통일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4개 대학에 5개의 통일동아리를 지원하였다.

한편,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통일문제를 주제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제33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46편의 응모작 중에서 최우수 1편, 우수 1편, 장려 3편, 입선 5편을 선정 시상하였다.

제4절 사회통일교육 지원

① 제19기 통일교육위원협의회 출범

정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 통일문제에 열정과 관심이 있는 인사 등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해왔다.

2014년에는 제19기 통일교육위원 974명을 새로 위촉하였으며,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 의지와 지역사회 통일준비 역량을 키워나감으로써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위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 지역별로 통일교육위원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출범식을 진행하였으며, 통일교육 발전방향 및 통일교육위원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회장단 회의를 분기별로 운영하였다.

【제19기 통일교육위원협의회 현황】

연번	통일교육위원협의회	회장
1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이배용(한국학중앙연구원장)
2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한헌수(송실대 총장)
3	통일교육위원 부산협의회	권오창(동아대 총장)
4	통일교육위원 대구협의회	노석균(영남대 총장)
5	통일교육위원 인천협의회	박춘배(인하대 전 총장)
6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김필식(동신대 총장)
7	통일교육위원 대전협의회	김원배(목원대 전 총장)
8	통일교육위원 울산협의회	이철(울산대 전 총장)

9	통일교육위원 경기협의회	이근영(대진대 총장)
10	통일교육위원 강원협의회	신승호(강원대 총장)
11	통일교육위원 충북협의회	김윤배(청주대 전 총장)
12	통일교육위원 충남협의회	정상철(충남대 총장)
13	통일교육위원 전북협의회	이호인(전주대 총장)
14	통일교육위원 전남협의회	지병문(전남대 총장)
15	통일교육위원 경북협의회	이의익(대구예술대 전 총장)
16	통일교육위원 경남협의회	이찬규(창원대 총장)
17	통일교육위원 제주협의회	고성준(제주대 교수)

통일교육위원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고 통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일교육위원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물론, 통일교육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교육위원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19기 통일교육위원협의회 출범식 개최(2014.4.2)



전문가 포럼 (2014.5.14)

2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정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해왔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전국 시·도 통일교육위원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과 일반시민 대상의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4년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주요사업은 기본사업과 연합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전국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의 기본사업은 「통일체험학습」, 「열린통일강좌」, 「학교순회강좌」, 「전문가포럼」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1,553회에 걸쳐 367,722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보다 친숙한 문화예술을 매개로하여 통일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경기, 부산, 대구, 충북, 전북, 제주 등 지역에서 다양한 「통일문화음악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제주 통일문화콘서트(2014.11.30)



제주 통일문화콘서트(2014.11.30)

③ 통일관 운영 및 통일교육협의회 지원

통일관은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이 북한의 실상과 남북관계 현황, 통일환경 및 안보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전시관으로서 2014년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 통일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통일관 현황】

통일관명	위치	운영 주체	개관일
오두산통일전망대	경기도 파주시	통일부 통일교육원	1992.9.8.
서울통일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2008.10.29.
부산통일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1989.1.30.
인천통일관	인천광역시 남구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1994.12.15.
광주통일관	광주광역시 서구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1989.3.10.
대전통일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지방공사)	2001.8.11.
고성통일관	강원도 고성군	(주)고성통일전망대	1988.6.16.
양구통일관	강원도 양구군	양구군	1996.8.14.
철원통일관	강원도 철원군	철원군	1990.12.15.
청주통일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청주랜드 관리사업소)	1993.2.23.
충남통일관	충청남도 공주시	자유총연맹 충남지회	2007.4. 5.
경남통일관	경상남도 창원시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1998.4.29.
제주통일관	제주특별자치도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1993.12.18.

정부는 2012년부터 「오두산 통일전망대」 전시환경 개선 및 시설안전공사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통일교육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구조안전진단과, 화장실 개보수, 오수관 교체, 엘리베이터 교체 등의 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였다.

한편, 정부는 전국 12개 통일관에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다양한 교육 전시 자료를 지원해왔다. 2014년에는 「광주통일관」 전시환경 개선 및 시설



오두산 통일관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국민들의 통일교육 체험학습 및 통일 의식 함양을 위해 통일관 전시환경 개선공사 대상 범위를 점차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체험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교육협의회」는 2000년에 설립된 민간 통일교육에 관련된 단체들의 협의체로서, 63개의 민간 통일교육단체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통일교육협의회」 주요사업으로 「청소년 통일 의식 조사», 「통일교육포럼», 「전국학생통일글짓기대회», 「대북협상 아카데미», 「회원단체 워크숍», 「여성·청소년·시민 분과별 토론회」 등이 운영되었으며, 그 외에도 회원단체 지원사업을 통해서 32개 회원단체의 통일교육 사업을 지원하였다.



2014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워크숍(2014.11.11~12)

▶ 제5절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① 통일교육 기본교재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실상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기본교재로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발간하고 있다. 2014년도 기본교재는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시각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하여 대폭 개편하였다. 또한 주제와 스토리를 담아 서술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통일문제 이해』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 통일신라·고려 등 우리 역사속의 민족통합, 독립운동 등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역사 속에서의 통일’ 장(章)을 신설하여, 우리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독립운동과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일제강점 하의 독립운동과 민족 내부의 통합 노력을 설명하였다. 한편 변화된 통일환경 속에서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를 반영하였다.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 내용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구상)의 내용과 의미를 소개하고, 최근 남북관계 변화 동향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미래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통일미래 비전과 통일 준비 노력 등을 보강하였다.

『북한 이해』에서는 북한의 제도와 정책의 형성 과정, 역할과 기능, 전망을 시계열적으로 서술, 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북한 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망하였다. 특히 정치·외교·군사·경제·교육·사회 전반에

걸쳐 각 분야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상세히 다루었으며, 부문별로 내용 속에서 중국·소련과의 비교 설명도 곁들였다. 특히 북한 정권의 형성과정과 통치이념의 변화 등 북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배경을 기술하였다. 이외에도 김정은 시대 2년차를 맞이한 북한의 각종 제도 변화 동향 등을 수록하였다. 북한의 정치·경제 외에도 북한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 언론, 조직생활, 종교, 여가와 명절 등 다양한 분야를 추가하였다.

2014년 기본교재는 각각 10만부를 발간하였으며 수요가 많은 교육기관 중심으로 보급되었다. 한편, 2014년 기준 전국 40여개 대학에서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강의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 통일교육 기본교재

② 눈높이 영상 교육자료

정부는 2014년 청소년용 9종, 일반인용 2종 등 총 11종의 영상물을 제작·보급하였다. 영상세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관련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와 장르로 제작하였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일방적 설명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감성적·문화적으로 접근한 영상,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용 영상은 공감영상 4종(초등학생용 2종, 중학생용 1종, 고등학생용 1종), 애니메이션 2종(초등학생용 1종, 중·고등학생용 1종), 뮤직비디오 2종(초등학생용 1종, 중·고등학생용 1종), 지상파 통일교육 영상자료 1종(중고등학생용)으로 교육대상을 세분화하여 제작하였다. 청소년들의 인지능력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각급 학년 수준에 맞춘 영상물을 제작하여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2014년도에는 청소년 대상의 EBS 통일기획드라마 『숨쉬는 그대』를 제작지원하였다. 이 드라마는 꿈도 하고 싶은 것도 없던 고등학생이 실향민 할머니의 치매를 계기로 평양음식에 눈을 뜨고 요리사의 꿈을 키워간다는 이야기로, 2014년 11월 19일에서 21일까지 총 5회 방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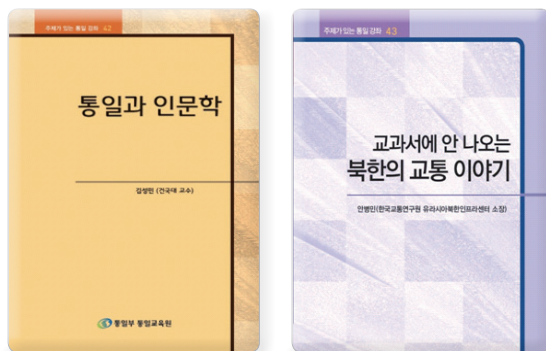


청소년용 통일교육 영상자료

③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시리즈

정부는 2003년부터 통일문제와 관련된 쟁점이나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심층 해설서인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시리즈를 발간해왔다. 동 시리즈는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설명이 특징으로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기본교재나 여타 통일교육 자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2014년까지 총 44종이 발간되었다.

2014년에는 특히 통일 문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2종의 통일인문학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통일과 인문학』에서는 통일문제에 인문학을 접목하여 소통·치유·통합의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영화로 보는 통일이야기』는 분단과 통일 소재의 영화를 통해 그 시대의 사회상과 통일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고 우리의 바람직한 통일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의 철도, 도로, 해운, 항공 등 분야별 교통현황을 소개하는 『교과서에 안 나오는 북한의 교통 이야기』등을 발간하였다.



2014년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시리즈

④ 영문판 교육자료

국제사회 및 해외 동포사회에 우리의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기본교재 중 2014년 『북한 이해』, 주제강좌 중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또한 해외동포 청소년들에게 한반도 통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초등학생용 공감영상 『진돗개와 풍산개』, 고등학생용 영상물 『대륙열차』의 영문판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영문판 교재는 해외공관, 한인학교 등 교민사회 이외에도 해외 한반도 관련 연구기관, 미국 의회 도서관 등에 배포되어 통일문제 참고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2014년 영문판 통일교육자료

【2014년 통일교육 자료 개발 현황】

구분	자료명	주요 내용	대상
기본 교재	통일문제 이해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남북관계의 전개, 통일미래의 비전과 과제를 설명	교사 및 일반인
	북한 이해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북한의 대외관계,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북한의 경제현황과 전망, 북한의 교육과 문학·예술, 북한의 사회구조와 주민생활을 설명	교사 및 일반인
	(영문판) 북한 이해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북한의 대외관계,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북한의 경제현황과 전망, 북한의 교육과 문학·예술, 북한의 사회구조와 주민생활을 설명	해외공관· 한국학교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영화로 보는 통일이야기	분단과 통일 소재의 영화를 통해 그 시대의 사회상과 통일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고 우리의 바람직한 통일상에 대한 시사점 제시	
	교과서에 안 나오는 북한의 교통 이야기	북한의 교통실태와 대외교통협력, 남북 교통협력 현황과 과제 등 설명	교사 및 일반인
	통일과 인문학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소통, 치유, 통합의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	
	(영문판)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북한 주민의 변하는 모습과 북한 당국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비교하여 고찰한 후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	해외공관· 통일 교육위원· 한국 학교 등
	(영문판)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북한 여성의 가정·경제·사회 영역에서의 일상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경제난 이후 북한의 여성의 생활과 역할, 인식변화를 통해 북한 여성의 생활상 설명	
영상 자료 (DVD)	뽀로로와 친구	뽀로로와 친구 크롱의 화해이야기를 통해 남북한이 협력하면 희망찬 통일한국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	초등학생 (1-3학년)
	DMZ 수달의 꿈	DMZ의 철조망을 넘나들며 살아가는 수달의 삶을 통해 남북간 화해와 통일의 필요성을 표현	초등학생 (4-6학년)
	아리랑	아리랑으로 하나되어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듯이 아리랑의 화합의 정신으로 통일을 이룩해 나가자는 메시지 전달	중학생

구분	자료명	주요 내용	대상
영상 자료 (DVD)	자원전쟁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남한의 기술 결합을 통한 자원대국의 미래상을 제시하여 통일의 현실적 이익과 필요성을 설명	고등학생
	구름빵의 백령도 여행	인기 애니메이션 <구름빵>을 소재로 주인공인 흥비와 흥시의 백령도 방문기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내용	초등학생
	55년만에 부르는 이름	6·25 전쟁 당시 남편과 헤어진 할머니의 사연을 소재로 서정적 화면을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전달	중학생
	통통통	'통통통'이라는 가사 반복, 서로 말과 뜻이 통한다는 내용과 즐겁고 희망적인 통일 이미지 전달	초등학생
	상상 속 너에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동경하는 소년과 소녀가 주인공으로, 함께 화합하여 살아갈 미래를 상상하는 내용의 감성형 뮤직드라마	중고생
	슴슴한 그대	꿈도 하고 싶은 것도 없던 고등학생이 실향민 할머니의 차매를 계기로 평양음식에 눈을 뜨고 요리사의 꿈을 키워간다는 이야기	중고생
	(영문판) 진돗개와 풍산개	진돗개와 풍산개 사이에 태어난 강아지의 사례를 통해 통일의 긍정적 효과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	해외공관· 통일 교육위원· 한국 학교 등
	(영문판) 대륙열차	선조들이 독립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탔던 시베리아횡단열차를 소개하고 통일은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제시	
참고 자료	통일달력	통일 및 남북관계, 북한 관련 기본사항들을 수록하여 부내 업무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유관기관

제6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

① 건립 경과

최근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강의식 교육보다 현장견학 등 통일체험연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또한, 남북간 교류행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보안성과 접근성을 갖춘 지원시설이 없어 참가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체험연수 및 남북교류 지원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각 분야에서 제기되었고, 2008년 6월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이라는 국정과제 실천사업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이 추진되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2010년 11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일대 부지를 최적 후보지로 확정하였으며 2012년 11월 착공을 한 후 1년 10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4년 9월 4일 준공되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한반도 통일미래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통해 남북화해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다는 비전 아래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첫째, 문화, 관광, 물류, 자원영역 등 통일미래의 모습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통일한국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확산하고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개선하여 젊은 세대의 통일미래 리더십을 함양해 나갈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남북청소년교류, 남북실무회담, 중소규모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로 운영하는 등 남북교류 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셋째, 세대간 화합을 위한 가족 캠프, 계층갈등 완화를 위한 소외계층 초청캠프 등을 통해 통일관련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대통합을 구현하는 공론의 장으로 기능할 것이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전경

2 시설 개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설계 기본개념은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지점 임에 착안하여 두 강이 합쳐지는 합수머리 물결과 남북이 두 손을 맞잡고 하나로 아우르는 평화의 장을 형상화하였다.

센터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남계로 40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264,062㎡, 연면적 15,143㎡, 생활관 등 최대 수용인원 520명 규모로 건립되었다.

세부 시설로는 운영센터 및 연수관(2,553㎡), 체험관(1,811㎡), 체육관 및 식당(2,485㎡), 생활관(7,088㎡), 가족빌리지(6세대), 야외무대, 야영장 등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및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력 및 수자원 사용량 절감을 추진하였으며, 새집증후군 등 환경유해 물질로 인한 이용객 건강 안전을 위해 건축물 내외부 공간에 친환경 건축자재를 시공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2014년 12월 17일 취득하였다.

센터 건립사업은 용지비 101억원, 공사비 358억원, 설계비 등 부대비 34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9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통일체험관 내부 전시체험공간 설치에 22억원을 집행하였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세부시설 현황】

시설명		면적(㎡)	주요실
운영센터 및 연수관		2,553	대강당(320명), 중강의실, 소강의실, 다목적실, 방재실, 분임토의실(9실), 프로그램실, 행정실, 회의실, 의무실
체험관		1,811	통일미래체험실 등(전시공간 1,174㎡)
체육관 및 식당		2,485	체육관(500명), 식당(220석), 주방 등
생활관(A·B동)		7,088	최대 472명 수용 : 4인실(88실/1실당:23.4㎡), 6~8인실(12실/1실당:46.7㎡), 교사방(10), 교사실(6), 장애인실(2), 자치활동실(2), 휴게실(2)
가족 빌리지	A-Type: 73.5㎡	295	4~6인실 2동(4가구), 24명 수용
	B-Type: 122.3㎡	244	8~12인실 2동(2가구), 24명 수용
야외시설			축구장, 캠핑장, 야외공연장 등



체험관



생활관

③ 개관식 개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2014년 11월 12일 대강당에서 센터의 본격 운영을 대내외에 알리는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주요행사로 ‘금강·백두 4계’를 주제로 한 사진전시회, 홍보동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장관 기념사, 주요인사 축사 등이 있었고 축하공연은 통일교육연구학교인 서서울생활과학고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자작곡을 열창하여 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식후행사에는 참석자 전원이 시설순시를 하며, 주요 시설인 통일미래체험관에서 문화·관광·물류·자원 등 미래 통일한국의 다양한 영역을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관을 계기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안전하고 유익한” 통일체험연수시설로서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남북교류 활성화 및 국민대통합에 기여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관식(2014.11.12)

④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개관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첫 손님으로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 32명을 맞아 11월 3일부터 11월 11일 동안 숙식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체류를 지원하였다. 청소년 체험연수시설이자 남북교류 지원시설로서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된 것이다.



북한선수단,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류(2014.11.3~11.11)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 이후부터 2015년 2월까지 4개월간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3월부터 본격 운

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학교·단체 대상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과 가족·소외계층·재외동포·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프로그램이 있다.

2014년 센터 개관 이전부터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24개의 ‘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일정 및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당일, 1박2일, 2박3일 등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함께 금강산 등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제작된 대형 그림퍼즐을 맞춰보기도 하고, 통일 한국을 상징하는 건축물을 만들기도 한다. 통일 후 예상되는 사회문제에 대해 뉴스를 촬영·보도하기도 하며, 남북한의 역사·문화를 주제로 퀴즈를 맞춰보는 통일 골든벨에도 참여한다.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통일미래체험관에서 청소년들은 ‘KTX 통일호’에 가상 탑승하여 통일 이후의 미래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된다. 통일 이후의 문화·관광·물류·자원 등 분야에 대해 동작 인식,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통일 이후의 미래를 실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센터 인근의 판문점, 태풍·열쇠 전망대 등을 관람하며 분단의 현실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몸소 느끼게 된다.

특화 프로그램의 경우 위의 프로그램들 뿐만 아니라, 대상별로 수요에 더욱 부합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해서는 민속놀이, 전통음식 만들기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소외계층의 경우 인·적성검사, 진로 상담을 운영하는 한편, 가족의 경우 연천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가족간 소통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23개 학교·단체에서 연인원 3,401명이 통일체험연수 등으로 센터를 이용하였다.



통일체험프로그램(통일도시 건설, 통일뉴스 방송)





제7장 정책추진 기반 강화

제1절 북한 정보 서비스 및 북한·통일 연구 기반 확대

제2절 법·제도적 기반 구축

제3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제7장 정책추진 기반 강화

정부는 국민들에게 북한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공개 가능한 북한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하여 북한정보포털서비스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이를 2014.1월부터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북한학 학술대회를 2014년에 최초로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기존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은 물론 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였으며, 북한 관련 도서와 시청각자료 등을 북한자료센터를 통해 북한문제 전문가와 일반인들에게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의 비전,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는 5개년의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여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2013년 10월 수립하였다. 이후 법에서 정한 절차인 국회 보고과정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관련한 이견으로 보고가 연기되었고, 2014년 7월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이후 2014년 8월에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10대 중점과제의 이행을 위한 201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한 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및 통일 이후 통합의 과정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법제도 현황 및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축적해 향후 남북통합법제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정책연구용역, 학술회의 개최 지원, 관련부처 간 협의체 운영 등 「통일법제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해 왔다. 2014년에는 기금 사업비 1조 1,132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5,973억 원 규모의 지출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기금 사업비를 1조 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2014년에도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지는 못함에 따라 사업비 집행액은 875억 원에 그쳤다. 그러나 지원 내용면에서는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와 같은 남북교류행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구상, `14.3)에 따라, 북한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자패키지 및 민생인프라 구축 등 발전된 형태의 인도적 개발지원 사업도 시작되었다.

▶ 제1절 북한 정보 서비스 및 북한·통일 연구기반 확대

① 북한정보포털 서비스 운영

정부는 2010년 진행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북한 종합데이터베이스(북한자료, 북한인물, 북한산업·인문지리 정보 등 3개 분야)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구축하였다.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3.0」과제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검증된 북한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북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북한정보포털시스템(<http://nkinfo.unikorea.go.kr>)을 구축하고 2014년 1월 2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였다.

북한정보포털은 2012년까지 구축된 북한 종합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국민들에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며, 기존 통일부 여러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제공하던 북한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북한정보포털의 북한지도서비스는 부처간 협업과 소통 정신을 살려 국토교통부 산하 (재)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이월드(Vworld)의 북한지형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약 5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주요 콘텐츠로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분야별 북한 개황과 최근 북한 동향, 인물, 사전, 통계, 간행물, 멀티미디어, 지도 서비스 등이 있으며, 부가서비스로 북한 날씨, 권력기구도, 북한주요행사 일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인물간 관계 정보 즉, 활동·학교·지역·가족 등 정보를 시각화한 인물관계도와 북한지형정보를 기반으로 약 30만여 건의 지명과 시설명을 검색하도록 구성한 것 등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정보포털】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북한정보를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현행화하여 신속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며, 공개가 가능한 북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북한정보 수집·관리

(1) 북한이탈주민 심층정보 수집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증가와 대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방북자 증가로 북한 관련 정보의 원천이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북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북한이탈주민·방북자대상 『심층정보수집 사업』을 통하여 북한주민의 현재 생활(물가 및 환율·재해와 빈곤·전력·배급 현황, 주민통제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체제의 안정성 및 변동성을 파악하여, 대북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주민생활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표준설문지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 북한이탈주민과 방북자 등 총 2,05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이후, 설문지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2011년 1,521명, 2012년 1,526명, 2013년 1,073명, 2014년 1,094명에 대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총 7,266명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 설문응답자 중 직업별·지역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면접조사를 보완하고 있다.

【연도별·대상자별 면접통계】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탈북자	1,712명	1,424명	1,426명	1,073명	1,084명	6,719명
방북자	340명	97명	100명	-	10명	547명
합 계	2,052명	1,521명	1,526명	1,073명	1,094명	7,266명

수집된 자료는 북한 현황 및 정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토록 함으로써 정부의 대북 분석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축적된 북한의 각종 정보는 나아가 통일정책 수립 및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2) 북한공개정보센터(N.K.O.S.C.) 운영

북한공개정보센터(North Korea Open Source Center)는 정세분석 역량 및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설립되었으며, 미·중·일·러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들의 북한 관련 공개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북한공개정보센터는 이들 국가의 정부 주요 인사 발언 및 보도자료, 언론사 기사, 전문가 주요 발언내용, 해외 기관 및 연구소 등에서 북한 관련 공개정보를 매일 그리고 특정 계기시에 수집·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개정보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주요 유관기관, 자문위원 등에도 제공되어 한반도 및 주변 정세 파악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2014년 북한공개정보센터의 주요 실적으로는 「일일해외공개정보 3,766건」과 ‘장성택 숙청 후 북한의 주민통제 동향’, ‘최근 북한의 외교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등 「기획보고 42건」 등을 수집·제공하였으며, 공개정보 유관기관(국가정보원·정보사령부·기무사령부·경찰청)과의 매 분기별 ‘공개정보 유관기관 통합교류회의’ 참가 및 업무협조를 통해 공개정보 공유 및 수집·분석기법 교류 등 수집역량 강화를 도모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북한공개정보센터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국가 및 국제사회의 유가치한 북한 관련 공개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보다 유기적이고 정확한 정세분석 및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③ 북한·통일 연구기반 확대

(1) 제1회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2014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연세대학교 은명대강당에서 제1회 세계북한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세계북한학학술대회는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는 등 미래 통일기반 마련에 필요한 자산을 축적하고자 기획되었다.

「세계 속의 북한학: 과거, 현재, 미래로」라는 주제 하에 각 국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수렴하여 향후 북한학 및 통일학이 지향해야 할 공통의 관심사를 모색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북한학 연구 분야인 정치·경제·안보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역사·지리·과학·여성·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북한에 대해 조망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단순히 전문가만 참여하는 학술회의가 아니라 북한관련 다양한 문화행사도 병행함으로써 일반 국민들도 부담 없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는 21개 세션의 4개 학술회의 패널과 북한 문화·예술 관련 5개의 특별 세션, 3개의 신진학자 및 대학생 오픈 패널, 라운드 테이블 등으로 진행되었다. 학술대회 발표자로 참가한 해외전문가는 약 40명이었고 국내전문가들도 110명이 참가하여 총 150명의 북한학 연구자들이 참석 하였다. 일반인도 9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북한관련 학술대회 사상 가장 많은 참석자 수인 1,0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대회가 진행되었다.

학술대회는 서대숙(하와이대), 이정식(펜실베이니아대), 와다 하루키(도쿄대)등 국내외 북한학 원로학자들과 찰스 암스트롱(컬럼비아대)등 중견 학자

들, 그리고 신진 학자들이 참여하여 상호간 소통하고 연구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장으로 진행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영상메세지를 시작으로 서대숙, 강성운 교수의 기조연설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남북 화해협력과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 와다 하루키, 최완규 교수 등 국내외 학자 7인의 ‘북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라운드 테이블, ‘세계북한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하에 고유환, 찰스 암스트롱 교수 등이 참가한 랩업(Wrap-up) 세션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한편 학술대회와 더불어 문화기획 특별 세션도 마련되었다.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안창모 교수(경기대)의 ‘남북한 근대 건축 100년’을 비롯하여 ‘아프리카에서 찾은 미술’, ‘남북한 음악’, ‘커튼 뒤의 명화 들’, ‘북한 일상속의 여성’ 등 북한의 음악과 미술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한 문화 세션들이 진행되어 북한의 문화를 학술과 정서적인 양 측면에서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

프로그램		DAY 1 / 10.28(화)					DAY 2 / 10.29(수)				
09:00-09:30	등록										
09:30-09:50	개회식	- 기침사 박정일 세계북한학술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 북한연구학회 회장 - 축사 강성운 재석 - 환영사 최갑관 통일부장관					09:00-10:50 특별강연				
09:50-10:20	기조연설	1. 서대숙 1. 강성운					북한어 언어구조 북한 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개발협력 (신진학자) 북한의 수렴적개발 전략(신진학자) 남북관계의 갈등과 협력 (대외부장)				
10:20-10:30	휴식						10:50-11:00 휴식				
10:30-12:30	세션	세션 1 북한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	세션 2 북한의 경제 구조와 정책	세션 3 북한의 문화와 일상	세션 4 남북관계의 현황	세션 5 북한의 문화 예술, 종교와	11:00-13:00 세션	세션 6 북한 과학기술의 현황과 남북협력	세션 7 북한사회의 내란과 외란	세션 8 북한 대외관계의 현황과 위상	세션 9 북한사회의
12:20-14:00	오찬						13:00-14:20 오찬				
14:00-15:50	세션 2	세션 10 북한의 미래통치기	세션 11 북한 시정회의 분석	세션 12 북한의 도시사회	세션 13 북한 대외관계의 정책성과 냉전시대 외교	세션 14 북한사회의	14:20-14:40 특별강연	세션 15 북한사회의 내란과 외란	세션 16 북한 대외관계의 현황과 위상	세션 17 북한사회의	
15:50-16:10	휴식						14:40-16:30 라운드테이블				
16:10-18:00	세션	세션 18 북한경제의 안정성과 장기적 성장	세션 19 북한의 보건과 환경	세션 20 북한의 일상생활과 커뮤니케이션의 세계	세션 21 북한의 건축과 미술	세션 22 북한사회의	16:30-16:50 휴식	세션 23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	세션 24 북한사회의	세션 25 북한사회의	
18:30-20:30	공연 및 만찬						16:50-17:50 특별 세션 1: 세계 북한 연구의 동향과 과제				
13:30-14:50	문화기획	북한 영화 속의 일성과 여성					17:50-18:00 신진학자 시상식 및 폐회식				
15:10-16:30	문화기획	아프리카에서 찾은 북한미술					18:30-20:30 만찬				
17:00-18:00	문화기획	남북한 음악의 비교					10:00-11:20 커튼 뒤의 명화들				
							11:40-13:00 남북한 근대 건축 100년 - 참가 신청은 우리측의 신청서 기재 변경할 수 있음(다)				

제1회 세계북한학술대회 프로그램

전례 없는 형식과 내용으로 치러진 제1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는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이 되었다. 아울러 국가별로 북한연구의 역사적 흐름을 공유하고 현재의 연구동향과 위상을 검토하여 향후 북한연구의 과제를 발굴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일반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는 북한학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토대 마련은 물론,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제1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 모습

(2)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정부는 북한 및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신진학자들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분야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처음 1989년에 시작이 되어 2004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예산 사정으로 인해 잠시 중단된 기간이 있었고, 이후

2010년부터 다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 총 477명의 신진 학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현재 북한 및 남북관계 연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진학자로 성장하였고, 활발한 연구와 활동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이 분야 전문가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처음 몇 해 동안은 ‘공모방식’ 즉 완성된 논문을 공모하여 이 가운데 우수한 논문을 선발하고 이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우선 논문 작성계획서를 공모하여 이중 일정 편수를 선발하고, 그 각각에 대해 용역을 의뢰하는 ‘용역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자격으로는 북한 및 통일 관련 전 분야 연구자이며, 최근 5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실제 논문작성을 위해 주어지는 기간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해 용역 마감일까지 약 5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신진학자들이 북한 및 남북관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14년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총 10명을 선발하였다. 지원 주제는 자율주제를 기본으로 하되 3편의 지정주제를 두어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직접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로 10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고난의 행군시기 영유아기를 보낸 20대 초반 탈북청소년의 남한 적응 연구’, ‘이북 지역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 ‘북한 로동신문을 통해 본 김정은 집권 전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정치사상의 양적 분석’, ‘통일 대비 북한 보건의료인력 실태분석 및 통합 방안’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업적이 포함되어 있다.

제출된 논문들은 논문집으로 발간, 배포하고, 대북정책 추진 및 북한 이해 참고자료로 활용해 왔다. 또한 이 논문들은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www.prism.go.kr)에 게재하여 누구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원 현황 및 지원금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자수	74명	27명	39명	74명	24명
선발인원	7명	10명	10명	10명	10명
지원금액 (개인별)	5백만원	5백만원	7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3) 북한자료센터 운영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989년 5월 「북한자료센터」를 설립하였다. 「북한자료센터」는 북한 관련 도서자료 7만 8천여 권, 정기간행물 1만2천여 권, 파일자료 3,000여 건, 시청각자료 8,680여 건, 통일부 발간물 6,600여 건 등 총 10만 5,641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원전자료 보유 현황】

(단위 : 건)

종류	단행본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비도서자료	계
자료 건수	20,274	4,664	6,187	1,185	32,310

*2014년 12월 31일 기준

「북한자료센터」는 대국민 자료서비스와 함께 통일·북한문제 전문가, 대학생, 관련 단체 회원들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북한의 실상 및 문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총 30회를 개최한 가운데 2,045 명이 참여하였고, 1989년 이후 2014년 12월 말까지 총 764회를 개최하고 총 7만 8천여 명이 참가하였다.

「북한자료센터」는 2,300여 편의 북한영화를 소장하고 있고, 1990년 3월 부터 매월 1회 북한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여 왔다. 최근에는 이를 수시 상영체계로 바꾸어 언제든지 북한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2006년부터 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서울, 인천, 창원, 제주, 부산, 광주지역 통일관 등 8 개 지방 도시로 북한영화 상영지역을 확대하였다. 2014년에는 북한영화를 총 2,457회 상영하여 12만 3천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1990년 이후 2014년 12월 말까지 관람인원은 13,958여 회에 걸쳐 162만여 명에 이른다.

이 밖에도 북한자료의 효율적·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장 자료에 대한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시스템 구축, 원문 DB 구축, 최신 검색엔진 도입, 모바일 웹서비스 및 간편문자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안내,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디지털 아카이브 도입, 전자도서관 및 개인도서관(My Library) 서비스 개편 등 온라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4년 한 해 동안 모두 230건의 자료를 전자책(e-Book)으로 만들었으며, 2000년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총 3,389건의 북한 관련 자료를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unibook.unikorea.go.kr)」를 통해 북한 조선중앙TV 프로그램 편성표 안내, 북한영화 소개, 북한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이용 고객도 계속 증가하여 2013년부터 연 110만명을 넘어섰다.

대외적으로는 국내 유관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자료 교류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국회도서관 등 21개 기관과 정보·자료 공유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제2절 법 제도적 기반 구축

①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1)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의 비전,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는 5개년의 중장기 계획이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11월에 수립되었던 『제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 2012년에 시한이 만료되었고, 이후 통일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2013년 2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남북관계 상황 및 변화된 대내외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정부의 국정기조 및 과제 등을 반영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3회에 걸쳐 수렴하였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한편,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보완하였다.

이후 8월 21일에는 통일부차관(위원장) 및 각 부처 고위공무원(위원)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검토하였고, 9월 25일에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위원장) 및 13개 부처 차관 및 10명의 민간전문가(위원)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통일부장관이 10월 21일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확정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11월 6일 국회에 송부하였고, 11월 7일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보고 이전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한 이견으로 보고가 연기되었다. 이후 관련 절차에 관한 국회차원의 법률 검토와 함께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시 여러 차례 동 문제를 논의하여, 국회에서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률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22일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7월 1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하였고, 7월 7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국민들에게도 공개하였다.

정부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2014년 초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2014년도 시행계획안을 마련해 왔으며, 5월에 관계부처와 함께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전문가 및 NGO,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2014년도 시행계획안을 보완하였다.

이후 7월 31일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이후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8월 17일에는 통일부장관이 확정하고, 8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2014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8월 22일에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국민들에게도 공개하였다.

(2) 2014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의 특징 및 주요내용

『2014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의 특징으로는 첫번째,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일관성, 정합성을 유지하여 작성하였고, 시행계획의 성격에 맞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과제별로 소관부처를 명시함으로써 통일·대북정책의 이행과 점검을 위한 체계를 효율화하였다.

이번 『2014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은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이라는 목표하에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14년도 추진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개 세부과제와 96개의 단위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목 표	10대 중점 추진과제	세부과제	단위사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를 통한 남북 관계 발전	①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2개	5개
	②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4개	15개
	③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4개	13개
	④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3개	8개
	⑤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3개	10개
실질적 통일준비	⑥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2개	6개
	⑦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4개	16개
	⑧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3개	10개
	⑨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3개	6개
	⑩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2개	7개
합 계		30개	96개

과제별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중점과제인,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와 관련하여서는 ‘상시적인 대화채널 개설’과 ‘남북간 합의 이행을 통한 신뢰 구축 기반 조성’이라는 두 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중점과제인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해결’, ‘북한 인권 개선 노력 추진’, ‘북한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 등 총 4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세 번째 중점과제는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 및 심화’로서 이를 위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교류협력 체계 구축’,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 추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등 4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 중점과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로서 ‘당국간 상설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개성공단 제도 개선’, ‘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 등 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번째 중점과제는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이며, 이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추진’,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3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여섯 번째 중점과제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으로 ‘미래지향적 통일비전 및 담론 형성’, ‘통일친화적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두 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일곱 번째 중점과제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으로서 ‘자립·자활 기반 확충’, ‘탈북청소년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지역 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총 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여덟 번째 중점과제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으로서 ‘통일미래세대 육성 위한 통일교육 추진’,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범국민적 통일교육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세부과제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아홉 번째 중점과제는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로서 이를 위해 ‘평화통일 거버넌스 구축’, ‘통일정책 인프라 구축’, ‘재외동포들의 통일역량 결

집' 등 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열 번째 중점과제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으로서 이를 위해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정부차원의 협의 강화', '글로벌 통일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2개 과제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2014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에 따른 과제들을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실질적 통일준비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통일법제 구축사업

(1) 통일법제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 구축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에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통일법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부처 간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법무부·법제처가 업무협약(2014.9.3)을 체결하였다.



사업협력을 위한 MOU 체결(2014.9.3)



사업협력을 위한 MOU 체결(2014.9.3)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부처는 통일법제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에 합의하

였으며, 협약의 후속조치로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그동안 각 부처가 별개로 관리해오던 통일법제 DB를 하나로 통합,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를 구축함으로써, 정부 보유 자료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유자료의 중복을 방지하게 되었다. 이는 부처 협업 및 정부정보의 개방성·접근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3.0기조에 적극 부응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조체계를 정착할 기반이 조성되었다.



통일법제DB 통합시스템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

그리고 유관부처 간 협업과 법률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2014년에도 통일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통일부·법무부·법제처 통일법제 담당자와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지속 개최하였다. 연 4회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통일법제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부처 간 업무중복을 방지함으로써 통일법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013년 「통일법제 합동워크숍」의 연장선상에서, 2014년에는 통일

부·법무부·법제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토부와 농림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세미나를 2회 개최하였다. 상반기(2014.6)에는 한국형 사정책연구원이 참여하여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와 과제’라는 주제로, 하반기(2014.11)에는 ‘남북법제 통합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가 모여 남북 법제 통합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통일부·법무부·법제처
공동 세미나 개최(2014.6.3)



통일부·법무부·법제처
공동 세미나 개최(2014.11.7)

(2) 민간 학술회의 지원

정부는 통일을 대비하는 데 있어 민간의 연구를 활용할 필요성에 공감, 학술단체의 연구활동을 독려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민간 학술회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통일법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굳힌 중견 전문가들 외에도 연구의 기회가 필요한 신진 연구자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통일법제 전문가 풀(pool)을 넓히고 신진인력 양성을 도모하였다. 2014년에는 통일법제에 관심이 있는 신진 법조인들이 주최한 「통일법제 관련 연구논문 발표 및 토론회(2014.7)」와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학술대회」, ‘북한법제 동향과 남북법제 통합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북한

법 연구회 학술대회」를 지원하였다.

(3) 통일법제 관련 연구

정부는 통일법제의 분야별 쟁점사항을 발굴, 정책 수립 시 참조하고 향후 통합법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였다. 법제 통합방안, 체제전환국 사례 연구 등과 같이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외에도, 북한의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제도화 방안, 통일외교 제도화 방안 등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들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연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아일랜드 평화협상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에 대해 고찰하고, 관련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현지 사례조사 사업도 추진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연구 결과가 향후 남북 간 법제통합의 실질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하고 체계적인 통일법제 지원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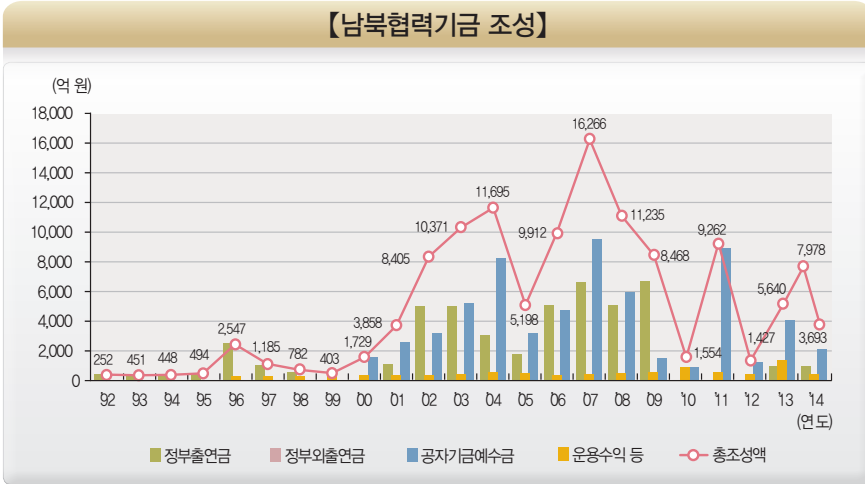
① 남북협력기금 수입

2014년 남북협력기금 수입계획은 총 1조 5,973억 원으로, 2014년 말 기준 9,090억 원이 수납되었다. 경수로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934억 원을 출연 받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2,286억 원을 예수하였다. 여유자금에서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3,515억 원과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882억 원 등 총 5,397억 원이 회수되어 수납되었으며, 그 외 자체수입에서 473억 원이 수납되었다.

【남북협력기금 수입】

(단위 : 억 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정부출연금	-	-	1,128	1,055	93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8,750	1,044	4,000	5,300	2,286
여유자금 회수	10,042	9,336	9,410	9,349	5,397
자체수입	741	570	694	1,734	473
합 계	19,533	10,950	15,232	17,438	9,090



② 남북협력기금 지출

정부는 2014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으로 총 1조 5,973억 원을 편성하였다.¹⁾ 이 가운데 사업비는 1조 1,132억 원 규모로서, '13년 1조 979억 원에 비해 증액되었다. 정부는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금 사업비를 1조 원 규모로 유지하고 있으나, 2014년에는 남북관계 상황이 획기적으로 진전되지는 못함에 따라 연말 기준 총 875억 원이 집행되었다.(집행률 7.9%)

사업별 지출현황을 보면,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에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 체류비 등 남북왕래 지원 자금으로 4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협력사업

1) 사업비 1조 1,132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4,031억 원, 여유자금 운용 758억 원, 기금관리비 52억 원 등

가운데서는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에 각각 2억 5천6백만 원과 25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은 남북간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해 2005년부터 정부가 지원해 온 사업으로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회는 2014년 말 기준으로 21만여 개의 새 어휘를 발굴하고 30만여 개의 1차 올림말을 선정하는 등 사업 전체 공정의 약 70%를 진행하였다.

「이산가족교류 지원」 사업에서는 2014년 설 계기로 성사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22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유전자검사 사업과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에 9억 원을 집행하였다. 「인도적 지원」 사업에서는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구상)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기금을 지원하였다. 우선, WHO·WF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모자(母子)보건사업에 141억 원을 지원하였다. 보건·농축산 협력 등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국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3개 단체 17개 사업을 기금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2014년 말까지 3개 단체 5개 사업에 대하여 6억 2천5백만 원의 자금을 집행하였다.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 사업에서는 남북교역·경협 관리업무 위탁 등에 21억 원, 다자간 경제협력 추진 사업에 3억 4천만 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1억 원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5.24조치로 사업 중단 상태에 있는 교역·경협(금강산 포함) 기업을 대상으로 제3차 특별경제교류협력 자금대출을 시행키로 하고, 44개사 대상 총 190억 원의 자금을 대출하였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운영 사업에는 총 234억 원을 집행하였다. 센터 청사 건립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총사업비 491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 가운데 2014년에 집행된 건립비용은 198억 원 규모이다. 그 외에도 센터 내 통일체험관 시설과 홈페이지 구축에 24억 원, 운영경

비와 자산취득에 12억 원이 집행되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2014년 11월 12일 개소식을 열고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11월 초 북한 유소년축구단이 센터에 체류하면서 남북 청소년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에는 당초 공원 구상을 위한 연구용역비 7억 원과 건설비 295억 원 등 총 30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남북 관계 상황으로 인하여 건설비는 집행하지 못하고 공원조성 기본구상(안)과 종합계획 수립 등 연구 사업에 2억 3천4백만 원을 집행하였다.

「개성공단 지원」 사업에서는 총 212억 원을 집행하였다. 우선, 개성공단 폐기물 소각시설(2차) 증설과 도수터널 보수 등 공단 내 기반시설 건설과 관리운영 등에 175억 원을 지원하여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뒷받침하였고,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4억 원을 지원하여 개성공단 국제화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개성공단 운영대출사업에서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33억 원을 대출하였다.

한편, 기금 사업비가 아닌 내부거래 부문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에 2,915억 원, 예수이자 상환에 967억 원 등 총 3,882억 원을 집행하였다.

【남북협력기금 지출】

(단위: 억 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비	사회·문화 교류	21	26	23	21	33
	인도적 문제 해결	212	103	28	153	178
	남북경제협력	497	179	457	1,941	452
	개성공단	133	119	185	843	212
	소계	863	427	693	2,958	875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9,305	1,086	5,161	6,388	3,882
여유자금 운용		9,336	9,410	9,349	8,062	7,195
기금운영비		29	27	29	30	30
합 계		19,533	10,950	15,232	17,438	11,982



에
일
백
서

Appendix

부 록

- I. 남북관계 주요일지
- II. 남북관계 주요 통계
- III.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 IV. 통일부 국정과제·브랜드과제 현황

I. 남북관계 주요일지

1월

01

- 1.1 대통령 신년사
 -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위기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임.”
- 1.1 北 신년사 발표
 - “북남사이에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함.”,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 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임.”
- 1.3 통일부 대변인, 北 신년사 관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 발표
- 1.6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올해 국정 운영의 핵심과제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북핵문제 해결, 인도적 지원 강화·민간교류 확대,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을 강조
 -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관련, “통일은 대박”이며,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 할 기회를 강조
- 1.6 南(통지문),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설 계기 개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1.10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적 총재 → 북적 위원장)
- 1.9 北(조평통 서기국 명의 통지문), 우리측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거부
- 1.9 통일부 대변인, 北 통지문 관련 연례적 군사훈련을 인도적 사안과 연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
- 1.15 3개 민간단체(남북나눔, 섬김, 거례사랑)의 북한 영유아, 어린이 대상 빵재료·분유·내복 등 4억 2,50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승인
- 1.15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관계 파국위기’ 등을 거론하며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요구
- 1.16 北 국방위, ‘중대제안’ 형식으로 3가지 사항 요구

- ①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을 위한 실천적 조치 ②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 조치 ③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 조치
- 1.17 통일부 대변인 논평, 北 ‘중대제안’과 관련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 하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될 수 없는 시급한 순수 인도적 문제임을 강조
- 1.17 남북은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 협의를 통해 3통 분과위 개최 일정(1.24) 합의
- 1.20 北에 억류 중인 美 케네스 배 기자회견 실시, 미국정부와 언론 및 가족 등에게 사면을 위한 노력 호소
- 1.24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 제4차 회의 개최
 - 남북은 △일일단위 상시통행 시행 시기, △선별통관 등 통관절차 간소화, △인터넷 연결 방식 등을 협의,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1.28부터 시범운영키로 의견접근을 이루고 통신분야 실무접촉 2.7 개최에 합의
- 1.24 北 국방위, 공개서한을 발표하여 ‘중대제안’에 대한 우리측의 호응을 촉구
 - ‘중대제안’은 결코 위장 평화공세도, 선전심리전도 아니라며 “서해 5개섬 열점수역 포함 최전선의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까지 전면 중지하는 실천적 조치들을 먼저 취하겠다”고 주장
- 1.24 통일부 대변인, 北 국방위 공개서한 관련 정부입장 발표
 - ‘중대제안’이 위장 평화공세인지 아닌지는 한 번의 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부터라도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함을 강조
- 1.24 北(통지문), 우리측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안 수용(북적 위원장 → 한적 총재)
- 1.24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뒤늦게나마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
- 1.27 南(통지문), 이산가족 상봉일정(2.17~2.22)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1.29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 제의(한적 총재 → 북적 위원장)
- 1.27 北 국방위원회 정책국 서기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 통지문 발송
 - 우리측의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강행시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
- 1.28 南 국방부, 정책기획관 명의 통지문 대북 발송
 - 정례적 훈련으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측이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할 것임을 경고
- 1.28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시범 가동 실시

- 1.31 통일부장관,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제안에 대한 북한의 답변 지연과 관련) 북한의 불분명한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망향경모제 격려사)

2월

02

- 2.3 남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적십자 실무접촉을 2.5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2.5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2.20~25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
- 2.6 통일부,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실시
 - 2014년 업무 추진계획으로 3대 전략(△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에 따른 9대 중점 추진과제 보고
 - * 9대 중점 추진과제 : ①북핵문제 해결 진전 및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②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③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개선 추진 ④남북 동질성 회복과 호혜 협력 추진 ⑤「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 추진 ⑥통일친화적 사회로의 전환 ⑦통일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교육 추진 ⑧통일시대를 향한 맞춤형 정착지원 ⑨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 2.6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北 체제에 대한 비방중상이 계속되는 한 합의 이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산가족 상봉행사 합의 불이행 가능성 표명
- 2.6 통일부 대변인 정부입장 발표,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관련) 이산가족 상봉과 무관한 사안으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상봉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정부입장 발표
- 2.7 남북 개성공단 3통 분과위원회 통신분야 실무협의 개최
 - 인터넷망 구성 및 경로, 서비스 제공방식 등 인터넷 연결방식에 대해 합의
- 2.8 北(통지문), 남북고위급접촉 제의(北 국방위원회 → 南 청와대)
- 2.10 남북, 고위급접촉을 2.12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2.12 남북고위급접촉 개최, 이산가족 상봉행사, 상호 비방중상 중단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구체적 합의 사항 없이 회의 종료
 - △남측 수석대표 : 김규현 차장(국가안보실) △북측 단장 : 원동연 부부장(통일전선부)

- 2.14 남북 고위급접촉 속개, 공동보도문 합의
 -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 중지 △상호 관심사를 계속 협의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접촉 개최
- 2.17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표
 - △정체범 수용소에 대한 접근 허용 △수용자 석방 등을 북한 당국에 요구하고, 중국 등 관련국에도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원칙 준수 등 촉구
- 2.18 대통령, 국무회의시 이산가족 상봉 관련 근본대책 수립 지시
 -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후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작년 한해에만 3,800명에 달함. 앞으로 이산가족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 2.20~25 금강산에서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 1회차(2.20~22) : 우리측 이산가족 82명이 북측 가족 178명 상봉
 - 2회차(2.23~25) : 북측 이산가족 88명이 우리측 가족 357명 상봉
- 2.21 개성공단 3통 관련 통신 사업자간 협의 개최, 인터넷망 구축공사 일정 등 논의
- 2.21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 승인
 - △분유 17톤 (『(사)1090 평화와 통일운동』, 3억 4천만원 상당) △결핵약(『유진벨 재단』, 7억 2천만원 상당)
- 2.21 北, 단거리 발사체 4발 발사
- 2.24 南(통지문), 북한 구제역 확산 방지·퇴치 지원의사 표명 및 실무접촉 제안(南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北 국가수의방역위원회 위원장)
- 2.24~25 북한 경비정 1척 연평도 서쪽 24km 근해에서 NLL 세 차례 침범
- 2.25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 발표,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구상 천명

-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통일준비 필요
 -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갈 자 함.
 -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임.
- 2.27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 승인(『섬김』의 어린이용 영양가루, 1억 9천만원 상당)

- 2.27 北 탄도 미사일 4발 발사
- 2.27 북한 억류 우리 국민(김정욱씨) 기자회견 실시
- 2.27 통일부 대변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하여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북한에 강력 촉구하는 정부입장 발표
- 2.28 北, 우리 국민 억류 관련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우리측 통지문 수령 거부

3월

03

- 3.1 대통령 3.1절 기념사,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의 중요성 강조 및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제안
- 3.5 北 통지문(北 국방위 → 南 국가안보실)
 - 우리측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우리측의 비방증상 합의를 위반 주장
- 3.5 南 통지문(한적 총재 → 북적 위원장)
 -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3.12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
- 3.6 南 통지문(南 국가안보실 → 北 국방위)
 - 대북전단 살포 관련 우리 국민의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 재강조 및 북한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 3.7 北 통지문(북적 위원장 → 한적 총재)
 -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이 아니며, 현 남북관계에서 이산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는 적십자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
- 3.7 南 통지문(한적 총재 → 북적 위원장)
 -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으로 인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강조 및 북한이 우리측 제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재촉
- 3.11 북남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 고위급접촉 합의 이행이 엄중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주장
- 3.13 남북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1차 회의

- 남북은 중재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재절차 등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함.
- 3.14 北 국방위원회 성명,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핵억제력을 과시하는 '추가적인 조치' 위협
- 3.23 한·중 정상회담(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 강화 합의
- 3.24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기초연설,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이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
- 3.25 한·미·일 정상회담(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추진 합의
- 3.26 北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 2발 발사(※ 2.21~ 3.26간 미사일·로켓 총 90발 발사)
- 3.26 한독 정상회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위해 독일과 사회·경제통합, 국제협력 등 분야에서 다면적 통일협력체계를 구축해 통독 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
- 3.26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대북전단 살포 관련 '남북관계의 파국적 후과' 위협
- 3.27 北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북핵관련 발언을 고위급 접촉 비방중상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실명 비난
- 3.27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대남 비방 관련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비방은 남북간 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 3.27 유엔 안보리, 北 노동미사일 발사 관련 의장명의 '구두 언론 성명' 발표
- 3.28 서해 NLL 침범으로 나포(3.27)했던 北 어선 송환
- 3.28 北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北 어선 나포 및 송환 관련 '해상강패행위' 등 주장
- 3.28 대통령 독일 드레스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 발표
 -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유엔과 함께하는 북한 모자 패키지(1,000days) 사업 추진
 -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북합농촌단지' 조성 △경제개발 협력(南:교통통신 건설투자, 北:지하자원 개발 허용) △남·북·러 및 남·북·중 3각협력 사업
 -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역사·문화예술·스포츠 교류 장려 △북한인력 경제교육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 3대 제안 실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의
- 3.29 北 고위급접촉 대변인 담화,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젯더미', '불바다' 등 위협
- 3.29 北 송환 선원 기자회견 실시
- 3.30 통일부 대변인,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 관련 정부 입장 발표
 - 북한의 발표는 북한 당국 스스로가 남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행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
- 3.30 국방부, 보도자료를 통해 北 선박 송환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전을 시행하고,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신속 송환하였음을 설명
- 3.30 北 외무성 성명,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 3.31 北, 서해 해상 사격훈련 실시
 - 北 500여발 사격(이 중 100여발 NLL 이남 우리측 지역 낙탄), 우리 군 300여발 대응사격 실시

4월

04

- 4.1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드레스덴 연설 비난(3.31, 중동) 관련 우리 국가원수의 외교활동에 대한 저열한 비방 등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신중한 언행 촉구 및 드레스덴 제안에 건설적으로 호응해 나올 것을 강조
- 4.6 여수해역에 침몰한(4.4) 몽골 화물선의 北 선원 구조 관련, 구조 선원(3명) 및 인양 시신(2구)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
- 4.7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개최(워싱턴)
- 4.9 北,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개최
- 4.11 황준국 6자회담 수석대표 방중(4.11~12)
- 4.11 국방부 합동조사 결과, 추락 무인기가 북한 소행으로 확실시 되는 정황근거를 다수 식별했다고 중간발표
- 4.12 北 국방위 대변인 담화,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 논리이자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 매도하면서 ‘배고픔’, ‘고통’ 등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여 북한을 비방·중상 했다고 비난
- 4.14 北 조평통 서기국 진상공개장, 무인기 사건을 ‘제2의 천안호 사건 날조’라고 주장
 - 4.14 우다웨이 中 6자회담 수석대표 방미(4.14~17)
 - 4.14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北 조평통 서기국 진상공개장 관련, 무인기는 ‘누가 봐도 북한 소행’이라며 대남 비방중단 촉구
 - 4.15 北 국방부 겸열단 진상공개장, 무인기 사건의 ‘북 소행설’은 완전히 날조라고 주장하며, 관련 사건의 공동조사를 제의
 - 4.16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北 공동조사 제안은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저급한 대남심리전’으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
 - 4.17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결과 발표(4.14)를 빌미로 국정원 해체 및 국정원장 해임 주장
 - 4.17 유엔안보리, 北정권의 반인권 범죄와 대책 관련 회의 개최
 - 4.19 北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 “미국이 추종세력들을 동원해 무분별한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
 - 4.21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오바마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미국이 北을 적대시 하는 한 자위적 억제력을 다지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
 - 4.21 北 조평통 대변인 문답,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관련, “인민과 제도를 모독하고 우롱하는 특대형도발로 체제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 위협
 - 4.22 南(통지문), 北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사무처를 통해 통행·통신 실무접촉 4.29 개최 제의
 - 4.23 北(통지문),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위로의 뜻 표명(북적 위원장 → 한적 총재)
 - 4.23 北 조평통,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 남북관계 개선인지 대결인지, 통일인지 반통일인지, 평화인지 전쟁인지 그 입장을 명백히 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 전가
 - 4.24 北(통지문),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비통한 소식에 접하여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달(北 민족화해협의회 → 南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4.24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 남측위원회,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깊은 슬픔을 표시하면서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함.
 - 4.25 한·미 정상회담, 북한·북핵문제에 대한 확고한 공조 확인
 - (북핵)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

력,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

- (통일) “미국은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박대통령의 비전을 지지함.”
- (북한인권)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를 개선하는 한편, 북한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데 전념해 나가고자 함.”
- 4.27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한미 정상회담 관련 대통령을 비방하며 존엄과 체제, 병진노선에 도전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지 않을 것 등 위협
- 4.28 통일부 대변인,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관련 북한이 비방중상 중단 합의 위반을 넘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막말을 계속하는 것은 패륜 그 자체라면서 상식 이하의 행태를 버리고 민족 화합과 상생을 위한 길로 속히 나올 것을 촉구
- 4.28 北 국방위 대변인 성명, 증폭핵분열실험이나 새로운 대륙간탄도탄실험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위협
- 4.29 北 서해 해안포 사격훈련 실시, 14:00경부터 10여 분간 50여발 사격(우리 해상구역 낙탄은 없었음.)
- 4.30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3.30(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천명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선언에는 시효가 없다”고 언급
- 4.30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미국의 조선왕조 문화재 반환 관련 ‘북이 악탈해 간 것이라고 결코 드는 것은 비열한 모략으로서 또 하나의 악랄한 도발’이라고 비난

5월

05

- 5.3 北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한·미 정상의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 합의를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
- 5.8 국방부, 북한 소형 무인기 관련 과학기술 조사결과 발표,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Smoking gun) 제시
 - * 무인기의 비행경로 분석 결과 3대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지역임을 확인
- 5.11 北 국방위 검열단 대변인 담화, 우리 국방부의 무인기 조사 결과를 부인하며, 공동조사

를 재차 주장

- 5.12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북한의 공동조사 주장 관련 '스스로의 범죄행위를 조사하겠다는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며 일축
 - * 북한 정권의 행태와 관련 '빨리 없어져야 한다.' 등 강하게 지적
- 5.13 北 국방위 중대보도, 국방부 대변인 대북발언(5.12) 관련, '흡수통일 야망의 노골적인 공개이자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포'라고 주장하며, '전민보복전' 등 위협
- 5.13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국방부 대변인과 조종자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도 무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 5.14 통일부 부대변인 브리핑, 북한의 도발 위협, 선전선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스스로의 언행에 대한 반성 촉구
- 5.18 北, 평양시 평천구역 살림집 건설장에서 5.13 엄중한 사고가 발생, 인명피해가 났다고 보도
- 5.19 北 조평통 서기국 여객선 세월호 참사 진상고발장, 세월호 참사가 사고가 아닌 예고된 살인, 고의적 대학살이라고 주장
- 5.20~21 통일부 장관 CICA 정상회의(상해) 참석, 북한에 4차 핵실험 관련 경고메시지 전달 및 국제사회에 「드레스덴 구상」,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설명하고 지지 요청
 - * CICA :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회의(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 in Asia)
- 5.20 南 통신문(한적총재 → 북적 위원장), 北 평양 평천구역 살림집 붕괴 사고 관련 위로의 사 전달
- 5.20 우리측 해군, NLL을 넘어온 북한 함정(경비정 2척, 단속정 1척)에 경고사격 실시
- 5.21 北 서남전선군사령부 공개보도, 우리측 함정에 대해 직접적인 조준 타격대상이라며 우리측이 서해5도에서 도발하는 경우 경고없는 군사적 타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
- 5.21 염수정 추기경 개성공단 방문
- 5.22 北, 연평도 서남방 14km 지점(NLL 이남)에서 초계임무 중이던 우리측 함정 150m 근방에 2발 포격, 우리측 함정도 NLL 이북에서 경비중이던 北 함정 인근에 5발 대응사격
- 5.22 北 「6.15북측위」·「민화협」, 「노무현재단」 앞으로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5년' 관련 추모 전문 발송
- 5.22 南 통신문(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단장), 우리측 함

정 대상 화력도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계속 도발하는 경우 단호한 대응 천명

- 5.23 北 서남전선군사령부 보도, 우리측 초계함에 대한 포사격을 ‘날조’라고 주장
- 5.23 北 서해 포격도발 관련,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장관회의 개최
- 5.23 北, 인천 아시안게임(9.19~10.4) 참가의사 표명
- 5.26 왕이 中 외교부장 방한(5.26~27), 대통령 접견 및 외교부장관 회담 진행
- 5.27 北 서남전선군사령부 대변인, 국방부의 ‘발사원점’ 미확인을 거론하며 긴급안보장관회의(5.23) 개최 등을 ‘이중 기만극’이라고 비난
- 5.28 정부,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의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설치 요청에 대한 수락 입장 통보
- 5.28 대통령 WSJ 인터뷰, 北 4차 핵실험 위협 관련 ‘주변국에 독자적 핵무장 명분 제공으로 인한 핵 도미노 효과’에 대한 우려 표명
- 5.29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국방부 대변인 및 김관진 국방부 장관 발언 등을 비난하면서 ‘단호한 징벌’ 위협
- 5.29 북-일간 국장급 회담(5.26~28) 결과,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 및 이에 따른 일부 대북제재 완화 등에 합의
 - (북한) △행불자 등을 포함한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한 전면 재조사 실시(「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 △재북 일본인 유골 조사(북한 내 일본인 유골·묘지 처리, 성묘방문 지속 협의 등)
 - (일본) △양자제재 해제(재조사 개시 시점에 인적왕래규제, 송금·휴대금액제재, 인도 목적 北국 적선박日입항금지등해제)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 등
- 5.30 대통령 커비 前 북한인권조사위원장 접견, COI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언급
- 5.30 北 최고재판소 재판절차 진행, 北 억류 김정욱 선교사에게 ‘무기노동교화형’ 언도

6월

06

- 6.1 통일부 대변인 성명, 김정욱 선교사 무기노동교화형 언도(5.30) 관련 북한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요구
- 6.3 동해상 표류 北 선박 관련, 구조된 3명의 선원 중 귀환의사를 밝힌 1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
- 6.4 통일부, 「경남동일농업협력회」의 대북 농업 지원물자(딸기모종 생산 관련 물품 3천3백만 원 상당) 반출 승인
- 6.5 北赤 중앙위 대변인 담화, 구조선원 2명의 귀순 관련 '부당한 억류'라며 '즉시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단호한 대처' 등을 위협
- 6.6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북한의 핵개발 및 도발위협 중단을 촉구
- 6.6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김관진 국방장관의 국가안보실장 임명 관련 '남북관계의 더 큰 파국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전쟁 위험이 조성될 것'이라고 위협
- 6.6 北, '관광목적으로 입북한 미국인 제프레이 에드워크 포올레가 체류기간 중 공화국법을 위반하여 해당기관에서 억류·조사중'이라고 보도
- 6.9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북한인권사무소 남한 설치 관련 '침략과 체제전복을 노린 반공 화국 모략도구'라고 비난하면서 '무자비한 불벼락세례' 등 위협
- 6.9 南 통지문(개성공단 남북공동위 남측 위원장 → 북측 위원장),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 6.19 개최 제의
- 6.10 통일부, 獨 그로프 베커르트(섬유기계용바늘생산·판매) 개성공단 협력사업 신고(공단 내 영업소 설치·운영) 수리
- 6.10 南 통지문(통일부→통일전선부), 김정욱 선교사 억류 및 일방적 무기노동교화형 선고에 유감을 표명하고 동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간 실무접촉을 6.17 판문점 개최 제의
- 6.12 北 통지문(통일전선부→통일부), 김정욱 선교사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간 실무접촉 제의 거부
- 6.12 통일부 보도자료, 북한이 우리 국민을 일방적 체포·억류하고 있음에도 우리측 실무접촉 제의를 거부한데 유감을 표명하고, 실무접촉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
- 6.16 동해상 표류 北 선박(6.13) 관련, 귀환의사를 밝힌 구조 선원 5명 모두를 판문점을 통

해 북측에 송환

- 6.16 동해상 표류중인 선박에서 북한 선원 1명 구조(귀순의사 표명)
- 6.19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난하며 지명 철회 주장
- 6.23 北 통지문(남북공동위 북측위원장→남측위원장),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
6.26 개최 제의
- 6.24 南 통지문(남북공동위 남측위원장→북측위원장), 북측 제의에 동의
- 6.24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6·25전쟁 64주년 기념식 등에 대해 '북침 전쟁 책동을 합리화, 북침 핵전쟁에 광분' 등으로 비난
- 6.25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남측 관계자 방북, 사업 재개방안 협의(개성)
- 6.26 '겨레의 숲', 北 민족화해협의회와 산림협력 관련 실무접촉(개성)
- 6.26 남북은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쌍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합의사항 없이 회담 종료
 - 우리측은 3통문제 등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현안 사항을 제기한 반면, 북측은 구체적인 협의보다 5.24조치 해제 등 기존 입장을 반복, 다만 향후 분과위·상사중재위를 통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회담 동력 유지
- 6.26 北, 동해상 단거리 발사체 3기 발사
- 6.26 北 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중대보도, 연평도 주변 우리 군 훈련에 대해 '남은 것은 최고사령부의 타격명령뿐' 위협
- 6.26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총리후보자 사퇴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 퇴진 선동
- 6.29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6.29 만해스님 열반 70주기 남북공동행사(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개최(금강산)
- 6.30 北 국방위 '특별제안' 발표, 우리측에 비방·중상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화해 협력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제의

7월

07

- 7.1 통일부 대변인 성명, 北 국방위 '특별제안'(6.30) 관련 정부입장 발표
 - 北 제안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핵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줄 것과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장에 성의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
- 7.1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조사사업 관련 방북 협의(개성)
- 7.2 北, 동해상 단거리 발사체 2기 발사
- 7.2 경기도 및 경기문화재단, 개성 한옥보존 사업 관련 방북 협의(개성)
- 7.3 한·중 정상회담 개최,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쌍방 관심사항 등을 논의하고, 「공동성명」 채택
 - ※ 공동성명 주요 내용 :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형성,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정착 △인도적문제 해결, 민생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평화통일에 기여 △중국측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실현 지지 등
- 7.3 북한 주민 1명, 백령도로 넘어와 귀순 요청
- 7.4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의약품 지원 관련 방북 협의(개성)
- 7.6 北 통지문(북측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개성공단 관련 우리측이 출입질서를 위반할 경우 강화된 제재를 시행할 것임을 통보
- 7.7 北 공화국 정부 성명, 북침전쟁연습 전면중지, 6.15·10.4 선언 등 남북 합의 존중·이행 등을 주장하며,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을 발표
- 7.7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북한에 비합리적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대화의 장에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
 - 북측 응원단 파견에 대해서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입장에에 조직위 등과 협의, 필요한 사항을 국제관례에 따라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표명
- 7.8 南 통지문(남측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질서유지 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은 일방적 조치가 아닌 남북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
- 7.9 월드비전, 남북 공동 영농사업 관련 방북 협의(개성)

- 7.9 北,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7.10 北 통지문(北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아시안게임 조직위 위원장), 인천 아시안게임 북측 선수단 참가 및 응원단 파견 문제 관련 남북실무회담 7.15경 판문점 개최 제의
- 7.11 南 통지문, 남북실무회담을 7.17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갖자고 수정 제의
- 7.13 北, 동해상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 7.14 北, 고성 MDL 인근에서 방사포 및 해안포 100여발 동해로 발사
- 7.15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인선 발표
- 7.15 개성공단 북측 통행검사소,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를 7.18부터 시행할 것임을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
- 7.17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응원단 참가 관련 남북실무접촉 개최(판문점)
 - 우리측이 북한 선수단·응원단 참가 관련 구체적 설명과 확인을 요구한데 대해 북측은 일방적 회담 결렬 선언 후 퇴장
- 7..17 APG(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의 옴서버 가입을 승인
- 7.19 남북실무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담화, 우리측에 회담결렬 책임 전가 및 아시안게임 참가 재검토 위협
- 7.21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미사일 발사를 합법적 자주권 행사라며,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주장
- 7.21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정부는 북한이 진정으로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보다 성의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
- 7.25 통일부, 유진벨재단 대북지원 물품 반출(7억7천만원 상당 결핵 치료약품) 승인
- 7.26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
- 7.28 北 통지문(북적 위원장 → 한적 총재), 7.27 우리측 주민으로 보이는 변사체 발견, 7.30 판문점을 통해 인도할 것임을 통보
- 7.29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관련 방북 협의(개성)
- 7.29 거래말근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 개최(7.29~8.6, 中선양)
- 7.30 우리 국민 사체(1구) 인수(판문점)
- 7.30 北, 묘향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4발 발사

- 7.30 천도교, 동학혁명 120주년 기념 등 남북 공동행사 관련 방북 협의(개선)
- 7.31 北 조선평화응호전국민족위 대변인 담화, UFG 중단 요구 및 '청와대 화력타격' 위협

8월

08

- 8.4 현정은 회장 등 현대아산 관계자, 故 정몽헌 회장 11주기 추모행사 방북(금강산)
- 8.7 대통령 주재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민간 및 정부 부위원장 보고, 토론 등 진행
 - ※ 통일준비위원회 역할(대통령 모두말씀) : ①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통일청사진 마련 ②통일을 향한 여정에 있어 스마트한 내비게이션 역할 ③국민의 통일의지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용광로
- 8.7 평화3000, 남북합동미사 등 공동행사 관련 협의(개선)
- 8.8 北 올림픽위, 인천 AG 조추첨 행사(8.20~22)에 참가할 것임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사무국에 통보
- 8.11 南 통지문(남북고위급접촉 남측 수석대표 → 북측 단장),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 8.19 판문점 북측 통일각 개최 제의,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쌍방의 관심사항을 논의하자는 의사 전달
- 8.11 통일부, WFP(700만 달러)와 WHO(630만 달러)의 북한 모자 보건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방침임을 발표
- 8.12 北 어선 1척 NLL 침범,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 후 퇴각
- 8.13 北 서남전선군사령부 보도, 우리측이 북측 어선에 무차별적 사격을 가했다고 왜곡 주장하며 보복 위협
- 8.1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8.15 남북공동기도회 개최(8.13~16, 평양)
- 8.14 北 조평통 성명, UFG 중단, 5.24 조치 철회 등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8.15를 계기로 근본적 문제부터 풀어나가자고 주장
- 8.14 北 주민 2명, 인천 교동도로 귀순
- 8.14 교황, 25년만에 방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메시지 전달(8.14~18)

※ 주요 내용 : △한국의 평화 추구는 이 지역 전체와 전 세계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평화란 상호 비방과 비판, 무력시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한반도는 점차 하나가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기도할 것 등

• 8.14 北,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 OCA를 통해 14개 종목 선수 150명을 포함 총 352명의 참가 신청서 제출

• 8.15 대통령 8.15 경축사, 북한에 환경·민생·문화 분야의 통로를 열어나갈 것을 제안하고, 북핵포기 및 고위급접촉 호응 촉구

※ 주요 내용 : (환경협력) 한반도 생태계 연결·복원, 하천·산림 공동 관리, 10월 평창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북측 참여 제의 (민생)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지원, 민생인프라 협력 본격 시작, 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제개발 노하우 공유 및 새로운 성장모델(북한 지하자원, 노동력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 등) 제시 (문화) 문화유산 남북 공동 발굴·보존, 내년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 공동 문화사업 제의

• 8.17 北 조선인민군 참모본부 대변인 성명, UFG 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선제타격 위협

• 8.17 北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5주기(8.18) 계기 추모화환 전달(개성, 김양건 北 통전부장 전달)

• 8.18 통일부 대변인 성명, 북측이 남북고위급접촉 개최 제의(8.11)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

• 8.18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UFG 관련 '더 높은 단계의 자위적 대응'을 위협

• 8.18 정부, 국회에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14년도 시행계획」 보고(외통위)

※ 주요 내용 :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추진 △인도적 문제 실질 해결 △민족동질성 회복 위한 사회문화교류 △당국간 상시 대화채널 개설 등

• 8.19 인천 아시안게임 조추첨 관련 北 올림픽위 대표단 방남(8.19~23), 선수 150명 등 총 273명 선수단 파견 계획 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며, 추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실무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

• 8.19 대통령, 국무회의시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해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추진해 야함을 강조하면서 8.15 대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 촉구

• 8.22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北 서한 관련 정부는 북측의 문서교환 방식 협의 제안을 수용하고, 필요한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발표

• 8.25 北 리동일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긴급 기자회견, 유엔안보리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긴급 의제로 상정해달라는 서한을 발송했다며 국제사회에 UFG 훈련 문제를 제기

• 8.26 인천AG 조직위, 北 올림픽위원회에 선수단 규모 및 왕래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서한 발송

- 8.28 北 올림픽위 부위원장(손광호) 조선중앙TV 출연,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불참 입장 표명
- 8.29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정부는 北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여를 환영하고 편의제공 문제는 국제관례를 따르되,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설명
- 8.29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우리측에 대화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합동군사연습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주장

9월

09

- 9.1 北, 자강도에서 단거리 발사체 1발 동해상으로 발사
- 9.2 대통령,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계기 통일을 위한 남북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
- 9.4~5 北 우리민족끼리, '남북 고위급 접촉설'을 비난하며 △UFG 중단, △기존 남북 공동선언 이행,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 9.5 통일부 대변인 논평, 북한이 우리측 고위급접촉 제의에 답하지 않고 있는데 유감을 표명하고, 지금이라도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
- 9.5 北 통신문(북적 위원장 → 한적 총재), 북측지역에 불법 입국한 우리 국민을 9.11 판문점을 통해 인도할 것을 통보
- 9.5 南 통신문(한적 총재 → 북적 위원장), 우리 국민의 신병인수 의사 전달
- 9.6 北, 원산에서 단거리 발사체 3발 동해상으로 발사
- 9.7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미군 철수 촉구
- 9.8 독도 근해서 구조(9.7)한 북한 주민(3명) · 어선, 판문점을 통해 북측 송환
- 9.11 南 통신문(개성공단 남북공동위 3통 분과위 남측 위원장 → 북측 위원장), 상시통행 실시, 인터넷 연결 등의 문제 협의를 위한 3통 분과위원회의 9.18 개최 제의
- 9.11 南 통신문(환경부장관 → 국토환경보호상),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참석 촉구
- 9.11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北 선수단 선발대(94명) 방남

- 9.11 北,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한 우리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인도
- 9.12 南 통지문(한적 총재 → 북적 위원장), 우리 국민 송환(9.11)을 평가하면서 북측에 억류된 김정욱씨 석방 및 송환 촉구
- 9.13 北 남북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반공화국심리모략행위라고 비난, 보복타격 위협 및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
- 9.13 北 통지문(北 국방위 서기실 → 청와대 국가안보실), 北 남북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와 유사한 내용 주장
- 9.13 北 통지문(개성공단 남북공동위 3통 분과위 북측 위원장 → 남측 위원장), 개성공단 질서위반 문제가 해결되고, 대북 전단이 중지되어야 3통 회담도 재개될 것을 주장
- 9.13 통일부 대변인 논평, 정부가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사실관계 왜곡, 우리 민간단체 보복조치 위협 등에 유감 표명 및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
- 9.14 南 통지문(청와대 국가안보실 → 北 국방위), 통일부 대변인 논평(9.13)과 유사한 내용의 답신 전달
- 9.14 南 통지문(개성공단 남북공동위 3통 분과위 남측 위원장 → 북측 위원장), 개성공단과 무관한 시안을 분과위 개최의 조건으로 제기하는 것에 유감 표명 및 분과위 개최 호응 촉구
- 9.14 北, 억류중인 美 관광객(매튜 토드 밀러)에게 6년의 노동교화형 선고
- 9.15 北 통지문(北 국방위 서기실 → 청와대 국가안보실), 9.13 통지문의 내용 재반복
- 9.15 北 통지문(개성공단 남북공동위 3통 분과위 북측 위원장 → 남측 위원장), 대북전단 문제가 해결되어야 3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 반복
- 9.18 WHO·WFP를 통한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정(1,330만불)
- 9.18 北,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를 통해 세계군인 육군 5종 선수권대회(10.2~11, 경북영천) 참가 통보
- 9.19 민간단체(섬김, 민족사랑나눔)의 대북 인도지원 물품 반출 승인
- 9.19 北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 9.20 北 남북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 '南당국이 9.21 빠라 살포 놀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 등 주장
- 9.22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우리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9.21) 관련, 주모자 징벌과 당국 대화 불가를 시사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

- 9.24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북핵문제와 인권문제가 해결된 통일 한반도의 비전 제시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올 것 촉구 △북한인권 관련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와 국제사회의 탈북민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강조
- 9.24 국방부, 9.15 백령도 인근에서 수거된 소형 무인기가 3~4월 파주 등에서 발견된 北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
- 9.25 통일부장관 ‘2014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 남북간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
- 9.25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불참)
- 9.26 北 조평통 성명, 대통령 UN총회 연설시 ‘북핵·인권문제’ 제기 관련, 실명비난 재개
- 9.27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대통령 UN총회 연설 비난
- 9.28 北 리수용 외무상 UN총회 연설, 기존 핵 보유 입장을 재강조하고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 비난 및 연방제 통일방안 등 주장
- 9.29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 UN총회 연설과 관련된 북한의 원색적 비난을 비판하고, 논의하고 싶은 현안이 있으면 대화에 장에 나와 협의할 것을 재촉구
- 9.29 정부, 에이스경암의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텃밭·온실 물품 및 농자재 등 2억원 상당) 반출 승인

10월

10

- 10.2 北 조평통 성명, “북남공동선언들을 통일의 변함없는 이정표로 삼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루어나가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며 남북공동선언 이행 주장
- 10.3 천도교·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개천절 남북 공동행사 개회
- 10.3 北, 아시안게임 참석중인 인사를 통해 고위급 인사의 방문계획 통지(우리측 동의)
- 10.4 북측 고위대표단(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비서, 김양건 비서) 방한,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의 10월말 ~11월초 개최에 합의
- 10.6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계기 남북대화 정례화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

- 10.7 北 경비선의 연평도 인근 NLL 침범으로 5년만에 남북 함정간 교전 발생
- 10.7 北(통지문), 서해 NLL 남북 교전 발생 관련 긴급단독접촉 제의하며 北 특사 김영철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간 판문점 접촉 제안
- 10.7 南(통지문), 서해 NLL 존중 · 준수 필요성과 함께 관련 사항은 고위급접촉 또는 군사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 10.8 北(통지문), 긴급접촉제의를 다시금 제안
 - 이에 대해 우리측(대북통지문)은 비공개 군사당국접촉 10.15 개최를 제의(북측 동의)
- 10.10 北, 우리 민간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총격 도발 감행, 이 중 일부 우리측 민통선 지역 낙탄으로 우리군도 대응사격 실시
- 10.10 南(통지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北 총격 관련 강력 경고
- 10.11 인천장애인 AG 北 선수단 참가(10.11~25)
- 10.12 北 남북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 '아직 선택의 기회는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
- 10.13 대통령,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계기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위급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
 - 아울러,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한 · 고위급 접촉 합의 vs. NLL 교전 · 휴전선 총격 등 남북관계의 이중적 모습을 지적하고, 정부가 일관된 정책 기초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
- 10.13 南(통지문, 남북고위급접촉 남측 대표 → 북측 단장),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10.30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10.13 금강산 신계사 복원 기념 남북합동법회 개최
- 10.15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개최, 별도 합의 없이 종료(판문점)
 - 북측은 △서해 경비계선 내 우리 함정 진입 금지, △민간 차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 포함 비방 · 중상 중지 요구, 우리측은 △북측 NLL 준수, △민간단체 활동 및 언론 통제 불가 입장 전달
- 10.16 北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 남북군사당국자 접촉 과정에서의 우리측 태도 비난 · 민간단체에 대한 조준사격 등 위협 및 고위급접촉 개최의 전도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주장
- 10.16 정부는 △북측의 군사당국자 접촉 내용 왜곡 공개, 민간단체에 대한 조준사격 등 위협에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긴장 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제2차 남

북고위급접촉의 개최를 기대한다는 입장 표명

- 10.16 조국평화통일협의회, 남북 공동 조국평화통일 기도회 개최
- 10.16 정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천 아시안게임 北 선수단 참가 경비 중 5억 5천여만원(북측은 2억 300여만원 지불) 지원 결정
- 10.20 北(통지문,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 남측 수석대표), 북측 군사분계선 일대 순찰활동에 대해 우리측이 경고방송과 사격을 실시했다고 비난하면서 보복조치 위협
- 10.20 南(통지문,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 북측 단장), 우리측 조치는 북측 군사분계선 침범(10.18,19), 도발적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북측 책임 전가에 대한 유감 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및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입장 표명
- 10.22 北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성명, 빼라 살포 문제 등에 대한 우리측의 태도 변화를 고위급접촉 개최 조건으로 요구하며, 남북관계 파국을 위협
- 10.23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일방적인 주장을 그만두고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존중할 것을 촉구
- 10.26 北 통지문(국방위 서기실 → 국가안보실), 10.25 보수단체들의 주간 전단살포 계획은 무산되었으나, 당국이 저녁시간을 이용한 전단살포 강행을 방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위급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
- 10.27 南 통지문(청와대 국가안보실 → 국방위), 민간단체 전단살포 관련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제2차 고위급접촉에 대한 입장부터 밝힐 것을 요구
- 10.28 南 통지문(청와대 국가안보실 → 국방위), 우리 정부의 10.30 제2차 고위급접촉 개최 제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10.29까지 밝혀줄 것을 촉구
- 10.29 北 통지문(국방위 서기실 → 청와대 국가안보실), 우리측이 빼라살포를 방임하고, 2차 고위급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위급접촉을 개최하겠는지, 빼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 선택할 것을 요구
- 10.29 통일부 대변인 논평,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히고, 북한이 이 문제를 고위급접촉의 전제조건화 하여 10.30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명
- 10.30 거래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 개최 방북(10.30~11.18, 평양)

11월

11

- 11.1 北 조평통 성명, '위임에 따른 중대 입장을 천명'한다며, ①전단 살포 중단 없이는 남북대화, 남북관계 개선 불가 ②전단 살포자 처단 위협 ③전단 살포 행위를 유엔과 국제기구에 고소 등을 주장
- 11.2 통일부 대변인 성명,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지원한다고 왜곡, 이를 빌미로 대화를 중단한다는 데 강한 유감 표명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어떤 위협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경고
- 11.2 「연천국제유소년축구대회」 北 선수단 참가(32명, 11.2~11, 연천군)
- 11.4 北 외무성 대변인, 미국과는 '인권대화는 물론 핵대화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
- 11.5 정부, 이희호 여사 北 주민접촉 신고 수리
- 11.6 영통사 낙성 9주년 기념 통일기원 남북 합동법회 협의 관련 천태종 관계자(4명) 방북(개성)
- 11.6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통준위 통일헌장(2015년 공포 예정) 제정 계획 관련 흡수통일 야망이라고 비난
- 11.7 원불교 100년 남북 평화통일 기원 법회 협의 관련 원불교 관계자(4명) 방북(개성)
- 11.8 北, 억류 미국인 2명(케네스 배, 매튜 토드 밀러) 석방
- 11.9 정부, 억류 미국인 석방을 환영하며, 북한이 김정욱 선교사 석방·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외교부 대변인 논평)
- 11.10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한 의미있는 대화 재개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자는데 합의
- 11.10 북한군 판문점 부근 군사분계선에 접근, 우리 군의 경고사격 후 퇴각
- 11.11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 북핵문제 관련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국의 단합된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합의
- 11.11 조선신보, 억류 美 국민 석방을 위해 '美 정보기관의 최고수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진지한 대화의 기점으로 삼으려 한다면 호응할 것'이라고 주장

- 11.11 개성공단 북측 통행검사소의 에블라 검역장비 지원 요청(10.29)에 열감지 카메라 3대 지원(대여) 결정(11.20 설치 예정)
- 11.12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호국훈련에 대해 '북침전쟁연습'이라며 비난
- 11.15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위임에 따른 원칙적 입장'이라며 ①우리측 반공화국 대결소동이 지속되는 한 남북관계 개선 및 대화·접촉 불가, ②남북 합의를 무산시켜 온 악습 철폐, ③우리 당국자들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되는 처신 등 주장
- 11.15 北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보도, 북한군 MDL 접근에 따른 우리군 경고방송·경고사격(11.10)에 대해 정상적 순찰활동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 보복타격 위협
- 11.15 합참, 北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보도 관련 우리군의 정당한 조치를 비난 위협한데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군의 MDL일대 도발행위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과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발표
- 11.16 현대아산 관계자 금강산관광 16주년 기념행사 참석(금강산)
- 11.17 北 최룡해, 러시아 방문(11.17~24)
- 11.18 UN총회 제3위원회(인권문제 담당), 우리나라·EU 등 62개국이 공동제안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
 -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 자행 인정(7항), △UN 안보리에 북한 인권상황의 ICC 회부 및 책임자 제재 권고(8항) 등 이전보다 강도 높은 조항 포함
- 11.20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새로운 핵시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
- 11.20 정부, 북한의 핵 관련 상황 악화 조치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고, 이번 결의안에 따른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외교부 대변인 논평)
- 11.20 민화협 관계자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청소년교류 관련 방북 협의(개성)
- 11.21 北 서남전선 사령부 보도, 우리군의 호국훈련을 비난하는 가운데 연평도 포격전을 거론하며 '검푸른 바다에 영영 수장'시켜 버리겠다고 위협
- 11.21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연평도 포격전 4주년 보수단체 규탄 행사 관련 '최고준엄 모독을 주장하며 무자비한 징벌 위협
- 11.21 이희호 여사 방북 관련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 방북 협의(개성)
- 11.22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놀음은 우리 제도·인민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 11.23 北 국방위원회 성명, 北 억류 미국인 석방에 미국이 결의안 채택으로 응수했다며, ‘보복세례의 첫 과녁’이라고 위협
- 11.23 정부, 北 국방위 성명 관련 △북한의 핵전쟁 위협 등 도발적 언동 강력 규탄 △추가적 상황 악화 조치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을 엄중 경고 △유엔 북한인권 결의에 따른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 촉구(외교부 대변인 논평)
- 11.23 정부, 독도 근해 표류중인 북한어선 구조(11.26 북측에 인계)
- 11.24 北 민화협 대변인 담화, 남한의 인권결의 동조는 ‘우리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파멸적 후과’ 등 위협
- 11.24 나진-하산 석탄시범 운송사업(11.24~28) 진행
- 11.26 영통사 복원 9주년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개최

12월

12

- 12.2 통준위 3차회의 개최, △통준위 출범 이후 민관협업 현황 및 향후 계획 및 통준위 활동 방향과 내년도 추진계획 발표 △분과별 발표 및 토론 등 진행
- 12.2 국방부, 한기총의 요청에 따라 애기봉 임시 성탄트리 설치 및 점등행사 실시 계획 공개
- 12.4 北 조선종교인협의회 대변인 담화, 애기봉 임시 성탄트리 설치 및 점등행사 실시 계획 비난
- 12.6 北 우리민족끼리,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조문을 개정(11.20), 최저인금 인상을 제한(5%)규정을 없앴다고 발표
- 12.8 대통령은 세계정책회의 기조연설(11.8) 계기에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
- 12.8 통일부장관 방미(12.8~14), KGF 미국 포럼 및 美의원·정부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한 한·미 양국간 협력 증진 필요성을 강조
- 12.9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만월대·평양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 협의(개성)
- 12.10 정부,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발표(12.6) 관련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 표명

- 12.10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민족 기록유산 남북 공동전시사업 관련 방북 협의(개성)
- 12.11 北 조평통 대변인 기자 문답, 북한 핵·인권문제에 대한 대통령 언급 관련 원색적으로 실명 비난
- 12.12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최근 북한의 우리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실명 비난재개 관련,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의 자성 촉구
- 12.12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우리 정부 통일 논의를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 '체제대결 책동' 이라고 비난
- 12.13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CIA 고문보고서, △美 퍼거슨시 사태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인권 불모지라고 주장 및 제도전복을 노리는 태도라고 비난
- 12.15 北,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관련 우리측 통지문 접수 거부(12.15-16, 2차례)
- 12.16 정부, 북측 통지문 접수 거부 관련 북한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고, 당국간 합의 없는 제도 변경을 용인하지 않을 것과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표명(통일부 대변인 논평)
- 12.16 김대중평화센터(박지원 의원)·현대아산(조건식 사장)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 관련, 조화를 북한측에 전달
- 12.18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총회 본회의 통과(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
- 12.18 한기총, 애기봉 임시등탑 설치계획 철회 발표
- 12.19 정부,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북한이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외교부 대변인 논평)
- 12.19 北 통지문, 우리측 조화 전달에 대한 사의를 표하기 위해 양측에 12.23 또는 12.24에 개성공단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
- 12.20 北 외무성 성명,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전면 배격하며, △9.19공동성명 등 모든 합의 무효화 △핵무력 포함 자위적 국방력 강화 등을 주장
- 12.20 北 조평통 서기국 공보,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인 것은 남한의 대결정책 탓이라며 정책전환을 주장
- 12.20 北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소니 해킹을 부인하며 미국에 공동조사를 제안
- 12.21 정부, 조평통 서기국 공보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북한에 책임전가식 태도를 되풀이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

- 12.21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통진당 해산 관련 “정치적인 테러”라고 비난
- 12.22 정부, 통진당 해산 관련 북측의 일방적 주장에 “심각한 유감” 표명 및 “우리 내부 문제를 불순하게 이용하려는 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 12.22 유엔안보리, 북한 인권문제 관련 ‘북한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찬성11 반대2 기권2)
- 12.23 정부, 유엔안보리 정식 의제 채택 관련 향후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 표명(외교부 대변인 논평)
- 12.23 정부, 독도 근해서 표류하다 구조(12.19)된 北 어선을 북측으로 송환
- 12.24 北, 김정일 사망 3주기 조화 전달(12.16)에 대한 감사 친서(이희호 여사, 현정은 현대 그룹 회장 앞)를 전달(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면담)
- 12.25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유엔안보리 북한인권 안건 채택 관련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 모락에 적극 가담했다며 ‘무자비한 징벌’을 내릴 것이라고 위협
- 12.26 北, 불법 입북한 우리측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인도
- 12.27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북한 인터넷 불안은 美 소행 △소니사 해킹은 자신들과 무관 주장 및 美오바마 대통령 원색 비난
- 12.29 통일준비위원회, 내년 1월 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제안(대북전통문, 南 통준위 정부부위원장 → 北 통전부장)
- 12.31 대통령 2015년 신년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갈 것”

II. 남북관계 주요 통계

1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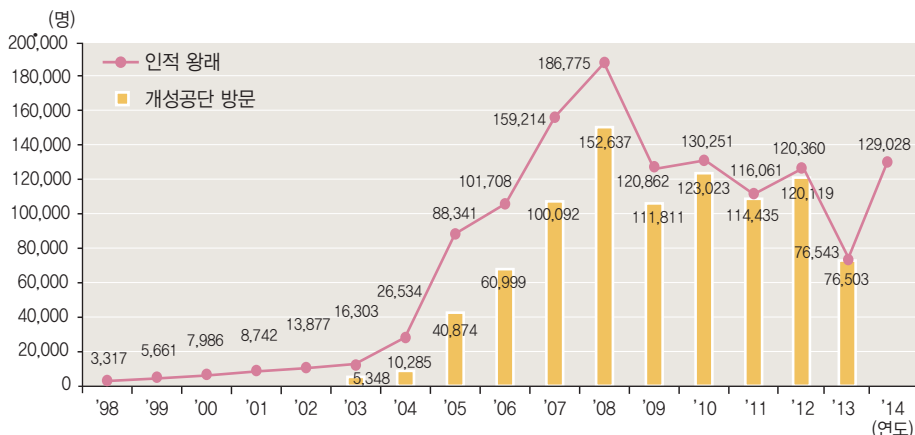
① 남북 왕래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89~'00	'01	'02	'03	'04	'05	'06	'07
남 → 북 (방북)	18,601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북 → 남 (방남)	1,343	191	1,052	1,023	321	1,313	870	1,044
계	19,944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구분 \ 연도	'08	'09	'10	'11	'12	'13	'14	계
남 → 북 (방북)	186,443	120,616	130,119	116,047	120,360	76,503	129,028	1,306,622
북 → 남 (방남)	332	246	132	14	0	40	366	8,287
계	186,775	120,862	130,251	116,061	120,360	76,543	129,394	1,314,909

※ 금강산 등 관광인원 제외



② 금강산/개성/ 평양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금강산 관광	해로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38,306	449	-
	육로	-	-	-	-	-	36,028	267,971	298,247
	합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개성 관광		-	-	-	-	-	-	-	1,484
평양 관광		-	-	-	-	-	1,019	-	1,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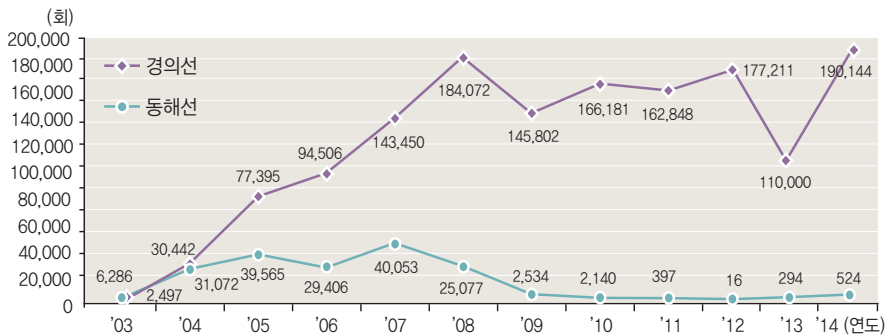
구분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금강산 관광	해로	-	-	-	-	-	-	-	-	-	552,998
	육로	234,446	345,006	199,966	-	-	-	-	-	-	1,381,664
	합계	234,446	345,006	199,966	-	-	-	-	-	-	1,934,662
개성 관광		-	7,427	103,122	-	-	-	-	-	-	112,033
평양 관광		-	-	-	-	-	-	-	-	-	2,299

③ 남북 차량 왕래 현황

(단위 : 회)

구분 \ 연도		'03	'04	'05	'06	'07	'08
차량 (운행 횟수)	경의선	2,497	30,442	77,395	94,506	143,450	183,085
	동해선	6,286	31,072	39,565	29,406	40,053	25,077
	합계	8,783	61,514	116,960	123,912	183,503	208,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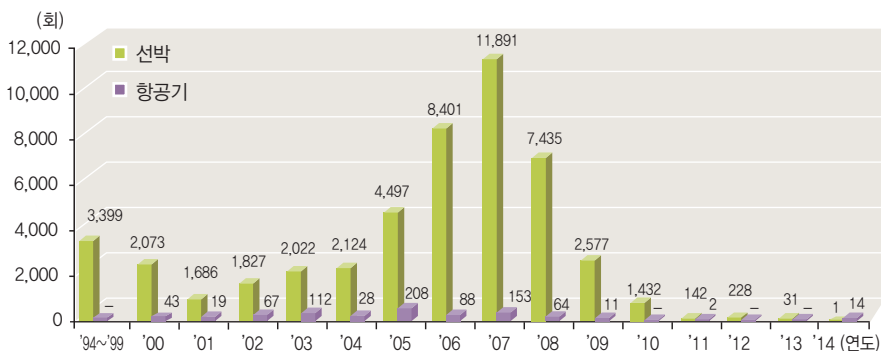
구분 \ 연도		'09	'10	'11	'12	'13	'14	계
차량 (운행 횟수)	경의선	145,802	166,181	162,848	177,211	110,000	190,144	1,483,561
	동해선	2,534	2,140	397	16	294	524	177,364
	합계	148,336	168,321	163,245	177,227	110,294	190,668	1,660,925



④ 남북 선박·항공기 왕래 현황

(단위 : 회(편도))

연도 구분	'94~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선박	3,399	2,073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7,435	2,577	1,432	142	228	31	1	49,766
항공기	-	43	19	67	112	28	208	88	153	64	11	-	2	-	-	14	809



2 남북교류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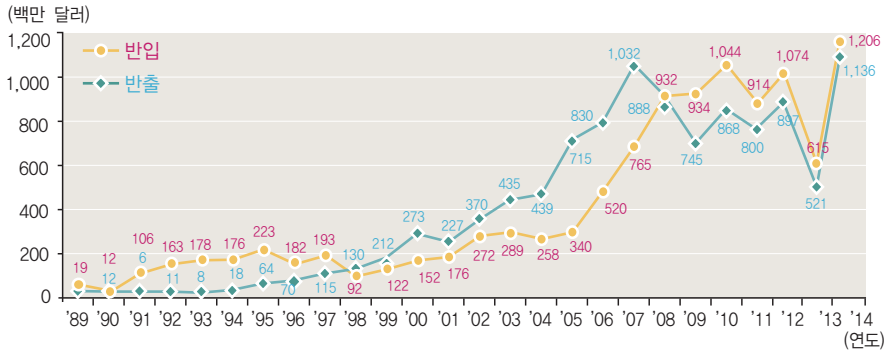
①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반출	0	1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합계	19	13	111	173	187	195	287	252	308	222	333	425	403	642

연도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합계
반입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1,074	615	1,206	10,958
반출	435	439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897	521	1,136	10,812
합계	724	697	1,056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971	1,136	2,343	21,771

* 반올림으로 인해 각 년도의 반입/반출 '소계'와 '합계'가 다를 수 있음. 1백만 달러 이하는 '0'으로 표시



② 남북교역 건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반입	66	79	300	510	601	708	976	1,475	1,806	1,963	3,089	3,952	4,720	5,023
반출	1	4	23	62	97	267	1,668	1,908	2,185	2,847	3,421	3,442	3,034	3,773
계	67	83	323	572	698	975	2,644	3,383	3,991	4,810	6,510	7,394	7,754	8,796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반입	6,356	5,940	9,337	16,412	25,027	31,243	37,307	39,800	33,762	36,504	20,566	38,460	325,982
반출	4,853	6,953	11,828	17,039	26,731	36,202	41,293	44,402	40,156	45,311	25,562	47,698	370,760
계	11,209	12,893	21,165	33,451	51,758	67,445	78,600	84,202	73,918	81,815	46,128	86,158	696,742

③ 남북교역 품목수 현황

(단위 : 개)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반입	24	23	43	69	69	80	109	130	143	136	172	204	201	204
반출	1	3	16	25	37	87	167	167	284	379	405	527	492	493
계	25	26	57	92	103	158	244	258	365	449	488	578	549	570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반입	186	202	381	421	450	482	486	448	363	377	359	349	839
반출	530	575	712	697	803	813	771	740	676	705	644	697	1,103
계	588	634	775	757	853	859	822	795	702	731	674	718	1,118

* 품목은 반입과 반출에서 중복되는 관계로, 「계」는 항목 간 합과 일치하지 않음.

④ 유형별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남북교역 유형	'06	'07	'08	'09	'10	'11	'12	'13	'14
반 입	일반교역·위탁가공	441	646	624	499	334	4	1	1	0
	경제협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 기타·경공업협력)	77	120	308	435	710	909	1,073	615	1,206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 / 사회문화 협력 / 경수로사업)	1	0	0	0	0	1	-	-	-
	반입 합계	520	765	932	934	1,044	914	1,074	615	1,206
반 출	일반교역·위탁가공	116	146	184	167	101	-	-	-	-
	경제협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 기타·경공업협력)	294	520	596	541	744	789	888	518	1,132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 / 사회문화 협력 / 경수로사업)	421	367	108	37	23	11	9	3	4
	반출 합계	830	1,033	888	745	868	800	897	521	1,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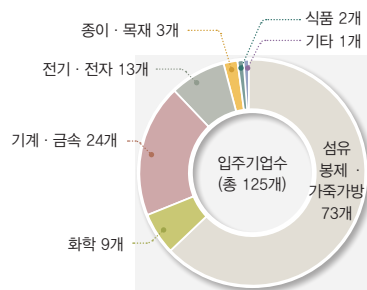
※ 반올림으로 연도별 반입/반출 유형별 소계와 반입/반출 합계가 다를 수 있음. 교역액 1백만불 미만은 "0"으로, 없을 경우 "-"으로 표시

3 개성공단사업 추진 현황

① 개성공단 입주기업수

(단위 : 개)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입주 기업수(개)	18	30	65	93	117	121	123	123	123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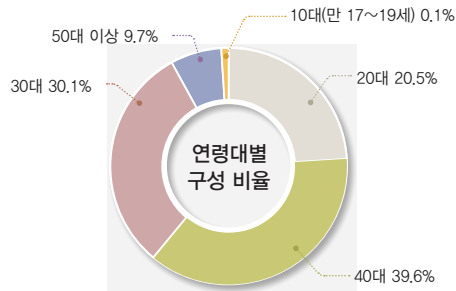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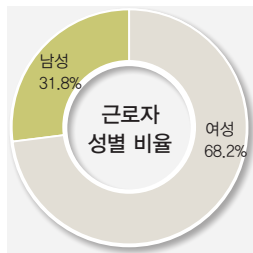
② 개성공단 생산액 현황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생산액 (만 달러)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46,950	22,379	46,997	266,974
수출액 (만 달러)	87	1,983	3,967	3,584	2,860	3,667	3,687	3,639	1,210	1,530	26,213

③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북측 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448	52,329	53,947
남측 근로자	507	791	785	1,055	935	804	776	786	751	815
합계	6,520	11,951	23,323	39,986	43,496	47,088	50,642	54,234	53,080	54,762



학력분포(%)			평균연령(세)			연령대별(%)					성별(%)	
대졸	전문학교	중졸	전체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남	여
8.4	7.6	84.0	38.5	42.6	35.4	0.1	20.5	30.1	39.6	9.7	31.8	68.2

4 인도적 과제 추진 현황

①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정부 차원	무상 지원	당국 차원	949	1,221	2,000	1,432	-	-	183	-	-	-	-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02	120	134	216	241	77	21	-	-	-	{30}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62	19	139	335	197	217	-	65	23	133	141
		계	1,313	1,360	2,273	1,983	438	294	204	65	23	133	141
		식량차관	1,359	1,787	-	1,505	-	-	-	-	-	-	-
		계	2,672	3,147	2,273	3,488	438	294	204	65	23	133	141
민간 차원(무상)			1,558	779	709	909	725	377	200	131	118	51	54
총액			4,230	3,926	2,982	4,397	1,163	671	404	196	141	183	195

※ '14년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금액 30억원은 공모사업 기금지원으로 '15년도 집행 예정

② 이산가족 상봉 현황

(단위 : 건/(명))

구분	연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민간차원	생사 확인	-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서신 교환	-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상봉	-	6	11	19	12	11	17	18	61	109 (2)	200 (18)	152 (392)	170 (493)	208 (616)
당국차원	생사 확인	65 (157)	-	-	-	-	-	-	-	-	-	-	792 (7,543)	744 (2,670)	261 (1,635)
	서신 교환	-	-	-	-	-	-	-	-	-	-	-	39 (39)	623 (623)	9 (9)
	방남 상봉	30 (81)	-	-	-	-	-	-	-	-	-	-	201 (1,720)	100 (899)	-
	방북 상봉	35 (76)	-	-	-	-	-	-	-	-	-	-	202 (674)	100 (343)	398 (1,724)
	화상 상봉	-	-	-	-	-	-	-	-	-	-	-	-	-	-

구분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민간차원	생사 확인	388	209	276	69	74	50	35	16	3	6	9	6
	서신 교환	961	776	843	449	413	228	61	15	21	16	22	11	11,467
	상봉	283 (677)	188 (470)	95 (261)	54 (105)	55 (167)	36 (97)	23 (51)	7 (18)	4 (14)	3 (6)	3 (5)	5 (10)	1,749 (3,400)
당국차원	생사 확인	963 (7,091)	681 (5,007)	962 (6,957)	1,069 (8,314)	1,196 (9,121)	-	302 (2,399)	302 (2,176)	-	-	316 (2,342)	-	7,653 (55,412)
	서신 교환	8 (8)	-	-	-	-	-	-	-	-	-	-	-	679 (679)
	방남 상봉	-	-	-	-	-	-	-	-	-	-	-	-	331 (2,700)
	방북 상봉	598 (2,691)	400 (1,926)	397 (1,811)	594 (2,683)	388 (1,741)	-	-	-	-	-	-	170 (813)	3,668 (16,256)
	화상 상봉	-	-	199 (1,323)	80 (553)	278 (1,872)	-	195 (888)	191 (886)	-	-	-	-	557 (3,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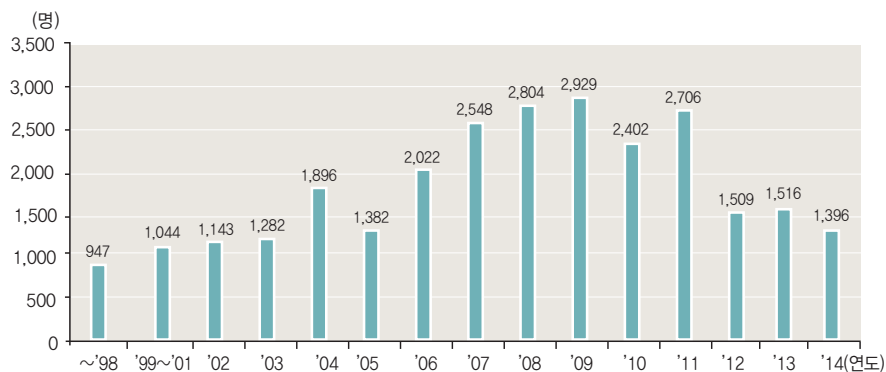
※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등록 현황 : 129,616명 등록(생존 68,264명, 사망 61,352명)

③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남성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71	304	8,251
여성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9,267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6	1,396	27,518

※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보호결정을 기준으로 집계



5 남북회담

①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단위 : 회)

연도 구분	'71~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정치	170	-	7	4	8	18	2	4	5	2	10	5	13	-	-	-	-		1	2	249
군사	-	-	-	-	-	4	2	9	6	5	3	4	11	2		1	1			1	48
경제	5	-	-	-	-	3	3	14	17	13	11	8	22	3	4	3	-		22	3	128
인도	114	-	4	1	-	2	1	3	7	2	4	3	3	-	2	4	-		1	1	151
사회· 문화	34	-	-	-	-	-	-	2	1	1	6	3	6	1	-	-	-			1	54
합계	323	-	11	5	8	27	8	32	36	23	34	23	55	6	6	8	1		24	8	630

※ 정치(장차관급 회담 등) / 군사(장성급·군사실무회담 등) / 경제(경제협력추진위 등) / 인도·사회(적십자·체육 회담 등)

②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건수

(단위 : 건)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합의서 건수	-	3	3	1	18	4	23	31	21	23	10	39	5	1	1	-	-	7	2	236

6 통일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분	'03년 이전	'04	'05	'06	'07	'08	'09
인원	411,697	20,804	26,420	25,865	34,045	32,039	71,944

구분	'10	'11	'12	'13	'14	계
교육인원	68,946	119,736	133,284	185,194	67,445	1,197,419

Ⅲ.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1 총괄표(구성 및 사용실적)

① 조성실적

(단위 : 백만 원)

연도	구분	정부출연금	기타출연금	공공자금관리 기금예수금	운용수익 등	총조성액
1991		25,000	-	-	237	25,237
1992		40,000	-	-	5,118	45,118
1993		40,000	3	-	4,778	44,781
1994		40,000	1	-	9,387	49,388
1995		240,000	119	-	14,589	254,708
1996		100,000	132	-	18,409	118,541
1997		50,000	288	-	27,874	78,162
1998		-	-	-	40,280	40,280
1999		-	3	149,831	23,013	172,847
2000		100,000	542	254,852	30,393	385,787
2001		500,000	1,079	310,000	29,406	840,485
2002		490,000	77	505,000	42,036	1,037,113
2003		300,000	1	823,000	46,515	1,169,516
2004		171,400	1	310,000	38,371	519,772
2005		500,000	33	460,000	31,178	991,211
2006		650,000	15	940,000	36,619	1,626,634
2007		500,000	75	584,591	38,859	1,123,525
2008		650,000	52	147,500	49,274	846,826
2009		-	56	81,000	74,354	155,410
2010		-	-	875,000	51,238	926,238
2011		-	2	104,400	38,276	142,678
2012		112,800	2	400,000	51,236	564,038
2013		105,500	3	530,000	162,300	797,803
2014		93,400	-	228,600	47,304	369,304
합 계		4,708,100	2,484	6,703,774	911,044	12,325,402

② 사용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주민왕래지원	-	-	-	-	-	-	-	-	-	3	3	237	11
문화·학술·체육협력	9	-	-	-	-	-	-	0.3	-	21	1	-	7
이산가족	-	6	-	-	-	-	-	0.1	4	28	13	20	30
인도적 지원(무상)	-	-	-	-	1,824	55	191	199	339	977	976	1,226	1,501
인도적 지원(유상)	-	-	-	-	-	-	-	-	-	867	190	967	1,561
남북경제협력(무상)	13	-	-	-	-	49	-	-	-	146	898	368	763
남북경제협력(유상)	-	-	-	-	-	-	-	675	-	5	461	667	547
경수로 대출	-	-	-	-	-	-	-	-	-	3,259	3,003	3,009	3,287
공자기금예수 원리금상환	-	-	-	-	-	-	-	-	-	190	391	2,124	3,250
- 공자기금원금상환	-	-	-	-	-	-	-	-	-	-	-	1,498	2,549
- 공자기금이자상환	-	-	-	-	-	-	-	-	-	190	391	626	701
기금관리비	3	3	3	3	2	2	2	2	2	3	5	6	8
합 계^{주)}	25	8	3	3	1,826	106	193	876	346	5,500	5,940	8,625	10,966

주) 「연도별 기금사용 현황」은 사사오입하여 억 원 단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합계액과 현황표상의 '합계'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

(단위 : 억 원)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합 계
주민왕래지원	11	38	53	17	27	-	-	-	-	-	5	405
문화·학술·체육협력	32	75	74	69	38	30	21	26	23	21	28	475
이산가족	32	133	99	269	182	22	20	1	4	21	31	915
인도적 지원(무상)	1,225	1,866	2,125	2,272	597	294	192	102	24	132	148	16,265
인도적 지원(유상)	1,020	1,793	39	1,405	-	-	-	-	-	-	-	7,842
남북경제협력(무상)	760	2,045	1,521	1,725	1,101	415	177	167	421	2,037	441	13,047
남북경제협력(유상)	814	568	710	1,400	366	240	453	130	221	746	223	8,226
경수로 대출	870	227	89	-	-	-	-	-	-	-	-	13,744
공자기금 원리금상환	3,895	3,658	8,713	6,337	1,512	1,159	9,306	1,086	5,161	6,388	3,882	57,052
- 공자기금원금상환	3,100	2,820	7,730	5,330	500	100	8,200	-	4,000	5,300	2,916	44,043
- 공자기금이자상환	795	838	983	1,007	1,012	1,059	1,106	1,086	1,161	1,088	966	13,009
기금관리비	12	16	18	19	21	39	29	27	28	30	30	313
합 계^{주)}	8,670	10,418	13,442	13,513	3,844	2,199	10,197	1,539	5,883	9,376	4,788	118,284

주) 「연도별 기금사용 현황」은 사사오입하여 억 원 단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합계액과 현황표상의 '합계'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

2 2014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금액	사업구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19,807	통일기반조성 (106건, 23,631)
통일체험관 시설 설치 및 홈페이지 구축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2,41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및 자산취득비 지원	1,174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기본구상(안) 용역 추진 지원	20	
DMZ 세계평화공원 종합계획 수립지원	214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	2,590	사회문화 교류지원 (11건, 3,306)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 남북협력기금지원	256	
제17회 인천아시아안게임 북한참가 지원	413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 지원	47	이산가족 교류지원 (25건, 3,083)
2014년 설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협력기금 지원	2,182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77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지원	427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보관 지원	397	
WFP의 모자보건사업 지원	7,384	인도적 지원 (8건, 14,765)
WHO의 모자보건사업 지원	6,674	
2014년도 대북지원 민간단체 정책사업	625	
국내외 NGO 합동 포럼 개최 사업 지원	82	
경제협력사업 보험 보상금 지급	52	교역 및 경험보험 (10건, 52)
「남북교역·경험 관리업무」 위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지원	1,043	경험기반조성 (무상) (58건, 20,452)
2013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및 위탁사업비지원	74	
2014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 및 위탁사업비지원	967	
DMZ 평화·생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코리아DMZ협의회 지원	100	
다자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40	
2014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	6,179	
개성공단 2차 폐기를 소각시설 증설사업	8,945	
개성공단 도수터널 보수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930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27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운영지원	285	

사업 내용	금액	사업구분
개성공단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478	
개성공단지구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396	
개성공단 월고저수지 여수로 긴급보수공사 지원	256	
개성공단 출퇴근시설 개선사업 지원	185	
개성공단 통관체계 개선 및 군통신선 안정적 운영 지원	6	
개성공단 남북연결도로 및 통일다리 보수지원	41	
교역 경험 자금용자(경협)	19,000	경협자금(용자) (83건, 19,000)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	3,289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대출 (4건, 3,289)
소 계 (305건)	87,578	

IV. 통일부 국정과제·브랜드과제 현황

국정과제	세 부 과 제	단 위 과 제
국정과제 125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① 인도적 문제 해결 적극 추진	① 이산가족 상봉 재개 및 서신 교환 ②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③ 인도적 대북지원 및 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
	② 남북간 대화 채널 개설 및 기존 합의정신 실천	① 남북간 대화채널 개설 ② 기존 합의정신 실천
	③ 남북간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①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② 남북러 3각 협력방안 모색 ③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 추진 ④ 다각적인 사회문화 교류 내실화 ⑤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추진
	④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의 상호 보완적 발전	①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의 상호 보완적 발전
국정과제 126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	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발전 공론화 ②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발전방향 마련
	⑥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① 대북협약 추진 및 사업 착수 ② 남북합의 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 ③ 국내외 지지기반 강화
	⑦ 「그린 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추진	① 녹색경제협력 도모 ② 남북간 농업협력 추진 ③ 개성공단내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④ 한반도 환경 인프라 구축
	⑧ 북한주민의 인권 등 삶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통일 여건' 조성	① 북한인권 개선 제도화 노력 ②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⑨ 남북간 소통의 통로를 통한 생활공동체 형성	① 산림·하천 남북 공동관리 ② 북한 생활환경 개선 등 민생 인프라 협력 ③ 문화유산 남북공동 발굴·보존 ④ 남북공동 광복 70주년 기념 문화사업 추진
	⑩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등을 통한 경제공동체 건설	① 남북경제 이해 증진 및 유대 강화 ② 한반도 통합물류망 구축 추진 ③ 경제공동체 건설 기반 마련 ④ 국제투자 유치 등 국제적 차원의 북한개발 추진

국정과제	세 부 과 제	단 위 과 제
국정과제 127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 추진	Ⅱ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발전 및 통일 미래 역군으로 육성	①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발전 및 통일 미래 역군으로 육성 ② 자산형성 지원 사업
	Ⅱ 실질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	① 유관부처간 통일대비 협조체계 강화 추진 ② 종합적인 통일재원 조달방안 마련 검토 ③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추진 ④ 통일방송 확대·발전 ⑤ 통일준비위원회 설치·운영
	Ⅲ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산	①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 ② 한민족 통일기반 구축
브랜드과제 8 실질적 통일 준비 추진	Ⅳ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비전 수립 착수	
	Ⅴ 탈북민 성공정착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Ⅵ 통일체험교육 공간으로서의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가동	
브랜드과제 9 인도적 문제 해결 및 교류 협력 확대	Ⅶ 「건강한 통일세대 만들기」 프로젝트 시행	
	Ⅷ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문화유산 발굴·복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8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76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68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146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68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77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79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70
개성공업지구법	79
개성공업지구 부속의원	84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	89
계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89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53
경험보험제도	82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177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	231
국제통일전략대화	43
국제형사재판소	126
그린닥터스	84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망	94



나진-하산 물류사업	63, 98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	259
남북경협 4대 합의서	78
남북고위급접촉	134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49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251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49
남북관계발전위원회	249
남북교류협력시스템(통통시스템)	10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99
남북러 3각 협력	63
남북영화상영전	27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112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148
남북출입사무소	102
남북한주민이 함께하는 2014 어울림한마당	193
남북합동기도회	88
남북합동법회	88
남북해운합의서	97
남북협력기금	66, 81, 257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80
남북자	113
남북자 대책위원회	114
남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119

C

독일통일총서	51
동해선	95, 96, 10, 102
드레스덴 구상(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34
DMZ세계생태평화공원	38

ㄹ

라선콘트렌스	63
--------	----

ㅁ

마음나누기 프로그램	169
모자패키지사업	21, 120
민간협력프로젝트사업	192
민생·문화·환경 3대 통로	36
민생인프라	34, 36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3, 305

ㅂ

복합농촌단지	35, 120
북한공개정보센터(N.K.O.S.C.)	241
북한 문화예술체험교육	206
북한방문증명서	10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161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17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83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구축사업	192
북한인권 결의안	125, 126, 127
북한인권백서	128
북한인권법	129
북한인권정보센터	128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115
북한자료센터	246
북한정보포털	238
북한정보포털시스템	238
북한 종합데이터베이스	238
북한학	242
비무장지대(DMZ)	38, 39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54, 305
비정부기구(NGO)	35, 122, 250

ㅅ

사이버 통일교육	207
사회적응 기본교육프로그램	164
사회통일교육	215
생물다양성협약(CBD)	41
생활안정 지원	190
서해 NLL 침범	32
세계북한학학술대회	242
세계식량계획(WFP)	122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41

세계한상대회	83
숲 치유 프로그램	161
시베리아철도(TSR)	64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	63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91, 151
안전보장이사회	127
에볼라 방역관련 격리조치	65
NLL 교전	133
MDL 총격전	133
역외가공지역(OPZ)	83
5·24조치	65
OK시스템	100
원내 초청교육	203
월고저수지	75
웨스트프로그램(WEST)	189
유네스코(UNESCO)	4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64
유엔 인권위원회	125
유엔 총회 기조 연설	126
6·25 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116
이산가족 교류 지원	111
이산가족상봉행사	151
이산가족 영상편지	112
이산가족유전자 검사	106, 112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108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91, 136, 151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91
통일문화주간	26
인도적 대북지원	106, 120, 283
1.5 트랙 협의체	46



자산형성지원사업	186
자유무역협정(FTA)	83
자유의 집	154
작은 통일	36, 305
전단살포	133
전자출입체계(RFID)	145
정착지원법	161
조세특례제한법	82
주거지원금 지급현황	178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223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80
지역적응센터	181



천안함 폭침도발	62
청소년 통일문화경연대회	26



KTX 통일호	232
큰 통일	36, 305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188
통일거버넌스구축	252
통일 골든벨	232
통일과 인문학	223
통일관	218, 219
통일교육과정	203
통일교육주간	201
통일교육지원법	209
통일교육지침서	198
통일국악한마당	26
통일교육 협력체계	199
통일교육협의회	218
통일교육위원협의회	215
통일기획드라마	222
통일대박	14
통일대박론	15
통일디자인 Show	26
통일리더캠프	210
통일문화네트워크	29
통일문화음악축제	217
통일문화주간	29

통일미래 청사진	20
통일미래체험관	230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254
통일법제추진위원회	254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210
통일아카데미	214
통일정책최고위과정	204
통일준비 구상	14
통일준비위원회	16
통일준비 클러스터	180
통일포럼	214
통통시스템	100
To be one 콘서트	26



파주평화발전소 미술제	26
판문점 갤러리	155, 156
판문점 연락채널	134
평화의 집	134



하나돌학교	167
하나의원	168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199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199
한독상공회의소	71
한독통일자문위원회	49
한독경제협력네트워크	50
한·러 공동성명	64
한·러 정상회담	63
한미연합훈련	31
한·미 정상회담	52
한반도국제포럼	46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3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227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34, 220

2015 | 통일백서

인쇄일 | 2015년 4월

발행일 | 2015년 4월

발행처 | 통일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전 화 | 02-2100-5777

팩 스 | 02-2100-5939

편집·제작 | **쉽** 한국장애인 e-work협회
(02-2272-0307)